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2

경 찰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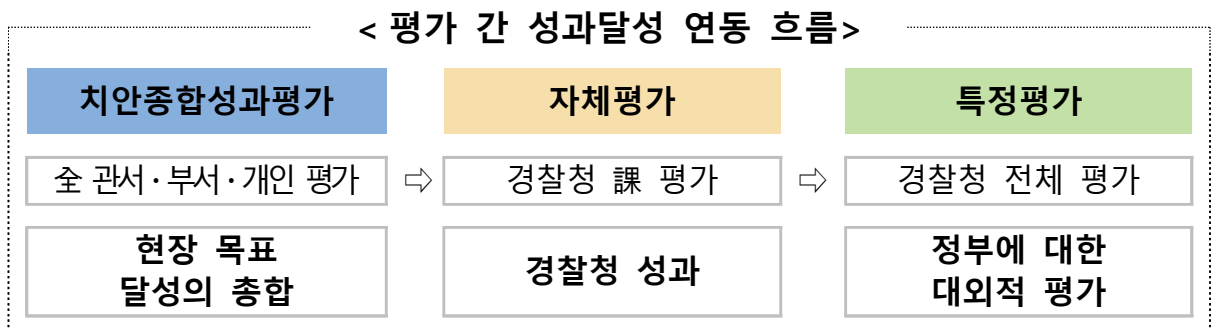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평가 간 연계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성과 창출 뒷받침

- 자체평가(성과관리시행계획 상 정책과제)를 매개로 특정평가(국정과제, 주요 정책과제) 및 치안종합성과평가가 긴밀히 연계되도록 설계

※ 49개 관리과제 전체를 국정과제 및 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



- 현장에서 이룩한 성과들이 경찰 전체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성과에도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조직개편 결과·소관 과제 수 등 반영, 분과 재편성

- 조직개편 결과와 소관 과제 수(유관도 평가 과제 포함) 등을 고려, 분과별 담당 기능 및 소속 위원 수를 조정, 분과별 과제 수의 균형성 확보

변경 前('23년)			변경 後('24년)		
분과명	기능	과제	분과명	기능	과제
1분과(5명)	기획 / 대변인 / 미래치안	9	1분과(4명)	기획 / 미래치안	8
2분과(4명)	경무 / 감사	8	2분과(5명)	경무 / 대변인 / 감사	9
3분과(5명)	경비 / 정보 / 외사 / 치안상황	11	3분과(4명)	경비 / 정보 / 국제협력	8
4분과(5명)	수사 / 형사 / 사이버	10	4분과(5명)	수사기획 / 수사	8
5분과(4명)	수사기획 / 과학수사 / 안보수사	7	5분과(4명)	형사 / 안보수사	7
6분과(4명)	생활안전 / 교통	7	6분과(5명)	범죄예방대응 / 생활안전교통	9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정책과제 ‘설계-추진-평가-환류’ 전 과정*에 자체평가위원 참여, 정책의 일관성 확보 및 합리적 평가 유도

* 정책과제 컨설팅(3월) →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4월) → 중간점검(7월) → 본평가(11월) → 추가평가('25.1월) 등 5회 실시

- (평가단 구성) 폭넓은 내·외부 평가단 구성, 평가의 공정성 확보
 - － (외부) 교수·법조인 등 27명으로 구성,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
 - － (내부) 치안정책 과제를 직접 추진하는 경찰청 계장급(56명)을 내부평가단으로 구성,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

※ 평가자 소속 국·관의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한 평가 유도

□ 평가방법

- (사전 컨설팅) 정책과제 수립 단계부터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해 성과지표의 대표성·적절성 등 확보, 정책 효과성 제고(3월)
- (중간점검) 정책과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하고, 부진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7월)
- (본 평가) 내·외부 평가단 구성, △성과지표 설계 적절성 △정책 과제 수행 노력 △목표 달성도 등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11월)
 - ※ 과제별 최종점수는 외부평가단 50% + 내부평가단 50%로 반영
 - － 과제별 평가점수는 평균(85)·표준편차(5) 보정, 평가자·평가단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고 평가 결과의 합리성 제고
- (추가평가) 우리청 정책과제 본평가(1~10월)와 자체평가 기간(1~12월)의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해 11~12월 추진실적 등을 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24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49개

※ 본청 각 과별 1개 과제 / TF·직접수사부서 등 10개 부서는 유관도 평가 진행

- (평가지표) 4개 항목·7개 지표로 구성

< '23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2. 정책 추진의 노력도 (25)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10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 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15
3. 목표 달성도 (60)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20
	3-2. 정책 효과성	20
	3-3. 향후 기대효과	5
	3-4.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5
4. 정책 홍보 (5)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 '24년 평가항목 >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 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2. 정책 추진의 노력도 (30)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및 추진계획 준수도	10
	2-2.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20
3. 목표 달성도 (55)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15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25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15
4. 정책 홍보 (5)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 평가항목 조정 사유 : ① 대내외 협업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 부응하여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비중 상향 ② 평가자·피평가자의 성과관리·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항목 통합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도 총 4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 우수 8개(15%), 다소 우수 7개(15%), 보통 15개(30%), 다소 미흡 7개(15%), 미흡 7개(15%), 부진 2개(5%)로 나타남

우수 이상
(11개, 20%)

- 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 민생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근절 및 수사역량 강화
- 선제적 예방활동 및 공동체 협업을 통한 안전한 일상 확보
-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 소년범죄·실종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 마약·조직폭력·외국인·피싱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보호 강화

미흡 이하
(9개, 20%)

- 현장의 법집행 기반 확충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
- 범죄·재난 등 공공안전 위험 대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 중심 감찰활동 전개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역량강화
- 조직 재정비 등 자치경찰제 내실화
- 책임안보 수사체계 강화 등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총 49개 관리과제 146개 성과지표 중 141개 달성(평균 달성률 96.5%)**

- 5개 지표는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전체 지표의 평균 달성률은 96.5%

구분 \ 연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5.3%	94.7%	96.5%
총 성과지표 개수	152	152	146
총 성과관리 과제수	52	52	49

- 성과목표치 미달 지표는 주로 △ 정성평가 요소인 만족도 분야
△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지표 등이 대부분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예산확보수준	54.3%	54.0%	99.4%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및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쏠 부처 지출구조 조정 및 사회복지·교육 분야 지출 확대가 목표 미달성 원인으로 분석됨 - 다만, 정부 기조에도 전년대비 5,373억원 (↑4.1%)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둠
경찰장비 만족도	90.6점	89.2점	98.5%	경찰장비 만족도는 최근 3년간 지속 상승세(84.5 → 86.6 → 88.8)인 점을 감안하여도 전적 목표치를 설정(90.6)하였으나 목표치 달성에 다소 미흡 다만, 경찰장비에 대한 내부 만족도가 지속 상승한 점을 감안할 필요
인사직무만족도	80.8점	72.9점	90%	조직원의 주관이 반영된 설문조사인 인사직무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80.3→72.9, 7.4점↓)하였으나, 경찰청 전체 직무만족도가 전년 대비 8.1점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 하락 국면인 상황을 감안 필요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6.2%	-1.1%	18%	△ 교통량·인구이동 지속 증가 △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수준의 △ 과거 사망자 감소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 사유로 인해 목표치 달성 미흡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23년 4.95명)는 이미 OECD 평균('21년 5.3명) 하회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	90.5점	89.6점	99%	목표치는 가이드라인상 '상' 기준으로 높게 설정하고 최근 3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소폭 미달한 것으로(99% 달성), * '21년 87.2 → '22년 88.1 → '23년 89.4 → '24년 89.6 '24년 효율적 지역경찰 운영 기반 조성(중심지역관서 근무체계개편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25년 이후 시간차를 두고 반영,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

[2] 주요성과

[조직적 민생범죄 엄정 대응]

< 악성사기범죄 >

- (주요성과) △ 10대 악성사기 42,211명 검거(6%↑) △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8,156억(159%↑) 보전 △ 보이스피싱 범죄 11,871명 검거(11%↑)
- (달성원인)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 적극 보전

< 마약범죄 >

- (주요성과) △ 전체 마약사범 13,512명 中 공급사범 5,405명 (40%) 검거 △ 클럽 주변 마약범죄 437명 검거(134%↑)
- (달성원인) 마약 제조유통공급 등 조직적 범죄 상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단속 및 형사활동 강화로 마약 확산 분위기 제압

< 도박범죄 >

- (주요성과) 도박개장·상습 도박행위자 등 4,584명 검거(272.7%↑), 156.8억원 몰수(218.1%↑) 사이버도박 △9,971명 검거 △297개 조직 및 581개 도박사이트 폐쇄
- (달성원인) 홀덤펍 등 신종 도박범죄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 등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검거 및 사이트 폐쇄 등 도박범죄 척결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소년범죄 예방]

< 사회적 약자 보호 >

- (주요성과) △가정폭력 임시조치 15.6%↑ △스토킹 잠정조치 15.8%↑ 증가 △민간경호 156명 지원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106명 등 조치
- (달성원인) 스톱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임시·잠정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함께, △민간경호 지원 △가해자 위치추적 등 실효적 보호조치로 보복범죄 방지

< 소년범죄 예방 >

- (주요성과) △범죄소년 7%↓ △범죄소년 재범률 2.7%↓ △마약범죄 69.4%↓ 감소
- (달성원인) SPO의 위기청소년 면담관리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도박·딥페이크 등 다변화되는 신종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활동 전개로 소년범죄 예방

[3] 개선·보완 사항

① 자치경찰제 내실화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관련 논의 진행('22.9~'23.2.)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
- 現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의 세부 실천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가 포함된 만큼, 중앙-지방부처 간 협의 활성화 필요

⇒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권고안 마련 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

②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역량강화

- 작년 신설 조직으로 정책추진에 있어 대내 협력에 주력한 결과, 외부기관·전문가 등 대외적 협력이 다소 미흡하여 객관성 부족
- 정책 수립 시 정책연구용역 등 전문가·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찰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객관적 방안 마련

⇒ **효과적인 지역경찰 조직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내외적 협력을 강화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평가지표 발굴 등 체계적 관리 필요**

③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 우리나라에 파견 중인 외국 경찰·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주한 협력관 데스크’ 적극 활용 필요, 재외국민 보호·해외도피사범 검거 노력 경주
- 주한 협력관 데스크 운영 효율화 방안(임무·역할 등)을 마련·시행하고, 주재관 등 해외파견자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지표 신설 검토

⇒ **외국 경찰과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해외파견자 증원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역량 강화**

(4) 평가결과 종합

연 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1	선제적 예방활동 및 공동체 협업을 통한 안전한 일상 확보	매우우수
2	범죄·재난 등 공공안녕 위험 대상 정보활동으로 국민안전에 기여	미흡
3	. 112중심 치안상황관리 역량 강화	다소우수
4	조직 재정비 등 자치경찰제 내실화	미흡
5	국민 눈높이에 맞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보호 강화	우수
6	소년범죄·실종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우수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체계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보통
8	국민 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수사인권 역량 강화	다소미흡
9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우수
10	홍악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다소우수
11	마약·조직폭력·외국인·피싱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우수
12	민생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근절 및 수사역량 강화	매우우수
13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우수
14	상황정보 역량 강화로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	우수
15	반부패·공공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부진
16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수사시스템 구축	다소우수
17	수사의 완결성·공정성 등 제고로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경찰 구현	다소우수
18	책임안보 수사체계 확립 등 안보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부진
19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미흡
20	대테러·재난관리 역량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보통
21	법치·책임 경호를 통해 국가안전 확보	보통
22	교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선제적·능동적 제도관리	보통
23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축	다소우수
24	정책추진 프로세스 관리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매우우수
25	문제해결형 지역경찰 활동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	보통
26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지역경찰 역량강화	미흡
27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보통
28	현장의 법집행 기반 확충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	미흡
29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다소미흡
30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경찰장비 보급·운영	보통

연 번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31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다소미흡
32	기본과 원칙 중심 감사 활동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	다소우수
33	기본과 원칙 구현을 위한 예방 중심 감찰활동 전개	미흡
3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다소미흡
35	국민이 신뢰하는 인권경찰 구현	다소미흡
36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우수
37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지원으로 현장활력 제고	보통
38	업무성과·역량 및 현장 중심의 인사운영 체제 구축	보통
39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신뢰·지지 기반 마련	보통
40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체계화	보통
41	치안산업 기반 마련으로 과학치안 실현	다소미흡
42	미래치안을 위한 경찰 정보화 기반 고도화	보통
43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보통
44	증거 중심 수사체제를 선도하는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	우수
45	과학수사 활동을 통한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편익 증진	다소우수
46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보통
47	경찰 국제교류·협력 내실화를 통한 해외치안 네트워크 강화	미흡
48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보통
49	사이버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사이버안보환경 조성	다소미흡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1	선제적 예방활동 및 공동체 협업을 통한 안전한 일상 확보	매우우수
---	---------------------------------	------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시적 순찰 강화) 안정적으로 정착된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 △ 취약요소 진단 △ 질서위반 단속 등 문제해결적·가시적 순찰 강화
 - ※ 2~12월 기동순찰대 일평균 204개소, 1,542명 배치, △수배자 검거 15,935건
△ 기초질서위반 단속 121,537건 △ 형사사건 처리 10,899건 등 업무수행
- － 관서별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능·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방범대책도 추진
 - ▶ (수능 이후 예방활동) 수험생 변화가 방문 등 인파 밀집 및 유해환경 노출 등 대비, 기동순찰대·지역경찰 등을 활용해 변화가 등 다중밀집지역 위주 가시적 순찰 및 위기청소년 선도
 - ▶ (연말연시 특별방범) '24. 12. 16.(월) ~ '25. 1. 2.(목) 간 시도청별 자경위와 협업하여 맞춤형 치안활동 추진,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112신고 6.6%↓, 긴급신고0.1 7%↓ 성과
- (치안인프라 확충) 범죄예방진단팀(432명)을 활용해 취약장소 대상 방범시설·CPTED사업 등 개선하고, 범죄예방 관리구역 활성화도 추진
 - ▶ (CPTED사업) '24년 범죄예방진단 43,067건(월평균 3,836건) 실시, CPTED사업 1,477건 전년대비 12.6%↑, 방범시설 77,870개 3,423억원 전년대비 20.1%↑
 - ▶ (범죄예방 관리구역) 관리구역 실태분석 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관리구역의 적정성 재검토 △지역경찰 예방활동 강화 △CPTED사업 활성화 △관리방식 개선 등 추진(11월)
- －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 △경비업체 지도점검 등도 추진
 - ▶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9~10월 자율방범대 운영실태 점검, 점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협력 강화 △교육 내실화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지대 통폐합 등 추진
 - ▶ (자율방범대 관리시스템 개발) △단체·대원 현황 관리 △활동·교육실적 분석 등을 위한 자율방범대 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 준비
 - ▶ (베스트 자율방범대 등 선발) 하반기(7~10월) 지역별 우수 단체·대원을 선발하여 포상
 - ▶ (민간경비업체 지도점검) 9~10월 경비업체 대상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243건·과태료 1,092건 등 적발하고, 미흡사례 공유를 통해 재발방지 노력

- (협업치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치안문제 해결 노력
 - 관계부처 협업,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 (정신질환자) '23년 대비 △합동대응센터 5→9개소 △권역 응급의료센터 10→11개소 △24시간 정신응급 병상 115→149개소
 ▶ (주취자) '23년 대비 △응급의료센터 18→19개소 △해소센터 1→2개소
 - △교육부 등과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하반기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등 생활 주변 불법행위 관리
 - * 11. 11.(월)~29.(금) 농어촌 및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총 242건(302명, 구속1)을 단속하여 △PC 등 3,307대·현금 1.28억 원 압수 △범죄수익 환수 1.87억 원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43억 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28건
 - 범죄예방대상(10. 30.), 범죄예방 경진대회(11. 27.) 등을 통해 공동체 치안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국 벤치마킹 유도 등 협업 활성화 노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과제 추진 노력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나
 - △순찰 등 예방활동 성과 분석·평가체계 마련의 어려움 △주취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저조 △신종범죄 적극적 대응 등 일부 보완 필요
- 또한, 성과지표 4개 모두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각 지표 간 업무량·효과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변경·조정도 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현장 공감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문제해결적 순찰 관련 현장의 참여·수용도 확대를 위해 효과분석·내부 소통·제도 개선 등 추진
 - △기동순찰대·순찰활동 효과분석 체계 마련 △내부 교육 강화 및 간담회 개최 △근무제도 개선 등을 추진, 현장의 적극적 순찰 유도
- (공동체치안 활성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협업이 추진 중이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일부 미흡 과제들도 확인
 -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미흡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치안 모델을 발굴하고,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 등 법제화 노력

- (성과지표) 업무특성 상 예방활동 - 범죄·112신고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지표설계 어려움
- 지표 간 업무량을 토대로 가중치를 재설계하여 효율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예방활동 성과를 면밀히 추적하여 결과지표 개발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공동체치안 경진대회	11월	○ 범죄예방 경진대회 개최(11. 27.), 공동체치안 및 지역사회 경찰활동 우수관서 선발	정상추진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11월	○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10. 30.), 지역별 범죄예방 공이 큰 단체·기관 선정하여 포상	
○ 연말연시 특별방범대책	12월	○ '24. 12. 16.(월) ~ '25. 1. 2.(목), 범죄취약지역 가시적 순찰 등 연말연시 특별방범대책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지표 전반적으로 우수, 법제도 개선 및 첨단시스템 도입 등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관심·고민 필요 의견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마약 등 신종범죄 관리방안 △기동 순찰대·순찰제도 관련 조직 내외부 공감 노력 등 필요 의견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모두 정상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은 양호, △주취자 인프라 확충 △내부 구성원 협업 확대 △갈등조정 사례 등은 다소 부족 의견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성과지표 목표치는 모두 달성되었으나, 4개 성과지표의 목표량·효과성을 고려해 가중치 차등화 등 고려 필요 의견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량·정성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예방정책·범죄 감소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에 연구·분석 필요 의견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다각도로 적극적인 의견수렴 인정되나, 간담회 외에 보다 실효적인 노력도 확대될 필요 의견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홍보 노력 인정되나, 새로운 홍보방안 발굴도 필요 의견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 성과지표 가중치 보완	○ 업무량·중요도를 감안, 정책과제 수립 시 성과 지표 가중치 일부 조정('24. 2월)
	○ 현장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기동 순찰대 운영 및 순찰제도 마련	○ 지역사회 경찰활동 및 문제해결적 순찰 활성화 방안 마련('24. 4월)
	○ 공동체치안 미흡사례 보완	○ 주취자 대응방안 마련 및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 제정 추진(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지역안전) 시기·계기별 착안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의 방향성 제시, 재난·안전사고 예방·대응에 기여
 - － 「지역안전 자문단」을 지속하여 운영·활용함으로써 정보관의 안전 분야 전문성 향상 및 관계기관의 신속 조치 협조 견인
- (범죄철폐) 마약·사이버도박 등 국가수사본부 특별단속 대상 주요 범죄에 대한 첩보를 중점 수집하여 단속 효과 극대화
 - － 본청 데스크킹, 작성 방법 안내 등을 통해 무가치 첩보 최소화 노력, 범죄철폐 사건 배당률 지속 상승 ('23. 46.4% → '24. 47.6%)
- (준법활동) 정치 관여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정보수집·작성·배포, 부당한 민원·청탁 전달, 정보 누설 등 위법 정보활동 미발생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통령령*에 따라 목적 달성 이후 수집·작성한 정보를 폐기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증빙이 불가하거나 보안상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
 - － 이에, 그간 치안정보분석과는 정책자료 업무성과기술서 제출 시 양해를 구하고 별도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
- 외부 평가위원들은 대면 평가과정에서 증빙자료 미첨부 사유와 업무내용에 대한 구두 설명을 통해 업무 이해도가 제고됐으나
 - － 내부 평가위원들의 경우 ‘증빙자료 누락으로 업무성과기술서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평가 근거가 부족’하다며 평가 절하
- 보안상 이유로 언론보도 등을 통한 홍보활동에 소극적이었으며, 정보업무 특성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미흡하다는 평도 산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통령령에 따라 폐기되는 정보는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지만
 - － △워크숍·교육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우수사례 등 업무의 경우 ‘공문’, ‘폴넷 게시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노력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착안사항을 카드뉴스로 안내하고, 우수 사례는 경찰청 SNS·언론 등을 통해 노출하여 대·내외 적극 홍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우수 정보 수집 정보관 선발	매월	○ 11월 선발 완료 / 12월 대상자 선발 중	정상추진
○ 재난·안전사고 예방정보 착안사항 하달	매월	○ 11·12월 지역안전 착안사항 전파 완료	정상추진
○ 월간 주간 치안현안 작성	매월	○ 11·12월 정책 착안사항 전파 완료	정상추진
○ 우수 정보관 격려 간담회 개최	12월	○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장 근무 집중을 위해 본청 소집 교육 미실시	미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대면 컨설팅 과정에서 지표를 유연하게 수정한 점은 우수 ▶전체적으로 지표설계가 적절하나, 근거자료가 없는 점은 아쉬움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광역정보팀 신설 등 환경변화에도 정책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나, 워크숍 등은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우수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자문위원 운영, 지자체 협업 등 우수하나, 마찬가지로 관련 증빙자료 보완이 필요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재난·안전사고 우수사례 질적 향상 △준법제고 노력도의 경우 목표치 수준이 적극적이고 달성도도 유의미함(우수) ▶다만, 재난·안전정보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표의 경우 100점이 초과 가능한 지표임에도 100점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등 일부 지표가 목표 달성만을 위한 보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판단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선제적인 위험발굴을 통한 예방·대응 효과는 인정하나, 평가를 위해 보안상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공개가 필요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전국 시·도청 정보관리자와 실무자와의 소통 노력 준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정보업무 특성상 홍보활동에 제한이 있음을 이해함 ▶다만,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등 일부 분야에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노력이 부족해 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	○ 공개가능한 업무사안 증빙자료 첨부	○ 워크숍·화상회의·교육 등 계획 공문화(수시) ○ 폴넷 게시물(우수사례) 증빙자료 제출(수시)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홍보 강화	○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배포 및 우수사례 SNS 홍보(매 분기)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 **(추진 경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 '24. 7. 3. 시행, 이에 '24. 12. 13.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이하 '고시')를 제정하여 '25. 1. 1. 시행

※ 법 제16조 및 영 제10조~제15조에 112신고 공로자에게 적정한 포상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 **(예산 및 시도청 배정 기준 마련)** '25년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예산 5억 2,500만원 중 1/4분기에 2억 6천만원 배정, 필요시 추가 배정할 예정

▶ **(지급 기준)**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에 대하여 유형별 3단계(100·50·3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지급

- 스마트 112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기능개선

▶ **(긴급신고기관 연계·치안상황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기능 개선)** '16년에 구축된 치안상황시스템(긴급신고기관 간 연계시스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장비교체 및 기능개선으로 신속 정확한 상황전파체계 마련

- 최신 기술 구축·연계로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

▶ **(정밀위치탐색 시스템 실증)** 요구조자 구조시간 단축(4h 이상 → 1h 이내), 골든 타임 확보로 국민생명 구조 기여(90건) ⇒ '잃어버린 딸 13분만에 찾아' 실종자 수색 60배 더빠른 '정밀탐색기'(MBN 등 45건 보도)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순찰차에 캠을 설치하여 신고 출동 시 현장 영상 촬영, 상황실에 전송되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20년부터 시작하여 '24년도까지 259개 경찰서(순찰차 5,158대) 구축完

▶ **(통합관제상황판 구축)** 전국 경찰서(43署) 112치안종합상황실 노후 상황판을 최신 장비로 교체, '21년부터 시작하여 '24년도까지 88개 경찰서 구축完(매년 43署 예정)

- 112상황실 근무여건 개선 및 홍보활동 전개로 대내외 만족도 제고

▶ **(시도청 상황실 환경 개선)** 전남청 112상황실 전면 리모델링(△ 본관 3층→1층 이동 △ 통합상황판, 접수석 등 최신장비 교체)을 통해 112근무요원 업무 능률 향상

▶ **(상황실 근무여건 향상)** 제주청, 경기북부청 112근무요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112상황실 내 '심신안정실' 구축

▶ **(홍보활동 전개)** △ 제6회 112의 날 기념식 개최(바른 112신고 공모전, '소리로 보는 사람들' 전국 배포) △ 112신고 앱 홍보동영상 제작, 남대문서 전광판 활용 홍보활동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4년도 치안상황과는 정책과제(정성, 6개 세부항목) 및 성과지표(정량, 3개)를 설계하여 정상 추진

정책과제 (정성, 6개)	▶치안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 시도청 상황팀장 전종 및 112신고 분석·전파 등 상황관리 강화 ▶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제고 ▶ 최신 기술 구축·연계로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 ▶ 중요한 112신고에 집중하기 위한 업무기반 마련 ▶ 112접근성 개선 및 112홍보 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회복
성과지표 (정량, 3개)	▶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 112신고 전화신속대응도 ▶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범죄 및 재해·재난 등 112신고의 접수·지령·현장조치까지 쉼 과정에서 조치의 적정성이 반영된 성과지표를 설정, 목표 달성

구분	112신고 접수·지령		112신고 현장조치
지표	112긴급신고 신속처리도 목표 347초 달성 326초	112신고 전화신속대응도 목표 0.25초 달성 0.25초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목표 91.6점 달성 91.7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에 따라 '25년도 자체평가 정책 수립 시 정책과제·성과지표 등을 선정·관리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제67주년 '112의 날' 기념식	11월	○ 11.1. 경찰청 어울림마당, 경찰·소방 및 바른 112공모전 수상자 초청, 기념행사 실시	정상추진
○ 순찰차 캠 및 통합상황판 구축	12월	○ (캠) 41輦 441대 구축 (상황판) 43輦 구축	
○ 시도청 상황실 환경개선		○ (전남청) △ 본관 3층→1층 이동 △ 통합상황판, 접수석 등 최신장비 교체	
○ 치안상황시스템 장비 교체 등		○ 긴급신고기관 간 연계시스템, 치안상황관리 시스템) 장비교체 및 기능개선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의 대표성, 연계성이 확보되었고 지표가 적절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밀위치탐색 시스템 도입 등 노력도가 인정됩니다.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대로 정상 이행 완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도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112신고 후 현장도착하는데 골든타임(5분) 확보한 것은 큰 성과이며, 지역별/사고유형별 골든타임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해보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량적, 정성적 효과가 훌륭하며 기대효과 역시 잘 서술되었습니다.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112접근성 개선 및 신뢰도 회복에 관한 국민의 체감,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 검토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공모전, 112신고처리법 시행등 홍보노력 및 성과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에 따라 '25년도 자체평가 정책 수립 시 정책과제·성과지표 등을 선정·관리 필요	○ '25년도 자체평가 정책과제 수립 및 컨설팅을 통해 정책과제·성과지표 등 재설계('25.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자치경찰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 공식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찰 정책협의체(경찰청장-위원장협의회)」 구성, 제 1차 본회의 개최(4.25.)
- － 공식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 ‘자치경찰 정책협의체’ 규정 신설(12.31.)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1조(자치경찰 정책협의체) ①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자치경찰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쏙 자경위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에 경찰청 자치과장과 관련 기능 과장급이 참석, 중요 현안 및 시책 공유하는 실무적 협업 지속(총 5회)
 - ▶ △ 무인단속 장비 운영 예산 현황 △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 현황 및 확산 노력
 - ▶ △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범죄 엄정 대응 △ 국민 일상 교통 불편 해소 정책 추진
- 18개 자경위 순회 방문하여 「현장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해소(32회)
-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 실시 중으로, ‘자치경찰사무 우수시책’ 지표 3년 연속(’22~’24) 유지 中 ⇒ ’25년 지표 심의 결과 유지 확정
 - － 同 지표를 통해 자경위별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시책 발굴 유도
 - ※ 세종 : ‘시민이 뽑는 지역경찰 주민추천제 운영’ / 전남 : ‘섬 지역 맞춤형 치안 드론’ 등

[조직 재정비 등을 통한 안정적 자치경찰제 운영]

- (2기 출범 지원) 안내문(여성·인권전문가 포함 등) 공문 발송 및 인력풀 모집 절차 지원을 통해 1기 구성 시 미흡(여성·인권전문가 未 포함 각 4곳) 개선
 - ▶ 여성 비율 7.2% ▲ (1기 19.8%→2기 27%), 전국 시·도자경위 여성·인권전문가 포함(100%)
- (법령 해석) 「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질의 사항을 해석, 자경위 등에 안내(4회)함으로써 자경위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사무추진을 지원

[자치경찰 예산편성 지원 및 지역 R&D 활성화]

- 지자체 예산편성 시기(7~11月)에 맞춰, △정책자료·논거 제공 △전국 자경위 예산요구서(案) 검토 후 경찰청 의견 적극 개진(8~9月) 등 예산 편성 지원
 - － 특히, △전국 예산담당 워크숍(5.9.) △경찰청장 메시지(6.10.) △예산 편성 전략회의(6.19.) 등을 통해 어려움 청취·해소 및 실무역량 제고
-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취지에 따라 지역별 치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R&D 사업 추진('24년 10.4억)
 - － R&D 과제^{2개}를 선정하여 연구 중으로, 효과성 검증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
 - ▶ (대구) 자율 이착륙 드론스테이션과 드론을 활용한 안심귀가 경로길 안내 서비스
 - ▶ (제주) AI 기반 분석데이터 예측, 한라산 주변 도로 차량 진입 차단 서비스
 - － '25년 신규과제 예산 확보 시 효율적 연구 진행을 위해 관리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용역 진행(1억원)
 - ▶ △(광주) 보행자 중심의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전북) 청소년·여성안전 분야 치안문제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관련 논의 진행('22.9~'23.2.)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 － 이에 △경찰청-자경위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자치경찰 예산·교육 지원 등 現 일원화 체제를 강화하여 자치경찰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
 - － 다만,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정책 효과성 입증 등 보다 구체화된 정책성과를 요구하며 미흡 평가를 한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국정과제('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국회·학계 등 중심으로 이원화 시범실시 등 지속 요구 중이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지연
 - * (국정과제 111-5) “범정부 추진체제를 구성하여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제주·세종·강원) 후 성과분석·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시행”
 - －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 방문('24.1월^{제주}, 8월^{인천}) 진행, 권고안 마련 및 본회의 의결 여부는 미정
 - － 제도발전委 '권고안' 발표되면,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마련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자치경찰사무 유공자 선정 및 포상	11월	○ 우수 유공자(18명) 선정 및 포상(경찰청장 표창, 10.31.)	정상추진
○ 사무국장(자경위)이 참석하는 원탁회의 개최	연중	○ 실무적 협업을 위한 원탁회의 개최(11.7.) ※ 1.11., 3.4., 5.9., 6.13., 既 4회 실시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미흡	▶ 자치경찰권 강화와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있으나 자치경찰권 내실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적절한지 의문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정책협의체를 통한 협의 내용들이 구체적일 필요가 있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모든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 대내외 협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함, 다만 상당수가 협의, 자료제공, 질의, 검토 등에 그치는 점은 아쉬움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미흡	▶ 상대적으로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이 수월하여 설정한 목표는 무난히 달성함 ▶ 실적과 성과 달성도 지표는 다르기 때문에 향후 지표 재설정이 필요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은 정책효과성일 높을 것으로 예상 ▶ 자치경찰 이원화 관련 성과 제고 필요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책 추진을 위한 유효 적절한 대내외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아직 자치경찰제가 익숙하지 않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홍보 필요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	○ '관계기관(중앙-지방) 협의 활성화' 등 성과지표 관련 적정 목표치 설정 및 측정 항목 검토	○ '25년 경찰청 자체평가 계획 수립 시 컨설팅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성과지표 설정('25.3월)
	○ 국정과제('자치경찰권 강화') 관련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 정책목표 달성 지표 검토	○ 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 발표되면, 권고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가정폭력·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단계별 대응 및 Case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엄정 대응 분위기 조성
 - － 전년 대비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등 경찰단계 보호조치 16.6% 증가*
 - * △가정폭력 17.6% ↑ 77,873건→91,565건 △학대 13.2% ↑ 13,711건→15,523건 △스토킹 14.3% ↑ 13,265건→15,159건
- △마약 △장애인시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 시기·대상별 예방 활동, 전년 대비 성폭력 범죄(강간·강제추행) 5.5% 감소^{20,758건→19,608건}
- 고위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및 조속한 일상회복 위한 지원 고도화
 - － 전년 대비 민간경호 지원 사업 등 주요 안전조치 4.0% 증가*
 - * △민간경호 58.9% ↑ 90건→143건 △지능형 CCTV 9.9% ↑ 918건→1009건 △스마트워치 3.3% ↑ 15,646건→16,163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년 대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한 반면, 가정폭력·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대체로 증가 추세

구분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가정폭력	학대	스토킹	교제폭력
'23.1~11월	20,758	211,596	26,255	29,515	70,435
'24.1~11월	19,608	213,761	27,004	29,014	80,065
증감률(%)	5.5 ↓	1.0 ↑	2.9 ↑	1.7 ↓	13.7 ↑

- － 이는 관계성 범죄 대응강화*로 현장종결률 감소·신고 증가 효과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법·제도 보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112신고 접수·현장조치(종결) 단계에서 면밀 확인, 관계성 범죄로 접수·코드변경

-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사회적 이슈성·파급력이 강하고, 재범·강력범죄化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효적인 예방·보호 방안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시기·대상별 성범죄 예방 활동 강화 및 관계성 범죄 「단계별 대응 및 Case 관리」 지침 반복 강조 등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지속 고도화
-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신고 활성화 도모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APO 전문화를 위한 국내 교육과정·국외 위탁교육 실시	11월	○ 가정폭력, 학대 등 피해자보호 업무 담당 국내 전문위탁교육 시행(동국대, 80명) ○ 사회적 약자보호 역량 강화과정 국외 위탁교육 실시(美 샘휴스턴대, 10명)	정상추진
○ 강력 성범죄자 출소 대비 특별예방 표준 모델 마련	11월	○ 고위험 성범죄 전력자 관리방안 수립(12월)	정상추진
○ 하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활동	12월	○ 11~12월 하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 기간 운영	정상추진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용 자가진단 앱 정식 운영	12월	○ 8.26. 개발계약 체결 완료 ○ 12.17. 폴케어 모바일 앱 고도화 완료보고회 ※ '25년 상반기 중 정식 운영 예정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대표성 있는 정책과제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최근 마약 등 약물이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 모두 준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협업 우수하나, 제도 개선 혹은 갈등 조정 사례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4개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모두 달성하였으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율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는 추세치 이하이므로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사회적 이슈인 스토킹 관련 전자장치 부착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대폭 증액 우수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였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5	○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고도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 플랫폼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계약 체결 및 착수('25. 1분기)
		○ 관계성 범죄 통계관리 강화, 범죄예방활동 활용도 제고 - 現 통계 시스템을 개편, △재신고 통계관리 △보호조치 정보 실시간 연계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 피해자 보호 추진('25. 연중)
	○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일상확보」 홍보 영상 제작('25. 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제적 대응) 도박·딥페이크 등 신종 소년범죄에 선제적 대응,
△ 특별예방교육기간 운영 △ 정보 발령 등 피해 예방·확산 방지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마약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소년범죄 동향을 반영한 범죄예방교육 실시(총 19,460회, 328만명 대상)

※ △사이버도박(4~6월) △허위영상물(8~9월) 대상 집중예방 교육기간 운영

▶(신종유형 발생경보) 첩보수집 등을 통해 신종유형 범죄 발굴, 카드뉴스 제작·홍보

※ △대리입금 금지(5.2.) △인증번호 전송 요구(7.1.) △허위영상물 주의(8.28.) 등 3회 발령

- △前日 소년사건 전수 점검 △재범 고위험 청소년 면담·관리 강화
△ 맞춤형 선도조치 등으로 재범률 2.7%p 감소(25.7%→23.0%)

- (역량강화) △SPO 워크숍(2.27.) △경찰청-교육부 합동 워크숍(7.4~5.)
△ 지능형 CCTV 추적사업 설명회(8.1.) 등을 통해 정책 방향 안내

- SPO 대상 강의·면담기법 등 전문위탁 교육과정 운영 및 현장
경찰관들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핸드북·매뉴얼 제작·배포

▶(전문교육) 강의역량 향상과정(4회×40명 / 3~4월) △SPO 전문화 과정(4회×40명 / 7~8월)

▶(매뉴얼 제작) △SPO 핸드북(7.1.) △실종업무매뉴얼(9.27.) △비행소년업무매뉴얼(12.13.)

- (인프라 확충) 도박·마약 등 중독성 범죄 소년범 대상 △선도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확대* △신경정신의학회 협업, 치유선도프로그램 개발

*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중독예방센터 등 운영기관 80개소 신규 지정

- △「실종아동법」 개정(9.27 시행) △실종경보시스템 개선 △지문등
사전등록제도 외국어 홍보물 제작·배부 등 조기발견 체계 구축

▶(실종아동법 개정) △CCTV 영상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실종아동 위치확인에 필요한 정보 /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및 카드뉴스를 통한 홍보·교육 병행

▶(실종경보시스템 개선) 실종아동등 발생시 재난문자처럼 메시지 전송, 시민참여를 통한 실종자 조기 발견유도 / 전체 평균 발견 시간^(32.9시간) 보다 7.3배^(4.5시간) 신속 발견

▶(지문등사전등록제도 홍보)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외국어^{7개 언어} 홍보물 제작·배부(7.19.)

- (협업 강화) 유관기관·민간기업과 협업, 마약·도박·딥페이크 등 신종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홍보 활동으로 사회적 경각심 고취

▶ (RCS 공익 캠페인) SKT 협업, 학생·학부모 83만명 대상 △ 지문등사전등록(5월) △ 청소년도박(5월) △ 사이버폭력(6월) △ 마약(9월) △ 딥페이크(9월) 예방 공익문자 5회 전송
▶ (117 홍보) 크라운제과 협업 캔디류 신상품에 '안심등교 117' 문구 삽입 등 학교폭력 예방·홍보

- － 민간기업과 협업, △ 배회감지기 무상보급^① △ 장기실종아동 캠페인^② △ 아동안전시민상 개최^③ 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관심 환기

① 복지부-SK하이닉스 협약(7.5), 치매환자 배회감지기^{GPS 기반} 年 2,250대 무상 보급
② '인생네컷' 등 협업, 장기실종아동 특징이 담긴 사진을 제공하는 캠페인 진행(9.4~18)
③ BGF 협업, 아동안전 활동 유공자 포상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등 아동안전망 강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집중예방활동 및 선도제도 운영으로 마약 소년범 감소·재범률 하락 등 정책 효과성은 인정되나, 효과성·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 자료 필요
- 외부의 유관부처·민간기업과의 협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현장 의견 수렴은 다소 부족,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 체험형 예방교육(9월) △ 전문가 참여제(10월) △ 도박·마약 치유 선도프로그램(11월) 등 소년범죄 예방·선도제도 효과성 분석 추진
- － 연구용역을 통해 실종정책 추진현황·평가결과 연차보고서 작성(9월)
- △ 청소년경찰학교 담당자 워크숍(1월)·컨설팅(8월) △ SPO 워크숍(2월)·교육부 합동 워크숍(7월)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환류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수능·동계방학 중 청소년 선도·보호기간 운영	11월	○ '24년 수능시험 일정(11.14.)에 맞춰 추진 ※ 동계방학기간 선도·보호활동과 통합 계획 수립·시행	정상추진
○ 「실종업무매뉴얼」 개정·보급	11월	○ 형사과 협업, 「실종업무매뉴얼」 개정본 제작	정상추진
○ 「아동안전시민상」 시상식 개최	12월	○ BGF 협업, '24년 상반기(59명), 3분기(29명) 아동안전 부문 시상, 4분기 아동안전부문 대상자 선정 중 ※ 시민영웅부문은 대상자 없어 시상식 미개최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는 국정과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성과지표 역시 적절하게 구성되었습니다.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노력도가 인정되나,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노력 기술이 다소 미흡
2-2. 추진계획 준수도	98%	▶ 계획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하여 정상적으로 준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다양한 정부기관, 산업체와 협업하고 있고,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증액하는 등 매우 우수한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를 볼 수 있습니다.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이므로 목표치는 3년간 실적 평균값이 아닌 추세치 이상으로 목표치 설정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집중예방활동 및 경찰선도제도 운영으로 마약 범죄소년 감소·재범률 하락 등 정책 효과성 및 기대효과 인정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실종자 가족 간담회 개최 등 대내외 의견 수렴 및 환류 노력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인생네컷·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가 돋보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6	○ 소년범죄예방·선도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 체험형 예방교육(9월) △ 전문가 참여제(10월) △ 도박·마약 치유선도프로그램(11월)
	○ 현장 의견 수렴·환류를 위한 워크숍·컨설팅 개최 추진	○ △ 청소년경찰학교 담당자 워크숍(1월) 및 현장 컨설팅(8월) △ SPO 워크숍(2월) 및 교육부 합동 워크숍(7월) 개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첩·반복 관리) ▲ 3重 보고·점검체계 ▲ 신속·집중수사 등 기존 사건 대응시스템을 활용한 내실있는 관리로 재발·보복 방지
 - － 특히, 반복신고는 부서장을 중심으로 ▲ 수사 및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 피해자 지원 및 모니터링 등 종합적 대응
- (점검·교육) 매월 ▲ 현장 지도방문 ▲ 전국 사례공유 화상회의 등 현장 수사관들의 인식개선 및 수사활동 개선 노력
- (가해자 격리) 1회 범죄시에도 범행동기·신고이력·전과·피해 등 분석하여 보복범죄로 2차 피해 우려 시 구속영장 적극 신청
 - － 재범위험성만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도 적극 활용,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사전 차단
- (수사지휘) 경찰서 과·팀장 및 시도경찰청은 수사 검토 및 지휘 과정에서 ‘구속·유치’ 등 가해자 격리 필요성을 적극 검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적 우려가 큰 교제폭력 및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지속 엄정대응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교제폭력 범죄에 대하여 객관적 위험성을 기반으로 반복적인 처벌 불원이라도 적극적인 법률의율 및 피해자 보호로 강력범죄 방지
- 「성착취 범죄 집중검거 기간」 운영을 통해 신속한 범인 검거 및 대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장수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우수 여청수사관 선발	11월	○ 공약과제(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관련 우수 여청수사관 15명 선정 및 특별승진	정상추진
○ 성착취 목적 대화 사례집 제작	12월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 사례집」 1,000부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부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와 연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모든 세부과제를 정상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원, 아동학대 범죄 임시조치 신청율,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신청율의 목표치 설정 및 달성도가 적절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대응정책 효과성 확인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순 과정에서 해당과제 수행을 위한 국민 및 현장직원 의견수렴 노력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홍보 실행을 위한 노력 및 성과 확인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7	○ 교제폭력 엄정대응	○ 교제폭력 범죄 대응현황 지속 점검(연중)
	○ 성착취 범죄 집중검거기간 운영	○ 「성착취 범죄 집중검거 기간」 운영('24.3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선제적·주도적 수사분야 인권진단을 통한 수사상 인권 취약요소 진단·개선
 - － △관서별 자체진단 △시도청 교차진단 △본청 주관 권역별 진단 등 다방향 진단으로 수사인권 인식 개선 및 인권 취약요소 확인·개선

- ▶ (개선사항 발굴) 전국 경찰관서 수사인권진단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 83건 발굴, 현재까지 51건 개선 완료(61.4%)
- ▶ (우수사례 환류) 점검 중 발굴된 우수사례 173건 전국 공유, 적극적 벤치마킹 유도

- 예방 중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 수사서비스 향상
 - －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 수사감찰 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 현장점검·감찰정보 활동 등 예방기능 대폭 강화
 - ※ △수사부서 인사현황 △통합수사팀 운영 현황 △중간관리자 책임수사 여부 △신상정보 대상자 관리실태 △경찰 구제제도 변경 지침 이행 여부 등 이행실태 점검·확인
 - ※ 특히, 장기 미처리 요구요청 특별점검을 통한 요구요청 보유 건수 등 대폭 감소

구분	2023년	2024년
요구요청 보유건수	32,515건	26,840건(17.5% ↓)
장기 요구요청 보유건수	3,908건	2,090건(46.5% ↓)

- 무분별한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개선, 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
 - － 무분별한 수사관 기피신청과 민원회피성 기피신청 수용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관 기피신청 제도」 개선

- ▶ (현황) 최근 '5년간 기피신청 분석 결과, 막연한 공정성 의심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이 86%로 대다수 차지, 사건의 유불리에 따라 수사관교체 목적 제도 악용사례 등 확인
※ 수사관 기피신청 : '18년 2,425건 → '23년 5,618건(+3,193건 131.7% ↑)
- ▶ (개선) △접수·검토 단계 기피신청 수리·수용 여부 체크리스트 도입 △수사부서장 상담절차 신설, 기피신청 사유가 아닌 단순불친절 등 수사불만 사전해소
- ▶ (정책 효과성) '24년 기피신청은 5,238건으로 전년 동기간 5,618건 대비 380건 감소(6.8% ↓)
- ▶ (기대효과) △객관적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피신청 수용여부 결정, 단순 불만민원 접수 감소로 수사관 근무여건 개선 △수사의 지속성·완결성 확보로 책임수사 구현 도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내외 협업 성과 부족) '24년은 대내외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일부 성과는 거두었으나 눈에 띄는 우수한 성과는 드러나지 않음
 - ※ '24년 자체평가 최종결과시 평가위원 평가 내용
 - － '24년 수사감찰 업무가 추가되면서 현장점검 및 진단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협력 파트 성과가 다소 부족
- (정책홍보 저조) 대내적으로는 카드뉴스 제작, 안내서 배포 등 수사관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시인성도 높은 홍보전략을 추진하였으나
 - － 경찰관서 방문 민원인 등 대국민 대상 대외적 홍보정책이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 업무협업 추진) '25년 상반기부터 정책방향 및 목표설정을 위한 유관기관·시민단체 간담회 등 추진
 - － 추진과제 도출 및 유기적 협업을 통한 우수한 성과 창출 도모
- (대외 홍보 강화) 숏폼(폴링 등)을 활용한 대내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 수사절차 리플릿 △ 정책과제 홍보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대외적 홍보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유치장 면회 녹음시스템 운영	12월	○ 전국 유치장 운영관서 108개 중 57개 관서 시범운영 실시(11.4.)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사회적 무게감 있는 사건으로 국정관제 등과 연계하여 지표를 설정한 것은 적절하나, 잠정조치 신청을 등 실효성 고려됨 없이 양적 수치 위주의 세부항목이 다소 아쉬움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사회적 파급효과 큰 분야인 만큼, 다각도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기한 내 모두 완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 협업도 대비 도출한 성과가 추상적이거나 부족해보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전년 대비 10% 이상 목표치 및 3년치 평균 추세치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모든 성과에서 목표치 초과 달성하였으나 설문조사를 통해 역량강화를 평가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진단 점검 등을 통해 실제 장기요요청 사건이 줄어드는 등 인권취약요소 순환고리 차단, 국민편익 증대 마련, 제도 개선 등 책임수사 구현에 이바지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미흡	▶ 대내외 협력을 통해 일부 성과는 창출하였으나 간담회 등 이후 드러난 성과 미흡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단순 교육확대와 안내서 배포는 적극적 홍보로 보기 어려움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8	○ 상반기 내 성과가 확인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대내외 홍보 강화	○ 수사인권진단 상반기 내 추진('24.6월)
		○ 솜품 등 활용한 대내외 홍보 추진('24.6월)

(1)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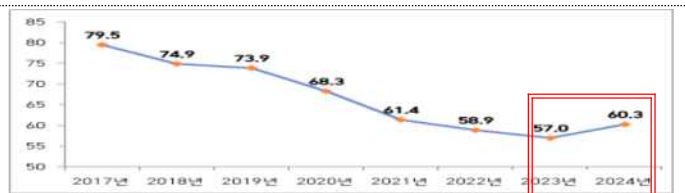
□ 주요성과

-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불법사금융’ 등 각종 경제범죄 엄단
 - (검거성과) '24년 수사관 1인당 기획수사 검거인원은 15.8명으로 (총 79,089명), 전년 대비 12.1% 증가 ⇨ 목표치의 2.1%p 초과 달성
- ▶ (악성사기 단속) 조직적 신종사기를 포함한 10대 악성사기 분야별 단속 실시, '24년 59,355건·45,368명 검거(구속 3,540), 전년 대비 검거인원 7.3% 증가
 - ▶ (불법사금융 단속) 전담수사팀 지정하여 △악질적 채권추심 △대포폰·통장 유통 △개인정보 판매행위 중점 단속, 전년 대비 검거건수 41%, 검거인원 59% 증가
 -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총 550건·1,231명 검거, 부정수금액 1,232억 원 적발
- (검거율 제고) 사건병합 활성화 등 각종 대책시행으로 지속 하락 중이던 사기범죄 검거율 반등('23년 57.0% → '24년 60.3%)

【연도별 사기범죄 검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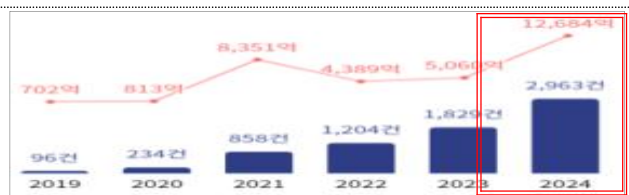
⇨ 사기범죄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등 검거활동 지속 촉진

* 총 9,296건(피해자 23,348명)을 196건으로 병합('24. 12. 20. 기준)



- '24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계 중심 적극적 범죄수익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1조2,684억원 보전(법원 인용결정 기준), 범행동기 박탈

⇨ (성과) 본청 전문체계 구축, 범죄 수익 보전건수 2,963건(전년대비 62% ↑)·보전금액 1조 2,684억 원(전년대비 151% ↑)



- ‘신고센터 고도화’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사전 방지체계 지속 추진
 - (신고·제보 상담) '24년 242,555건 상담하여 피해예방 및 추가피해 방지, 신고된 전화번호를 분석하여 31,463건 범행이용 번호 이용중지
 - (간편제보·긴급차단 시스템 개발) 통신3사·삼성전자 등과 협업,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버튼 추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범행이용 번호에 대한 신속 일시 정지 기능 개발 중

- (국제협력 강화)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 협의체 동참,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국가 간 공조 활성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평가결과) 경제범죄 근절 성과 우수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나, 범죄감소를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 존재
- (원인분석) 금융·통신 발달에 따라 △온라인·비대면 △대포물건 증가 △초국경 범죄 등 사기범죄의 지능화·고도화로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다중피해사기 발생이 지속 증가

- ① (선제적 차단조치 필요) 법적 근거 미흡 및 수사실익 부족 등으로 '비피해 신고'가 규제기관과 연계되지 않고 사장되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23.4.25. 기준 경찰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한 전화번호 중 3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용중지 前 신고이력 확인 결과, 최소 17회에서 최대 305회까지 신고

- ② (법제도상 한계)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한정되어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신·변종사기 피해자 보호가 곤란

※ '23년 총 사기범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은 8% 미만에 불과

- ③ (초국경 범죄) 사기범죄는 다른범죄에 비해 국외 도피 비율이 높으며, 최근 국외도피사범 中 사기범죄가 50% 이상으로 외국과 상호 협력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통합신고대응센터 지속 고도화)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AI모델 도입 등 기존 시스템 고도화
 -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AI모델 학습 도입 및 통신·금융자문관*을 파견, 원스톱으로 피싱 피해예방 조치(금융·통신 분야) 추진
- * 과기부·금융위 소속 사무관으로, 기관 간 협업 및 관련 법령·정책 자문 역할 수행
- (법제도 지속 정비)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각종 조직적 신종사기에 대한 통합대응 및 방지체계구축을 내용으로 한 「(가칭)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지속 추진
- (국제공조 강화) △국외 피의자 송환 △사기방지컨퍼런스 등 지속 협업
 - ※ '25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사기방지 협력 예산 1억 6천만원 신설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각 기획수사 단속 성과 분석 및 포상 실시	11월	○ '기획수사 단속활동' 평가 계획 하달(11.12.), 우수 시도청 및 우수 팀 포상 완료(12.12.)	정상추진
○ 자본시장·가상자산 관련 법률 수사자료 발간	11~12월	○ 자본시장·가상자산 범죄 수사자료집 발간 (12.31.)	정상추진
○ 금융·회계분야 금융감독원 하반기 위탁교육	12월	○ 수사관 57명 대상, 자본시장 불법행위 금융감독원 교육 완료(12.17.~18.)	정상추진
○ 연간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 우수사례 공유	12월	○ '24년 범죄수익 추적보전 우수사례 선정 완료, '25. 1월 중 사례집 발간 예정	지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12월	○ '24.12.18. '통합신고홈페이지' 및 '간편제보' 시스템 시범운영, '25. 2월 정식 운영	지연
○ '콜센터 솔루션 고도화' 사업 완료	12월	○ 챗봇·STT 등 주요 기능 개발 중 ※ 사업기간이 늘어나 '25. 2. 종료 예정	지연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경제범죄 중 주요범인 악성사기에 대한 예방, 엄단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 및 관련 성과지표 설정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 범죄수익 추적수사계 신설 등 경제범죄 엄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대로 진행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경찰청 내부 협업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외부 기관과도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전년 성과 대비 10% 상회하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및 성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특별단속, 수사체계 효율화, 범죄수익 보전 활성화 등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경제범죄 엄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특별단속은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할 필요가 있음.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주요 국정과제인만큼 대내외적 의견수렴도 양호하게 한 것으로 보여짐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홍보 노력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9	○ 적극적인 범죄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25.1월)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분석대응시스템 '지능형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25.12월)

(1) 평가 결과

□ 주요성과

- (강력범죄 검거) 주요 범죄 집중단속^{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치안수요 집중시기 특별형사활동^{연말연시·명절·휴가철 등} 추진으로 국민 불안 요인 선제적 제거 → 강력범죄 검거율 향상 등 안정적 치안 유지 기여

※ 흥기·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는 강력팀·형기대 등 공조, 총력대응('24. 2월, 강원 평창 부녀자 납치 - 여청·형사·형기대 등 / '24. 10월, 인천 여성 감금 - 여청·형사 등)

- ▶ 집중단속 결과기간 중 △강·절도 등 28,065명 검거(평시 대비 22.7%↑), 구속 843명
△생활주변폭력 33,150명 검거(평시 대비 29.2%↑), 구속 589명
- ▶ 전년 대비, 살인·강절도·폭력 검거율 2.3% ↑ ('23년 78.2% → '24년 80.5%<5년간 최고>)

- (형사기동대) 유흥가 등 우려지역 집중 탐문, 경찰서 발생사건 추적 공조^{살인·납치·흥기범죄 등} 및 중요사건 전담수사 등 국민 위협 범죄에 적극 투입 → 치안 불안요인 제거, 조직·광역화 범죄 대응력 제고

※ 마약·조폭·외국인범죄·홀덤펍 등 각종 조직적 범죄, 중대재해 안전사고 등 전담수사

- ▶ (기존) 강수대, 강력·조직범죄 → (개선) 형기대, 강력·조직범죄 및 신종·지능범죄 수사(수사 건수 +270%), 첩보수집, 중요사건 추적 공조, 피싱·조폭·안전사고 등 전담 등 역할 확장
- ▶ 경찰서 사건 9,410건 이관 및 794건 추적 공조(형사인력 10명 미만 2·3급지에서 긍정적 효과) 등 범죄대응력 ↑, 조직성·광역화 범죄에 적극 대응 → 다각적 활동으로 긍정적 성과 확인 중

- (회복적 형사활동) 안전조치 4,930건, 피해품 회수 72,770건^{약 828억원}, 초범·생계형 경미사범 7,434명 즉심 회부 → 공동체 복귀, 재범 방지

※ (안전조치) 스마트워치 지급·112긴급출동대상 등록·주거지 순찰 강화·임시숙소 제공 등 (즉결심판) 초범 및 생계형 경미사범 등의 경우 심사위원회 거쳐 즉심 회부, 전과자 양산 방지

- (상습 음주운전 근절대책) 재범 차단을 위한 '상습 음주사범 차량 압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선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압수요건 분석 하여 제시·강조^{평가제도 연계} → 차량압수 대폭 증가^{110%}, 음주 교통사고 감소

- ▶ (차량압수 요건) △음주사망사고 △5년간 2회 음주전력자 + 중상해 사고 △5년간 3회 이상 음주전력자 △기타 재범우려 사안 (평가제도 연계) 특승·승급·우수팀 평가, 성과평가 등
- ▶ '24년 차량압수 110%↑(173대 → 365대), 위험운전치사상 16.4%↓(3,349건 → 2,801건)

-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회복) 관계기관^{금감원·보험협회 등} 협업, 피해자에게 제도 안내-신청-불이익 회복 조치하는 정책 시행 → 피해자 연간 1만 4천여명, 보험금 59억원 추산가 직접 확인·입증해야 하는 불편 해소
- ※ (피해자 구제) 행정처분 면제, 증가한 보험료 반환 등 (홍보) 티맵 안내·홍보영상 송출 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회복적 활동)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회복적 활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확인 <본평가時>
- (의견수렴) 관계부처·수요자로부터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를 실시해 왔으나, 보다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및 환류 필요 <본평가時>
- (정책 홍보) 보도자료 배포 외 SNS 홍보·언론매체 등과 연계한 리얼리티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방식 추진 제언 <본평가時>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회복적 활동 강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피해품 안전 조치·지원을 내실화하고, 사회보장제도^{취약계층 생계형 범죄·치료기관 주취범죄·정신질환자 등} 등 연계하여 재범 방지 및 공동제 복귀 유도
 - ※ 범행동기·행위 태양·재범 가능성 등 면밀히 검토, 형사 사법제재 필요성이 큰 경우는 엄중 사법처리 ↔ 피해자 동의·회복·피해 경미 등 고려하여 즉결심판 회부 및 사회보장제도 연계
 - ※ 주취범죄·도박 등 중독성 범죄는 치료·상담기관 연계, 정신질환자는 응급·행정입원 조치
- (의견수렴 확대) 정책 추진 시 쏠 경찰관서 대상 의견수렴^{연령·기관·기능별}, 관계기관 간담회 및 일반 시민·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추진
- (홍보 다각화) 경찰청 SNS 등 연계, 주요 정책·검거 사례·범죄 예방 계도 등 홍보 / 정책추진 시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 병행
 - ※ (SNS) 형사기동대 운영, 강·절도 검거 및 장기실종자 발견 사례, 각종 피해자 지원제도 등 (기타) 쇼핑몰·상가·대학교·번화가, 대중교통·엘리베이터, 카드뉴스·인터넷 알림창 등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형사기동대, 강·절도 및 악성 폭력, 주요 교통범죄 평가·포상	11월	○ 「강력범죄수사와 특별승급 선발 관련 안내(11.5.)」 하달 ○ 「특별승급 추천 대상자 통보(12.11.)」	정상추진
○ 연말연시 특별형사활동 실시	12월	○ 「연말연시 형사 활동 강화 계획(12.11.)」 하달 및 추진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필수 불가결한 지표로, 대면컨설팅 결과 수렴 후 피해 회복활동까지 반영한 노력이 엿보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형기대 첩보수집 강화 등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인정, 법령·예산 확보 등 제도개선 내용 기술도 필요해 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일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모두 준수하였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형사업무 특성상 범정부 특별대책 일환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많으며, 업무추진의 노력과 대내외 협업도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목표치의 상향 및 달성 노력이 인정되며, 성과달성도를 고려하여 점수 부여 / 목표치 설정에 대한 고민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강절도 집중단속 관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중요, 회복적 활동 내용을 더욱 보강할 필요 가 있음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환류 노력이 돋보이며, 의견수렴 도출 성과가 우수함 ▶ 정책과제와 유관성이 높은 부서 등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 모색, 정책환류 노력이 필요해 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성실히 정책홍보를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가 돋보임 ▶ 다만, 보도자료 배포 이외 SNS 홍보, 언론매체 출연 등 리얼리티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방식 검토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 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0	○ 회복적 활동 강화	○ 상반기 강·절도, 생활주변 폭력 등 단속 시 회복적 형사활동 강화방안 반영·강조 ('25. 4월)
		○ 안전조치, 사회보장제도·치료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 추진 현황 관리 (지속)
	○ 의견수렴 확대	○ 흥기 강력범죄 대응 관련 법 개정(흥기소지 등)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25. 5월)
		○ 침입범죄강·절도, 주거침입 등 등 집중신고·수사 기간 운영 관련 현장 간담회 추진 ('25. 6월)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 형사기동대 주요 활동 관련 SNS 홍보 협의 및 추진 ('25. 7월)
		○ 집중수사기간 운영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마련 및 추진 ('25. 7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과지표 4개 모두 달성

- (마약범죄) '24년 마약류 범죄 사범 총 13,512명 검거

⇒ 목표치 10,407명 대비 29.8% 초과, 목표치 달성

- 「제조-밀수-공급-투약」의 마약 유통흐름 차단에 수사력 집중, 클럽 등 유흥가 일대 특별대책 시행(9~12월, 4개월간)
- 마약수사 전담인력(380명) 중심 전문 수사체제 구축, 기법·장비 고도화 예산 증액 등 수사 인프라 확충
-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 규모 확대, 한국 경찰청 주도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등 국내외 공조체제 강화

- (조직폭력 범죄) '24년 조직폭력 범죄 사범 1,932명 검거

⇒ 목표치 1,813명 대비 6.5% 초과, 목표치 달성

- 범죄조직의 민생침해 범죄 개입 차단을 위해 '24년 신설된 형사기동대 중심 신종 조직폭력 범죄 중심 특별단속 실시
- 조폭 콘텐츠 유튜버 집중 모니터링, 조직원 경조사 등 모임시 우발상황에 선제적 대응 위한 첩보수집 등 예방적 형사활동 강화

- (외국인 범죄) '24년 국제범죄 사범 1,999명 검거

⇒ 목표치 1,989명 대비 0.5% 초과, 목표치 달성

- 외국인 범죄 세력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류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주요 강폭력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등 국제범죄 집중수사
- 인터폴 공조 국내 도피 적색수배 외국인 검거, 법무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체류자 정부 합동단속 등 종합대응

- (피싱 범죄) '24년 피싱범죄 28,800건 발생

⇒ **목표치 대비 25.1% 감소, 발생건수 감소 목표치 달성**

- △국내외 범죄조직 검거 △피싱 범행수단 차단 △대국민 예방·홍보 △피해구제·회복 유관기관 협업, 제도개선·기술개발 등 전방위 대응
- 범정부 TF 등 금융·통신사와 협업체계 기반, 정보공유·차단기술 고도화 등 「검거-차단-예방-구제」 대응체계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
- 국회에서 위장수사 관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위장수사 외부 자문단 발족(11. 5.)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위장수사 외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마련한 위장수사 제도에 대해 학술세미나 개최,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 등 제도 도입 지속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피싱범죄 수사활동 평가, 포상	11월	○ '24년 하반기 피싱범죄 수사활동 공약과제 평가 관련 안내	완료
○ 금융회사 협업, 피싱범죄 대응 유공자 감사장 등 포상 실시	11~12월	○ 경찰청-KB국민은행 협업, 제2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 개최 계획 ○ 경찰청-신한금융그룹 협업, 제4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보도자료	완료
○ 마약·조직·국제범죄 등 주요 단속 결과 성과·동향 분석 및 포상	11~12월	○ '24년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결과 보고 ○ '24년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보고 ○ '24년 하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 결과 보고	완료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에 해당하는 4개 지표 설정, 마약·조폭·외국인 범죄는 검거인원 통계이나 피싱 범죄는 예방·홍보·수단차단·피해회복 등 경찰의 다양한 활동을 지표에 반영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조폭, 외국인, 피싱 범죄'로 국민 불안감 증대에 따라 각 범죄별로 타겟형 단속 실시 등 근본적인 맞춤형 대책 추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정책과제 추진 일정 기한 내에 모두 완료, 최근 범죄 동향에 맞춰 마약·조폭·외국인·피싱범죄 모두 최근 범죄 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집중단속을 전개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범정부 협업기구 등 국내외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통신사 등 민간기업까지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국제 공조 협의체 구성 및 입법공백 보완 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마약(29.8% 초과), △조폭(6.5% 초과), △외국인범죄(0.5% 초과), △피싱범죄(25.1% 감소) 등 4개 정책과제 지표 모두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성과지표 관리에만 집중하는 편면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 마약·조폭·외국인·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 실행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정책 성과 창출 ▶ 정부기관 협업 등을 통한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여 드러나는 지표도 우수 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사역량 강화, 수사환경 개선, 제도 개선 추진, 범죄예방 활동 등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통한 범죄 감소 효과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부 각 부처, 경찰청 내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범죄 관련 공조 회의 등 정책과제 수행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온·오프라인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명 및 신고활성화 유도, 사회이목이 집중된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선제적 수사 공보를 통해 추측성 보도 방지 및 국민 알권리 보장 등 정책홍보 실행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1	○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 필요	○ 위장수사 외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위장수사 제도 도입 지속 추진(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사 활동 강화>** 민생침해 사이버범죄 대상 집중단속 강력 전개, 안전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민의 체감 치안만족도 제고
 - － (사이버사기^{국정·핵심}) '24년 118,109건 검거(전년대비 19.4%↑), 통합수사팀 시행 이후에도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총력 대응 성공

▲본청 주도로 신속한 사건병합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 다수피해자·다액피해금 사건 집중수사 ▲해외 도피사범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몰수보전 조치 및 피해금 환수 등
 - － (사이버도박^{대통령지시·핵심}) '24년 4,106건 검거(전년대비 27.3%↑), 사이버도박 카르텔 발본색원 및 치유연계 강화로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이버수사심의관 주관 「사이버도박 근절 TF」 운영 ▲운영자는 물론, 프로그램 개발·2차 광고도 적극 검거 ▲청소년 도박행위자도 예외없이 특정하고 상담·치유 연계
 - － (사이버성폭력^{국정}) '24년 2,554건 검거(전년대비 47.0%↑) 및 삭제차단 요청 54,007건(131.0%↑) 수행,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실현 및 피해 확산 방지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內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전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별도 집중단속 시행('24.8.28.~'25.3.31.)
 - － (홍악범죄 예고글) '24년 56건 검거(5명 구속),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추가 게시행위 억제 및 국민 불안감 해소
- **<국제 공조 확대>** 쏘 수사 경찰의 국제공조를 총괄 담당,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자료 확보체계를 구축하여 일선 수사관 만족도 제고
 - － (시스템 개편) 경찰의 국제공조 창구를 '사이버국제공조 포털시스템'으로 일원화('24.3월), 죄종·유형·창구 불문 단일플랫폼에서 관리해 효율성 확보

※ △국제 공조 연관분석 기능 고도화 △자동번역 AI서버 탑재 등 동시 추진
 - － (네트워크 확대) △텔레그램社 공조 개시('24.10월) △유로폴 협력관 파견('24.6월) △佛 경찰청('24.8월)·美 FBI('24.8월) 사이버부서 MOU 개정 등
 - － (국제규범 참여) △부다페스트 협약 총회('24.6월)·UN 사이버범죄 협약 임시위원회('24.2월, 8월)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여, 국제 사이버 규범 확립에 기여
 - － (국제회의 개최) 「2024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24.8월, 대통령 참석)로 주요 공조국과 우호적 관계 형성 및 사건 관련 실질적 공조 논의 가속화

※ 해외 법집행기관, 해외 IT 기업, 국내 부처·기업 등 926명(해외 283명) 현장 참석

- (디지털성범죄 국제대응) 성범죄물의 전세계적 유포 차단을 위해 ‘국제 대응플랫폼’ 구축(’24.5월), 6개국 참여중(네팔·대만·인니·싱가폴·태국·미국)
- <제도개선 등> △국민 편의 증진 및 수사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운영 △수사관 교육·법령개선·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
- (온라인 신고접수처리) ’24년 신고·상담·제보 229,409건 접수·처리 (월평균 19,117건, 3교대), 사이버범죄 대량발생 등 긴급상황에 24/7 대비
- (딥페이크 탐지 S/W) 정부 최초로 개발(’24.2월)한 ‘딥페이크 탐지 S/W’ 활용, ’24년 중 286건 탐지하여 관련 수사에 즉시 활용
- (수사역량 강화) △성균관대(디지털포렌식학과)와 제13기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20명, 5억원) △민간위탁 전문교육과정 운영(200명, 6억원) △가상자산 추적 자격증 과정(200명) 등 현장지향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 (위장수사 법령개정)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제도 신설(청소년성보호법, ’24.10월 개정, ’25.4월 시행 예정), 대상범죄 확대 및 신분위장수사 행위 태양 추가(성폭력처벌법, ’24.12월 개정, ’25.6월 시행 예정) 등 수사 활동 기반 마련
- (국민참여형 예방활동) △사이버범죄 예방강사(105명) 활용, 411,925명 대상 2,363회 대국민 예방교육 실시 △명예 사이버경찰 ‘누리캡스’(769명) 운용, 온라인 유해정보 186,224건 신고·삭제·차단하여 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 전건접수 제도 시행 및 지능화된 신종수법 유행으로 사이버사기 발생건수가 32.6% 증가
 - ※ 사이버사기 발생건수 : (’23) 172,246건 → (’24) 228,434건 /경제 활동의 디지털·비대면화는 향후로도 지속될 전망으로 발생 증가는 필연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병합·집중수사) 계좌·IP 등 수집단서를 바탕으로 사건을 병합하고 대규모 사건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수사하며 대응력 제고
 - ※ 단속 동력 확보를 위해 일선과 적극적 의견 교류 및 우수 사례 수시 포상
- (예방활동 강화) 중고거래 플랫폼·이동통신사·금융기관 등과 협업 및 언론·SNS 등을 활용한 신종수법 적극 홍보로 피해 발생을 예방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여부
○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분석·평가	11월	○국수본 통합 평가계획 수립·제출 및 평가실시	정상추진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직무 교육	12월	○「위장수사 기법교육 워크숍」 실시(12.5.)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가 사이버범죄수사와 연계성이 높으며 성과지표가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사이버사기, 사이버도박, 사이버성폭력, 딥페이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하여 전년 대비 검거사범이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 예방활동을 확대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추진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딥페이크성범죄 근절 범정부대응팀,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 범정부 대응팀, 게임사, 유로폴 등 다양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제도 개선 등 성과 달성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목표 설정이 적극적이며, 성과달성도가 높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집중단속과 면밀한 수사지휘 등으로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증가하였고, 위장수사와 해외 공조작전을 활발히 하는 등 정책 효과성이 높음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의견수렴은 우수하나 환류성과는 다소 모호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범죄를 고려할 때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2	○ 성과목표치 달성도의 적극성이 다소 아쉽다는 지적	○ '25년 정책과제 성과지표 설계 시 적극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의견 수렴 및 환류 노력 필요	○ 자문단 등 활용, 주기적 대내외 의견 수렴 및 현장수사관과의 소통기회 추가 확보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합법집회는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대응, 전년대비 집회가 10.4% 증가하였으나 불법·폭력시위는 22.2% 감소('23년 36건 → '24년 28건)
-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집회 소음기준을 5 또는 10dB 강화, 소음 측정건수 11.3%, 유지·중지명령 등 조치건수 13.3% 증가
- 신형방패*(2,300개), 접이식(612개)·이동형(16대)·차량형(4대) 안전펜스 등 장비를 확보, 기동대원 신체보호 및 효율적 경력운용을 도모
- * 기존 방패와 비교하여 경량화(1.05kg), 이중구조·탄력적 소재로 충격량 감소(40.3%)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 평가지표에서 배점기준 대비 90%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평가지표에서 일부 노력 필요 평가
 - ▶ (외부위원 A)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노력과 오보대응을 통한 현안 이슈 대응 노력 보강을 차후 보강 제시되어야 할 것임.
 - ▶ (내부위원 I) 경비 특성상 홍보 활동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보다 더 노력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정착 과제는 업무특성 상대·내외 홍보가 어려워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가 다소 낮게 평가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규모 인원 집결이 예상되는 주요집회·시위 개최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준법정착 및 인권·안전에 유의한 집회 개최를 유도
- 기동대의 수범사례, 재난복구 지원 등 활동사항을 SNS,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경비경찰 이미지 제고
- 본청 주관 점검단을 수시로 운영, 불편·건의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개선하고 내부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자체홍보도 강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신형방패 구매·보급	11월	○ 10.28.(월), 신형방패 2,300개 구매·보급 완료	정상 추진
○ 경찰부대 위해성 경찰장비(신형방패 등) 안전 교육·안전검사	12월	○ 10.25.(금)~11.8.(금), 137개 기동대 경찰장비 안전교육·검사 완료	정상 추진
○ 하반기 전국 경찰부대 집중훈련	12월	○ 9.2.(월)~10.18.(금) 139개 기동대 하반기 집중훈련 실시	정상 추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2월	○ 8.6.(화) 개정 및 시행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컨설팅을 통한 적절한 지표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 수행 노력과 장애요인 극복 노력이 우수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 지연 없이 정상적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협업을 통한 교육을 통해 폭력시위 감소 등 성과에 기여, 실무자료 공유 파일박스 활성화는 지식관리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증대 기여 인정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다양한 세부성과지표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치에서 성과달성이 잘 이루어졌다 사료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책수혜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장비보급 등 향후 효과가 기대됩니다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 의견수렴과 정책 환류도가 높아 보이며, 대외 여론조사와 여론수렴 등 의견수렴과 환류 노력이 돋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 등 정책 홍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3	○ 지속적으로 부서의 핵심성과를 측정, 전년 대비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성과 지표 구성	○ '25년 경비과 자체평가 성과지표는 전년 대비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외부위원 컨설팅 결과를 적극 반영('25.2월)
	○ 경비 특성상 홍보활동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보다 더 노력이 가능했음 것이라 생각합니다.	○ <대외> 주요집회 전 준법 집회 개최를 유도하는 보도자료 배포 <대내> 점검단 수시 운영으로 불편·건의사항을 개선하고 공고하는 등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금년은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본격화되며 요구사항 관철·정책 찬반 의사 표출 등을 위한 집회가 다수 개최^{88,823건}되는 등 치안부담 가중
 - 광역정보체계 출범에 따른 정보수집 출처 다각화·광역화로 예고정보 활동 활성화, 위협요인은 조기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신속 공유하는 한편,
 - ‘합법집회는 적극 보장, 불법에는 엄정대응’ 기조下에 관련 기능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범질서 확립·시민불편 최소화에 총력, 큰 변수없이 관리
- ※ 대화경찰을 집회시위 현장에 적극 배치(배치율 94.1%), 인권보호·안전확보에도 만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3개 모두 목표치 초과달성(평균 103.2%)하였으며, 위원 평가 총점(원점수) 94.4점을 획득하는 등 뚜렷한 미흡 사례는 없었음
- 다만, 대화경찰의 ‘업무 피로도 관리’ 및 ‘대외적 의견수렴 다각화·양적 확대’와 집회신고 단계에서의 ‘금지·제한통고 처분기준 및 안내 필요성’ 등 일부 위원의 의견에 상응한 노력의 경주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화경찰 업무 피로도 관리) ‘인력풀 조정’과 ‘전문기관 연계 심리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업무 피로도 등을 감경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화경찰 의견수렴 다각화) ‘대화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활동성과 추이를 확인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 향후 운영 개선에 반영
- (금지·제한통고 기준 안내) 일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집시법 上 ‘금지·제한통고’ 기준을 명확히 숙지토록 하고,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이를 충분히 안내(현장지도 등)하도록 조치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정보교육 협의체 회의	12월	○ '25년 정보교육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교육협의체 회의 계획(12.18.)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 및 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 연계성·대표성 있고, 지표설계도 적정 ▶ 컨설팅을 통한 적절한 지표설계가 이루어졌다 판단됨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대규모 집회시위 증가로 높은 치안부담 속에서 과제 수행을 위해 노력함 ▶ 치안부담이 따르는 상황임에도 선제적 정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책과제가 수행되었음.
2-1-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 정상적 준수되고 있음, 정보교육협의체회의 12월, 완료예정은 향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간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의 이행이 확인됨
2-2.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 연계 신원조사 업무 포털 구축 등 협업 성과 우수. 시도청 1대1 매칭 시스템과 데스크 제도는 적극 행정업무 개선에 도움 ▶ 대화경찰의 필요성이 강요되는 현실에서 직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후속조치 의뢰 결과를 확인하였음. 이후 대화경찰의 피로도 관리요소가 병행되기를 건의드립니다.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적극적인 상향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 ▶ 다양한 세부성과지표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치에서 성과달성이 잘 이루어졌다 사료됨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우수	▶ 불법시위에 대한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집회 금지·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기준제시와 집회신고자 혹은 집회신고 단체의 명확한 집회금지에 대한 안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드림 ▶ 공감받는 경찰활동으로 법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 상승이 기대됨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우수	▶ 국민여론조사를 기반하여 대화경찰의 필요성이 부각되듯 활용성과 효과성 나아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환류 등의 보완이 필수적인 만큼 대외적 의견수렴의 다각화와 양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림 ▶ 대내외 다양한 형태의 의견수렴 인정, 정책환류 또한 우수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법집행 의지 홍보로 원활한 법 집행 성과가 기대됨 ▶ 정보공개와 대언론 대시민 대외 홍보활동 노력과 대내적 노력도 인정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
14	○ 대화경찰의 피로도 관리요소 병행 필요	○ 인력풀 조정을 통해 업무부담 등 육체적 피로를 감경하고, '전문기관 연계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사전, 적극적인 집회 금지·제한 통고처분 기준제시 및 명확한 집회 금지 안내 필요	○ 현장 직원들이 집시법 상 '금지·제한'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고, 신고인에게도 이를 충분히 안내(현장지도 등)토록 관련 교육 추진
	○ 대화경찰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환류 등의 보완을 위해 대외적 의견수렴의 다각화·양적 확대 검토	○ '대화경찰 활동' 전반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활동성과 추이를 확인하고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향후 운영 개선 반영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부패범죄 엄정수사) △공직자 등 금품수수·직무범죄·부정청탁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범죄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①
- － 대상의 신분(정치인·고위공직자 등), 사건의 민감성 등 감안, 진행 단계별 △법리검토 △절차준수 △관할 조정 등 전문적 대응을 통한 지도·관리^②
- － 公·私 불문 청렴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 주요 현안 토대 부패범죄 선정, 특별단속 실시 및 시도청 중심 수사를 통한 엄정대응^③

① (공직자 부패사범 송치인원) '22년 293명 ⇨ '23년 452명 ⇨ '24년 560명^(잠정)
(공직자 부패사범 검거율) '22년 11.9% ⇨ '23년 17.7% ⇨ '24년 19.5%^(잠정)

② (주요 수사지휘 사례) △기관장 '청부 민원' 의혹 수사 사건보고 27회, 법리검토 7회 등
△경찰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수사 사건보고 17, 법리검토 2회, 서면지휘 2회 등 다수

③ 24년 특별단속 성과

- ▶ 건록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24. 4. 17. ~ 10. 31.) ⇨ 총 1,096명 단속, 701명 송치
- ▶ 공직자 부패비리 (24. 9. 2. ~ 現) ⇨ 총 1,197명 단속, 382명 송치<'24. 12월 기준>
- ▶ 불법 리베이트 (24. 9. 2. ~ 現) ⇨ 총 934명 단속, 562명 송치<'24. 12월 기준>

◇ 연간 약 6천 건 보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지도·관리를 통해 수사 완결성 제고·국수본 책임수사 체계 확립, 공직·민간 사회 청렴 분위기 조성

- (공명선거 확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관련, '5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 대상으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공명선거 뒷받침

*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

- － 선거 일정에 따라 △수사전담팀 편성^{D-120} △상황실 운영^{D-63} △집중 수사기간^{D+4개월} 등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 선거범죄 단기 공소 시효 고려 도과(10. 10.) 고려하여 심사·지휘 총력 대응(총 2,203건)

❖ 제21대 총선 1,256건·2,241명 ⇒ 제22대 총선 2,203건 (75.3%↑)·4,076명 (81.9%↑)

❖ 단기 공소시효(10. 10.限)가 적용되는 선거사건 모두 시효 內 종결

- － 특히, 검사 선거사건 수사개시범위 축소에 따라, 선거사건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총력 대응을 통해 쏠 사건 면밀히 지도·관리

◇ 선거사범 집중수사기간 운영, 딥페이크 이용 등 신종범죄 대응, 검·경 수사 협력·엄정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內 전건 처리, 공명선거 뒷받침

- (집단 불법행위 엄정 대응) △ 불법집회·시위(주동자), 관공서 무단 진입·점거, 폭력 △ 복귀 전공의 명단 게시·조리돌림 등 의사집단 행동 관련 불법행위 각종 집단불법행위 엄정 대응

① (집회시위사범 검거인원) '22년 765명 ⇨ '23년 653명 ⇨ '24년 701명(잠정)

※ 24년도 집회·시위사범 701명 검거 과정에 있어 법 절차 준수, 수사 사항 등 총괄 지휘·관리

②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82회) 참석·대응, 복지부 등 기관 협력을 통한 엄정 수사

- 집회·시위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를 일관되게 수행하여 법질서 확립, 국민의 의사형성·표현의 자유 뒷받침
- 특히, 복귀 전공의 대상 인터넷 조리돌림 등 불법행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배당하여 엄정 수사 중 (45명 송치^{7속2}), 명단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하는 등 불법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

◇ 불법에 대한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안전 보장, 의사 집단행동 엄정 수사를 통한 불법행위 확산 차단 및 정부 정책 뒷받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부패·선거 및 각종 집단행동 사건은 정당·이익단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부실수사는 곧 경찰수사 및 정부에 대한 신뢰문제로 직결
 - 이에, 접수부터 종결시까지 1건마다 책임있는 수사지휘, 정확한 결과 도출을 통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신뢰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 산술적으로 경감 이하 10명이 매일 22.6건의 사건을 보고·지휘중(6,000건 / 265일^{'24년 평일})/
 -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법률·쟁점을 검토·지휘
- 한편, 각종 언론 대응 및 경비·선거관련 상황부서라는 업무 특성 상, 새벽출근 및 주말·휴일 근무가 빈번한 국수본 內 대표 격무부서임
 - 일부 위원들께서 '성과의 구체성 미흡',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셨으나, 성과를 구체화·도식화하는데 있어 여타 기획·민생부서 대비 한계가 분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부패·공공범죄에 대한 검거 성과 외 중요 사건 지휘·관리 등 '책임 수사역량 강화' 관련 부서 기본 업무를 성과 지표에 활용하고 정 성적 요소를 수치화·도식화하는 등 업무 성과 지표 개선 및 반영
- 반부패·공공수사 대내외 정책 효과성 관련, 보도자료 배포 외 MOU·실무 협의회 운영 등 반부패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및 정책 홍보수단 강구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OECD 뇌물방지 기술실사회의 참석	11월	○ 반부패 분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진행경과 및 부패범죄 대응 체계 논의	정상추진
○ 집회·시위사범 등 불법행위 수사 유공자 포상	12월	○ △집단 불법행위 △반부패 분야 수사 관련 특별승급, 표창 수여 등 유공자 포상	정상추진
○ 「불법 리베이트, 「공직자 부패비리」 2차 특별단속	12월	○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미흡	▶ 적절한 지표 설정을 위해 노력한 점 인정됨. 다만 일부 위원은 지표와 정책과제 연관성 설명 부족 의견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공직자 리베이트, 선거사범 단속 등 정책수행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위원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 필요 의견
2-1-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완료한 것으로 평가
2-2 업무과정의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미흡	▶ 적극행정 노고 및 협업에 대한 사항이 보임. 다만, 협업이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보통	▶ 목표치 모두 달성함. 다만, 초과 달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보통	▶ 선거사범, 의사집단행동 등 대응한 점 높이 평가함. 다만, 범죄 특성상 국민 신뢰와 좀 더 관련된 범죄에 대한 효과성 보여줄 필요 있다는 의견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	미흡	▶ 대내외 의견 수렴 활발하게 하였음. 다만 다양한 의견 수렴에 비해 환류성과 모호하다는 의견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특별단속 시행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성과 인정됨. 다만, 일부 위원은 보도자료 배포 외 홍보수단 노력 필요 의견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5	○ 자체평가 정량지표 개선 ○ 추진계획 및 정책환류 등 평가지표 별 구체적인 내용 반영 필요	○ '25년도 자체평가에 개선·반영 예정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사건처리 신속화)** 팀장중심 수사체계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활성화·역량중심 인사체계 확립,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 － 사건처리기간, 장기사건비율 등 각종 지표가 공통적으로 개선,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효과 가시화

- ▶ **(사건처리기간)** '23년말 대비 '24년말 10.8% 감소(63.0일 → 56.2일)
- ▶ **(장기사건 비율)** '23년말 대비 '24년말 14.5% 감소(7.6%→6.3%)

- － 경찰 수사의 신속성·전문성 등을 평가하는 서울변회의 사법경찰 평가 및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등 외부(법조계·국민) 평가 상승

- ▶ **<사법경찰평가** 서울지방변호사회 > '23년 72.8점 → '24년 78.1점(5.3점 ↑, 7.8% ↑)
- ▶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사회통합실태조사 > '23년 49.6점 → '24년 51.4점(1.8점 ↑, 3.6% ↑)
※ 발표연도 기준

※ 언론에서도 사건처리 관련 부정적 보도가 감소하고 “안정세 접어든 경찰수사(이데일리)” 등 수사 신속화에 대한 긍정적 보도 위주로 전환

- **(병합수사 활성화)**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 기존의 단건 위주 수사에서 동일 조직·유사 수법 범죄는 기능죄중 불문하고 접수초기부터 적극 병합

- － △ 시도청 중심 병합수사로 경찰서 수사관 업무부담 ↓·중복수사 ↓
△ 신속한 집중수사로 수사 신속 효율화 → 검거 가능성 ↑·추가피해 예방 可

<본청> △(신종 금융범죄) 총 9,081건→182건 △(사이버사기) 총 36,350건→5,895건 △(피싱범죄) 총 2,066건→42개 조직 **<시도청>** 11,098건→338건 **<경찰서>** 23,961건→2,780건 ※ '24. 1~10월

※ '24. 5월 22개 언론사에서 병합수사 체계의 장점과 성과 등에 대해 긍정 보도

- **(역량중심 인사체계)** 과·팀장 지휘역량평가 결과 인사 반영 등 역량 중심 인사체계 확립, 팀장·신임수사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사 전문성 제고

- ▶ **(체계적 인사관리)** △ 과·팀장 자격제 준수율 상승(과장 : '23년 98.8% → '24년 99.4%, 팀장 : '23년 92.1% → '24년 95.7%) △ 책임수사관 선발 연 2회로 확대
- ▶ **(평가·부적격자 배제)** 수사경과 인사원칙 확립, '24년상 인사 시 과·팀장 지휘 역량 평가 결과 '부적절 팀장' 114명 보임 제한 등 부적격자 과감히 배제 등
- ▶ **(팀장 교육)** 경감역량강화과정 1,538 교육 完(입교율 92.4%, 전년 대비 24.4%p 상승)
- ▶ **(신임 교육)** '신임 교육' 2주 확대, 신규 전입 수사관 2,309명 중 2,159명 교육 完(93.5%)

- 인사·교육 중심의 역량 강화 노력과 함께, 인력·예산 등 수사부서 여건 개선 및 특진 등 사기진작책도 병행 추진한 결과, 수사부서 선호도 증가

▶ (예비수사경과 지원) '21년 309기 118명 → '24년 314기 450명 (2.8배 ↑)
 ▶ (수사경과 자진해제) '21년 3,096명 → '24년 616명 (80.1% ↓)
 ▶ (수사경과 선발시험 접수인원) '22년 3,921명 → '24년 6,773명 (72.7% ↑)

- 신임수사관^{수사경력 1년↓} 비율 감소, ^{수사경력10년↑} 수사경력자 증가, 평균 수사경력 증가, 수사경과자 증가 등 수사부서 인력구조 안정화

▶ (신임수사관 비율) '22년 17.3% → '24년 12.7% (4.6%p ↓)
 ▶ (수사경력 10년이상 경력자 비율) '22년 29.8% → '24년 32.2% (2.4%p ↑)
 ▶ (평균 수사경력) '22년 7.5년 → '23년 7.8년 → '24년 8.1년
 ▶ (수사경과자 인원) '22년 33,196명 → '24년 36,460명(3,264명 ↑)

- (경·검 협력) 경·검이 동등한 입장에서 현안·협력방안 논의, 일선용 교육 자료 배포 등으로 경·검간 협력 체계 구축

▶ (대검 협력체계 구축)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 방문, 수사준칙 개정에 따른 변경 절차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 논의, 지속적 소통 창구 마련(3월)
 ▶ (절차 재정비) 작년 11월 개정된 수사준칙 관련 수사 현장에서 불필요한 경·검 갈등 예방을 위해 처리절차 재정비 및 「개정 수사준칙 관련 Q&A」작성·배포(3월)
 ▶ (실무 상담·지원) 검찰의 요구·요청에 대한 대응방향 설정, 논리 제공 등 대응 지원, 경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연구 실시(34건)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우수한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고, 채용된 변호사가 조기 퇴직하지 않고 장기 근속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대책 미비

⇒ 변호사가 경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장기 근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 책임수사시스템 확립 관련 주 수요층인 변호사에 대한 홍보 부족

⇒ △국수본-법전원협의회 간담회(4. 2.) △국수본-비교형사법 학회 임원진 간담회(4. 24.) 등을 통해 정책 홍보를 수행하며,

- 법조계의 경찰수사 이해도 제고 및 변호사 경력채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일부 성과가 도출된 바 있음

- 다만, 아직 대외 협력 결과가 변호사들이 체감 가능한 가시적 성과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력변호사 채용·장기 근속 가능한 대책 마련
 - 권역별 채용 규모에 대한 사전 공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입사 직후 조기 퇴직을 예방하고 장기근속 유도
 - 채용을 위한 출석 횟수가 많아 채용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체력·적성검사를 같은 날 실시하는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
 - 인사 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통해 법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등 장기근속을 위한 사기진작책 시행
- *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수사심의계 등
- 법조인 대상 성과·정책 홍보 강화
 - 경찰 수사 관련 개선점이나 우수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변협, 지방변호사회,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 실시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 전문수사관 선발	11월	○ '24년 전문수사관 인증 계획 수립(9. 6.) - '24년 전문수사관 68개 분야·545명 인증	정상추진
○ 국회 증액 예산 반영을 위한 의원실 등 국회 방문	11월	○ 수사부서 발신정보알리미 등 총 3개 국회 증액 신규·증액 사업반영(총 28.3억)을 위해 국회의원실 방문(10.29.~10.31.) - 서범수 등 8명 예결위,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방문	정상추진
○ '24년 관서장 추천 수사경과 선발	12월	○ '24년 관서장 추천 수사경과 선발 계획 수립(11. 5.) - 전국 938명 수사경과 선발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위원 평가 내용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사건처리기간, 법령제개정건수, 팀장 자격제 준수율 등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국민 피해의 신속한 구제, 경검협력 강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반영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병합수사 활성화, 부령개정, 제도개선, 경검협력 강화를 통해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 강화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검, 한국외대, 학계, 법무부, 법제처, 국수본 타 부서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 ▶ 병합수사와 컨설팅을 통하여 수사효율성이 강화되고, 국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 구축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적극적 목표치 설정 및 초과 달성 ▶ 전년도 실적 대비 10% 이상(상), 목표달성도 SS로 SS등급에 해당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사건처리 신속화, 검거가능성, 효율성 증진, 업무효율화,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 등 정책과제 실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검경 갈등 감소 효과는 좀 더 구체적 지표 개발 권고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의견수렴을 통하여 절차개선, 방식 변경, 접수표지 마련, 컨설팅 내용 적극 반영 등 정책환류에 노력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언론보도와 학계, 법조계와의 교류,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정책홍보를 하였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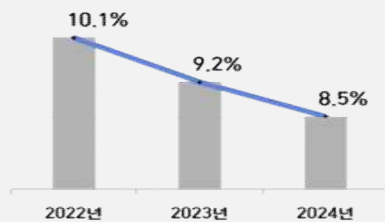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6	○ 경력변호사 채용 및 장기 근속에 대한 대책 미비	○ 권역별 채용 규모에 대한 사전 공고 제도 운영 등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 추진('25.7월)
		○ 체력·적성검사를 같은 날 실시하도록 개선하는 등 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수한 자원이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25.7월)
	○ 경찰책임수사시스템 확립 관련 주 수요 증인 변호사에 대한 홍보 부족	○ 인사 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를 통해 법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집중 배치하는 등 장기근속을 위한 사기진작책 시행('25.8월)
		○ 경찰 수사 관련 개선점이나 우수 추진 정책과 관련하여 변협, 지방변회,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 실시(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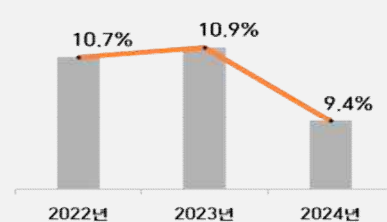
- **(완결성 제고)** △ 중요사건 검토 △ 수사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수사상담 오픈톡) △ 알기쉬운 수사 교육자료 작성 배포 등 추진

전체 결정 대비 검사 요구·요청 비율



▶ '22년 대비 검사 요구·요청 비율 **1.6%p** 감소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 비율



▶ '23년 대비 이의신청 비율 **1.5%p** 감소
※ 검찰 항고율 12.4%(23년) 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

- **(공정성 제고)** △ 수사심의신청 제도 개선 △ 중요사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적극 상정 △ 범죄통계의 투명한 공개로 공정성 제고 노력

	'22년	'23년	'24년 9월
수사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64.6점	66.9점	67.7점
증감	-	+2.3점	+0.8점

▶ '22년 대비 수사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3.1점** 상승

※공정성, 신속성, 청렴성 등 평가

- **(신속성 향상)** △ 범행 단서 DB 구축 △ 국수본 주관 요구·요청 점검·지원 △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치안종합성과 평가에 처리기간 준수율 정량 지표로 반영 등 노력

[사건처리 기간 감소]

	'22년	'23년	'24년 9월
처리기간(일)	67.7	63.0	56.1
증감	-	-4.7일	-6.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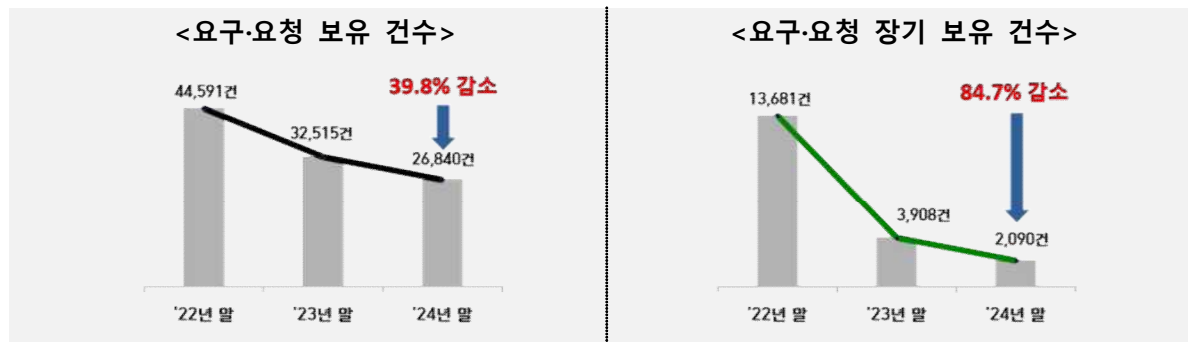
▶ '22년 대비 사건처리 기간 **11.6일** 감소

[검사 요구·요청 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총 접수건수	3개월 내 처리건수
'23년	114,662건	71,408건 (62.3%)
'24년	120,840건	95,819건 (80.4%)

▶ '23년 대비 처리기간 준수율 **17%p** 상승

[검사 요구·요청 보유건수 감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 성과)** '23년 대비 '24년 전체 요구·요청 비율은 감소 (9.2%→8.5%)했으나, 보완수사요구 비율(12.9%→13.4%)은 증가
- **(원인 분석)** 그간 성과 등 각종 업무 평가시 수사의 신속성과 사건 처리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수사의 완결성에 대한 평가·포상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반영)** △ 팀장 지휘역량 평가 △ 국수본 공약 특진 자격 요건 △ 치안종합성과평가 정성평가 항목에 요구·요청 비율 대폭 반영(完)
- **(관리·지원)** △ 매월 요구·요청 통계 분석 후 시도청 배포 등 관리 △ 우수 시도청 포상 △ 월 2회 요구·요청 사례 교육자료 작성 폴넷 게시 등 추진

※ 시도청에서는 지원 대상 관서(팀) 선정, 맞춤형 컨설팅 등 적극 지원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수사 핵심 쟁점 교육자료 발간	11월	수사 쟁점 질의답변 사례집 발간 배포(9.24.)	정상추진
○ 범죄 테마 분석보고서 작성	11월	'23년 주요 지표범죄 등 분석보고서 작성(전문가 자문)	정상추진
○ KICS 기능개선 과제 오픈	11월	대용량 파일 등 전자파일 업로드기능(9.19) 심의신청 KICS 구현으로 절차 전산화 (9.19)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수사의 신속성 지표에 '형사사법포털 대국민 조회건수', 'KICS 사용자 요구사항 기간준수 처리율'을 평가기준으로 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약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수사상담 오픈톡과 각종 교육콘텐츠로 일선과 소통하는 노력이 높이 평가되며,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체계 확립을 위한 시도청장 보고 및 수사지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잡혀 가는 것 같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였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시기 적절하게 범행단서 취합기능을 개발해주고 중요사건 보고서 검토 기능이 도입된 것은 공식적 방법으로 적절하고 투명한 수사지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협업 능력 높이 평가 ▶ 교육콘텐츠 제작, 심층면담, 전수조사 등 적극적으로 정책 수행을 위해 노력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목표치 설정 및 달성이 쉬운 과제가 아님에도 전반적으로 잘 챙긴 것으로 보여짐 ▶ 신규지표 도전성 우수, 신속성 지표의 포화상태 여부 점검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요구요청과 이의신청 비율 등이 확연히 감소하고, 사건처리 기간이 급감하는 등 객관적 통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이 인정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주요 대응 체계가 변경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에 대해 인터뷰한 부분은 중요하다고 판단됨 ▶ 대내적인 의견수렴 및 환류는 우수한 편이나 대외적인 의견수렴 및 환류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수사관 대상 홍보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7	○ 신속성 지표 재설계 필요	○ '25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지표 등 재설계하여 반영 예정('25. 3월)
	○ 대외적인 의견수렴 및 환류 강화	○ 형사사법기관, 변호사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25. 10월)
	○ 대외 홍보 보완	○ 대국민 포털 개선, 요구요청 사건 관리 추진현황 등 대외 홍보 적극 추진('25. 8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대공수사 전담 원년 경찰청 핵심과제(주요업무계획 반영) 초과 달성

- (인프라 확대) △광역수사체계 구축(廳 안보수사단) 및 첩보분석·해외공조 전담 부서 신설(廳 안보범죄분석과) △국외위탁교육 및 신입교육과정 신설 등 역량 강화
※ 안보수사 특성에 맞춘 성과제도 도입 및 별도 특진기준 마련 → '24년 팀 특진(경정 포함)
- (상황관리) △北 오물풍선·대북전단 살포 △대규모 행사 경호안전활동 등 각종 안보상황 관리체계 고도화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민 일상 안전 확보
 - ▶ (안보상황대응) △北 오물풍선 대응(32차, 6,264개소) △대북전단 살포 89회(전년대비 3배↑)
 - ▶ (경호안전활동) 한중일·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대규모 국제행사 현장점검(206회, 2,364명)
- (교류협력) △국외위탁교육(美·日·베트남) 발굴 등 해외역량 육성 △국내 안보기관 협력을 통한 '정·첩보 입수(36건), 수사 연계' 및 '위기탈북민 보호'
 - ▶ (교육파견) 美 HSI 등 4개 과정 19명, 日 경찰청 총경 1명, 베트남 공안부 어학연수 1명 파견
 - ▶ (수사정보) △北 보위부 연계 탈북민 사건 등 19건 수사착수 △일일 북한정보 등 입수·공유
 - ▶ (신변보호) △「북한이탈주민법」 및 업무 매뉴얼(2회)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기틀 마련 △24년 신변안전 실태점검 결과 위험징후 사례 46건 발굴, 통일부 연계·지원
- (수사지원) 안보사건 수사착수에 핵심이 되는 고가치 안보첩보의 발굴과 분야별 안보정보 및 주요 판결문 분석을 통한 현장 안보수사 지원
※ 안보첩보·판결문·대남공작기구 등 융합·분석, 상부선 신원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유가치 정보 제공(45건)
- (국제공조) △대공사건 관련 국가(기관)별 공조 범위·절차 등 규정 명확화 △美·日 등 안보수사 핵심 협력국 대상 수사·정보공조 활성화
 - ▶ 美 HSI 수사공조, 출입국·체류정보 등 수사단서 확보·제공(2건)
 - ▶ 日 경찰청과 北 정세·동향 정보 공유 등 교류 활성화(15건 입수, 8건 제공)
- (정책홍보) 경찰 대공수사 전담 원년, 일방향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신뢰도 및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일상 속 효과적인 홍보 활동 전개
 - ▶ 산업기술유출·간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생활믹찰형 매체홍보(전국 옥외전광판·지하철 등)
 - ▶ 국가안보를 주제로 한 국민 참여 '안보지킴이 공모전' 성공적 개최, 수상자·가족 초청 시상식 마련
 - ▶ '안보의식 경각심 고취' 디자인(6종) 자체 제작, 전국단위 안보 입간판(총 1,037개소) 화면 개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지표설계 및 추진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가운데, 보안성으로 일부 증빙자료를 비공개 한 점은 보완 요청
※ II급비밀·대외비 등 보안성이 높은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업무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 설명

□ 개선·보완 필요사항

- △高 보안성 업무에 대한 증빙 대체방안 마련 △기획부서 특성상 업무에 대한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더라도, 정량·정성을 구분한 지표 개선 노력
- 부서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에 대한 지표 추가발굴, 유관도 평가 지양

[2] 추진계획 준수여부 ※ 분기별 전 계획 정상추진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대국민 참여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 개최	11월	○수상자 및 가족 초청 시상식 개최(11.12)	정상추진
○The Best 안보경찰 선발 계획 수립 및 선발	12월	○2개팀(12명) 개인 6명 선발 完(12월)	정상추진
○현장자문단(탈북민보호분야) 현장소통 워크숍	12월	○업무수요 다수관서 조기추진(11.20~21)	정상추진
○신변보호관 교육자료 발간 계획 수립	12월	○개정 매뉴얼 수록한 책자 조기발간(10.17)	정상추진
○경찰책임 취약지 판단서 발간 계획 수립	12월	○대공취약 판단서 발간계획 수립·배포(12.16)	정상추진
○일선 안보요원 첩보수집 역량강화 교육	12월	○전문요원 대상 실시 完(12.17~19)	정상추진
○하반기 첩보수집 우수 유공 자체 포상 실시	12월	○첩보실적 우수자 37명 포상 完(12.2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미흡	▶ 성과지표 구성 항목의 대표성, 연계성, 적정성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7)	미흡	▶ 전반적으로 정책과제 수행 노력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3)	100%	▶ 모든 과제 완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20)	보통	▶ 다양한 내·외부 및 해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창출이 인정되나, 다양한 채널로 협업할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5)	미흡	▶ 신설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추상적인 지표를 충족하기 용이한 목표치로 세부화하여 구성·설정된 것이 아닌가 싶으며, 조직, 인사 등의 큰 틀은 대공수사전담 원년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설정된 것임에도 그 비율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여짐.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5)	미흡	▶ 정책수혜자 대상 정책이 효과성 설명이 다소 부족하고, 향후 기대도 다소 모호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5)	미흡	▶ 의견수렴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있지 않아서, 환류 노력에 대한 판단이 모호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우수	▶ 대공수사 전담원년답게 이전과는 다르게 가장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노력이 전개된 것으로 평가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8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지표 추가발굴 ○안보상황 종합적 대응체계 지속 추진	○안보수사국 자체 성과회의 개최 ('24.1~2월) ○광역안보팀 신설·운영('25 상반기)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가안보사범 수사활동 및 역량 강화 지수([40%]) 경찰이 기존 국정원 담당 수사영역까지 담당함에 따라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수사활동 강화를 통해 목표치 249점 대비 157.1% 초과 달성(391.2점)

- － 안보사범 특성상 밀행성으로 인해 수사 난이도가 높고, 장기수사가 필요한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전년대비 49%↑)을 통해 총 38명 검거

※ △제주간첩단 연계, 하부조직 결성 3명 △현역군인 대상 군사기밀(III급) 탐지·수집 3명(구속)
△北 공작원과 회합·통신하며 국가 첨단기술 등을 유출한 2명 등 검거

- － 안보수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가체계 개선 △보안감찰 신설 및 보안강화 종합계획 마련 △안보수사심사관 확대(2명→8명)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 (평가체계 개선) 간첩 등 안보사범 특성상 밀행성으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만큼, 성과 마일리지 도입(성과 5년간 누적 관리)으로 장기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보안 강화) 경찰 대공수사 전담에 따라, 기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국정원 수준의 강화된 보안대책 수립·시행(△보안강화 종합계획 △보안내규 제정) / 보안사고 예방 등 위한 보안감찰 직위 신설(24명)
- ▶ (법률 지원) 현장 수사관 대상 상시 법률 조력을 위한 △법률지원팀(변호사 3명) 운영 △'수사 법률 상담 게시판' 신설 등 지원체계 구축(주요사건 컨설팅 82회 및 법률 상담·검토 등 총 189회 법률지원)

- (안보사이버 대응활동 지수[30%]) 안보사이버수사 활성화 및 선제적인 피해 예방조치로 목표치 1,013점 대비 145% 초과 달성(1,471점)

※ △입건 전 조사 328건 △제출 첩보 725건 △피해계정 등 보호조치 4,528건

- －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및 평가체계 마련

- ▶ (수사관 증원) 6개청 수사관 인력 증원(68명→83명)
- ▶ (직제 정비) 직접 수사부서로서 역할 정립 위해 '첨단안보수사계' → '안보사이버수사대'
- ▶ (포렌식 수사관) 포렌식 역량을 갖춘 수사팀원 선발·운영(총 44명)
- ▶ (수사팀 평가체계) 수사-포렌식 간 업무 융화하고 성과 마일리지화

- 국가 주요 정보 해킹 등 침해형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집중, 국가배후세력의 공격(IP·악성코드·기법 등) 데이터* 다수 확보

* 침해지표보고서(IOC) '23년 124건(38,861점) → '24년 152건(90,391점)

- △ 전문 위탁교육(4개 과정, 115명) △ 장비 확대(예산 증가, '23년 15억 → '24년 24억 9천만원) △ 국내외·민관 협력(안보실·국정원·국방부·美 FBI·민간 IT업체 등) 공고화 등으로 수사 역량 강화

- (경제안보·테러·방첩 사업 실적[30%]) '24년 기술유출 사건 총 123건 송치, 그 중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해외 유출 사건은 27건으로 작년(22건) 대비 22.7% 증가

-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은 13건 송치하여 작년(10건) 대비 30% 증가

※ 11~12월 기술유출 사건 총 8건(해외 2건) 송치(국가핵심기술 1건)

- 기술유출 사건 범죄수익 환수 총 8건, 65억 6,000만원 실시, 전년(2건, 0.65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11~12월 범죄수익 환수 총 3건, 16억 4,000만원

- '24년 테러방지법·테러자금금지법위반 총 4건 송치 및 법무부 협업을 통해 국내 체류 테러위험 외국인 13명 강제퇴거

※ 11~12월 테러자금방지법 1건 송치 및 테러위험 외국인 1명 강제퇴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대부분 평가요소에서 비교적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25점 만점에 21.2점으로 81.3% 득점)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5점 만점에 3.6점으로 72% 득점) 등 2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음

- △ 정책 효과성이 국민체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 △ 안보 수사 특성상 장기간 수사 전개되는 점을 고려, 정책 효과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 △ 사건과 관련 언론홍보 등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 효과성) 높은 검거실적,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정책과제 수립 시 검거성과 외 발생률, 수사노력도, 국민 체감도 등 객관적인 지표로 과제 수립 추진
- (향후 기대효과) 경찰이 국내 유일의 안보수사기관으로서 △인적 쇄신 △수사팀 재편 △성과평가체계 개선 등 다양한 안보수사활동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향후 의미 있는 성과도출이 예상됨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대국민 홍보가 어려운 전통적 안보사범 외에 산업기술유출사범 수사활동에 대한 홍보를 집중 전개하였으나, 여전히 대국민 경각심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는 SNS 등 대국민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활용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중기부 협업, 국내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설명회 참여	11월	○ 중기부 주관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교육 설명회 참석(10.31.)	완료
○ 주요국 법집행기관 주관 대테러 실무교육 참석	11월	○ 독일(연방범죄수사청)·프랑스(인터폴)에서 대테러 실무회의 실시(12.1. ~ 8.)	완료
○ 방산기술보호 세미나 참여	12월	○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주관 제10회 방산기술 보호 및 보안 워크숍 참석(11. 19.)	완료
○ 포렌식 자격증 취득 및 포렌식 장비 등 예산 집행 결과 점검	12월	○ 점검 및 예산 집행 완료	완료
○ 하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12월	○ 주요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권역별 소통 간담회」 개최	완료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10)	보통	▶ 정책과제 대표성 및 연계성, 지표 적정성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7)	미흡	▶ 노력도는 확인되나, 검거건수 증가 등 실제 성과 확인이 미흡
2-2. 추진계획 준수도 (3)	100%	▶ 모든 과제 완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20)	미흡	▶ 보안감찰이나, 포렌식교육, 모바일 암호해제·패스워드 분석 시스템 등 타 국관에 이미 존재하는 기능이나 장비, 교육 등을 기능 고유의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리 노력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인지, 해당 기능은 예산과 인력 등을 통합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별도의 특화된 분야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15)	보통	▶ 정부차원의 인력 및 교육지원 등 인프라가 대폭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되었다는 느낌이나, 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평가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25)	미흡	▶ 적극적인 정책 수행 효과가 우수하나 향후 기대효과 작성은 다소 미흡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15)	보통	▶ 대내외 의견수렴 노력은 돋보이나, 이를 통한 정책환류 등 성과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5)	보통	▶ 사건 홍보는 2건이며, 여타 홍보실적이 보이지 않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9	○ 성과지표 설계시 검거성과 외 종합적 노력도가 반영 된 지표 필요 ○ 성과지표 측정 방법에 개선 필요	○ 검거성과 결과 중심 방식에서 수사의 과정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25년 정책과제 수립시) ○ 검거(인원) 성과와 교육·수사지원·첩보 등 수사 노력도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구분하여 지표 수립('25년 정책과제 수립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대테러 분야]

- (인프라 구축) △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특공대 시설개선 예산 252.16억원 신규 확보 △ 특공대 연합훈련·관계기관간 합동 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장 신규 건립 추진 등 대테러시설 개선 추진
 - － '25년 정부예산에 △ 대테러훈련시뮬레이터(13억원) △ 특수경호 차량(1.7억원) 등 신규 장비 구입예산 반영, 대테러예산 4.8% 증액('24년 323억원 → '25년 339억원) 등 성과 거양
- (드론 테러 대비) △ 드론테러 공동대응 협의체 △ 유관기관 합동 훈련 △ 안티드론장비 운용 등 적극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실전훈련 강화) △ 정부기관 최초 경찰청장 주관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실시(8.19. 7개 기관 404명 참여) △ 시도청장·경찰서장 주관 교육·합동훈련* 실시 △ 총경 교육과정에 '대테러 초동조치' 추가·정례화** 등 현장대응·관계기관 통합지휘역량 강화

* 軍·해경 등 관계기관 현장 합동훈련 727회(3,421개 기관 47,718명 참여)

** 본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이 직접 출강, △경찰 대테러 관리체계 △경찰서장 임무 등 교육

[재난·인파관리 분야]

- (재난 관리) △ 지역별 맞춤형 재난전문가 초빙교육* · △ 'READY 코리아' 훈련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참여 등을 통해 재난관리역량 강화 △ 집중호우·산불 등 재난에 총력 대응(963건, 40,713명 지원)
 - * △(산사태) 대구·경북(치산협회) △(하천범람) 부산·광주(홍수통제소) △(집중호우) 제주(기상청) 등
- － 각종 정부평가에서 경찰의 노력을 인정, 우수한 성과 거양

※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중앙부처 29개기관 중 상위 7개기관)

(국가핵심기반 평가) 'A등급' 달성(중앙부처 6개기관 중 1위)

- (인파 관리) 행안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안전 관리계획 심의 △ 사전 합동점검 △ 위험발생시 신속·적극 대응
 ⇨ 불꽃축제·새해맞이행사 등 안전관리 적극 지원(3,866건 220,745명)
- 도로·광장·공원 인파사고 주관기관으로 지정(행안부와 공동 지정, 7.17.)됨에 따라 △ 인력 증원(본청 2명) △ 인파관리차량 신규 도입(2종 4대 총 24.5억) △ 전문교육·훈련 등 진행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외부위원 컨설팅·최종 평가의견 등을 분석한 바, ‘대내외 의견 수렴’ 및 ‘정책홍보 노력’ 분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
-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테러 활동의 특성상 대내·외적으로 자세히 공유·홍보하기 어렵고, 테러범 제압·인질 구출 등 실제 테러 상황이 아닌 첨단장비 도입·교육훈련 고도화 등 예방·대비 노력만으로 경찰의 대테러 활동이 주목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보안의 테두리 내에서 유관기관(기능)간 회의·현장 의견수렴 등 활성화
- 국가중요행사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홍기이용}강력범죄 등 고위험 치안불안요소에 대한 안전활동 노력도 적극 홍보하고,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 外 SNS 등 새로운 플랫폼을 발굴·홍보채널을 다각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美 FBI 폭발물 처리 전문가과정 선발·파견계획 수립	11월	○위탁교육계획 수립(6.18.),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 요원(4명) 국외교육 이수 완료(10.5.~10.20., 2주)	정상추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12월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추진계획 수립·전파(10.8.)	정상추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2월	○행안부 주관 2024년 READY KOREA 훈련 참여(9.25.)	정상추진
○작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12월	○3종 매뉴얼 개정·현행화(12.30.)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국정과제 및 경찰청 핵심정책과제에 포함될 만큼 대테러·재난관리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연계하여 성과지표를 수립한 것이 점수 획득에 기여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대국민 대테러체감안전도 설문조사를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공대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및 테러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훌륭히 수행하였고, 전문교육 도입 등 재난관리역량 강화 노력이 돋보인 점이 주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모든 계획 수립·결과 창출이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테러장비 무상도입 등 예산 절감, 테러 및 재난·인파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 등 적극행정 수행 노력이 확인되며, 특히 경찰청 주도하에 대테러 관계기관 통합지휘체계 확립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성과로 인정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다양한 세부 성과지표에 대하여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에도 빠짐없이 초과 달성한 점에서 높은 점수 획득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정책수혜자인 국민 불안감 감소 및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의 효과가 인정되며,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 안전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 점수 획득에 기여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적 의견 수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외 기관과의 제도개선, 정책과제 수행성과 등이 돋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대테러 훈련, 재난현장 구조 및 인파 안전관리 노력 등이 적절히 홍보된 것으로 인정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0	○ 대테외 의견 수렴 및 환류 노력도	○ △테러대책실무협의회 △ 시도청·특공대 등 대상 '대테러위기관리워크숍' 등 정례·활성화(연중)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 △관계기관 합동훈련 △장비 도입·개선 △대테러·재난 등 현장 활동사항 등 언론 홍보(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인사에 대한 완벽한 경호임무 수행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기여
 - － (주요인사) △ 대통령, 4부 요인 △ 제22대 총선(정당대표) △ 국빈(외빈)·주한 외교사절 등 절대 신변안전 확보로 국정 안정화 뒷받침
 - － (다자정상회의) △ 韓日中 △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릴레이 다자 정상외교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 확보로 치안 선진국 위상 정립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경호업무 특성상 대외적으로 보안성이 강조되고 정량평가·성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실정으로 정책홍보와 효과성에 대한 표현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정책홍보 및 정책환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하고, 보안성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
- 기존 업무와의 차별성·난이도를 표현할 수 있는 지표 개선·연구하여 정책 효과성을 표현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개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경호관련 법령집」 제작	11월	○「경호관련 법령집」 제작 완료(11월)	정상 추진
○경호부대 무기관리시스템 도입	12월	○경호부대(101단) 무기관리시스템 도입 완료(12.31.)	정상 추진
○하반기 경호행사 종합 평가 및 개선안 마련	12월	○하반기 경호행사 종합평가 및 개선(12.31.)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적절한 지표가 설정되었으나, 국정과제와의 연계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 수행 노력을 확인하였으나, 교육 노력도 부족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수행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협업 및 적극행정 노력이 확인되었으나, 기존 업무대로 이행한 것으로 실제적인 업무의 일환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도전적 목표치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성과도 미비함
5.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경호인프라 조성 및 현장 중심 전문화 교육 실시하였으나, 객관적 평가 어려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컨설팅, 현장 의견 수용 노력이 돋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대내 홍보는 우수하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강화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1	○ 국정과제 연계 노력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국정과제와 연계된 계획 수립('24.2월)
	○ 경호경찰관 전문화 교육 노력도 향상	○ 전국 경호인력풀 대상 교육 만족도 및 건의사항 수립('24. 4월)
	○ 정책홍보 및 환류 노력 강화	○ 전국 경호경찰관 영상회의 수시 개최(반기) ○ 언론보도 적극 대응, 경찰 내부망 정책홍보 노력(수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위험·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고령자 면허반납사업 지속 추진('20년~) 및 고령자 대체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민간, 자치단체와의 협업 추진
 - ※ 면허반납 1인당 교통사고는 -0.0118건, 사회적 비용은 -42만원 감소한다는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사업 연속성 동력 확보('23. 8월 ~ 12월, 인제대 산학협력단)
 - 특히, 고위험 운전자 운전능력을 교통사고 위험 없이 객관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도록 조건부 운전면허 R&D 시제품 사업화 예산확보('25년 신규 21억원)
- 국민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속도규제 시행
 -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구역 점검, 보행자 우회전 사고·차량 역주행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위치조정 및 일방통행로 점검·개선
 - ※ △ 개학철 전국 6,295개 초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 △ 우회전 사고위험 높은 128개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조정, △ 전국 9,368개 일방통행 구간 표지 등 시인성 점검·개선
 - 도시부스쿨존 탄력적 속도규제 완화를 통하여 도시부 속도 상향 131→145개 구간(296.55→349.34km),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13→45개소 확대
 - 보호구역통합관리시스템에 '전국지자체 수집데이터(보호구역 정보)+국토지리정보원(전자지도정보)+(주)카카오(표지판 정보)'등 연계 구축
- 법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 대응
 - 음주운전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신설('24. 12. 3.)
 - ※ 단시간 분해되는 알코올 특성상 음주측정은 혐의 입증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나, 추가 음주 등을 통해 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이 곤란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일명 김호중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고위험·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면허반납 사업 확대) 고령운전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고령운전자 사고증가로 면허반납 실효성 문제 제기
- 국민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속도규제 시행
 - (도시부스쿨존 탄력적 속도규제) 한정된 지자체 개선예산에 비하여 가변형 속도표지 등 비용이 과다(지점별 2억 내외)하여 전국 확대 설치에 어려움
 - (역주행 사고예방 일제점검·개선) 일방통행구간 노면표시 재도색은 지자체 공사 여건 및 예산 등에 따라 즉시 개선이 어려운 실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고위험·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추진
 - (면허반납 개선) 일반 운전자 대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큰 실 운전자 면허반납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 개선방안 : △ 일반 반납자(1인 10만원), △ 실 운전자(1인 30만원)
- 국민안전과 편의가 조화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속도규제 시행
 - (도시부스쿨존 탄력적 속도규제) 지자체 예산사항을 고려, 안전표지 부착 방법 등 간소화 지침을 확대, 지자체 부담 감소 등 전국확대 추진
 - (역주행 사고예방 일제점검·개선) 일방통행 구간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점검 시기 변경(6월→2월경)으로 지자체 공사기간·예산 등 확보 용이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준수 여부 확인되도록 간략히 기재)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고위험·고령운전자 사고예방(페달 오조작방지장치 보급)	11월	○ 민·관 업무협약(손보험회·교안공단) 및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정상 추진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2월	○ 구축사업 개발데이터 연계작업을 위한 보안 대책 수립 ○ 광주통합전산센터 H/W 시스템 자원 설치 ○ 구축 개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작업(1월)	정상 추진
○ 우회전 사고예방 등 안전한 교차로 통행 인프라 개선 추진	12월	○ 전국 128개소 횡단보도 위치조정 개선 완료	정상 추진
○ 고위험·고령운전자 사고예방(수요 응답형버스 사업설명회 계획 수립)	12월	○ '도' 단위 광역(8개) 내 기초지자체 대상, 민·관 협업 사업설명회 계획 수립	정상 추진
○ 역주행 사고예방 일방통행로 일제점검 및 개선 추진(7~9월, 3개월간)	12월	○ 전국 일방통행로 9,368개소 점검완료, 노면 재도색 등 975개소 개선 완료	정상 추진
○ 조건부 운전면허 R&D 종료	12월	○ 조건부 운전면허 ^{22~24년} , 36억원 R&D 종료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세부적 정책과제들은 국민의 생활안전확보와 직접 연계되었고 지표설계도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도로교통법 관리 주무 부서로서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였고, 고령운전자 안전대책과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대로 이행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DRT사업, ADAS지원사업 등은 큰 성과로 판단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보통	▶ 목표치 설정은 다소 보수적, 성과달성도는 높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농어촌 대중교통 취약지역 내 이동성 확보 사업, 고령자 안전장치 지원사업 등은 24년에는 환경조성을 수립했다면 25년은 실질적인 효과분석 수행과 정책방향의 구체성이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음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정책수립과 시행에 있어 대내외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 홍보 노력을 더 활발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2	○ 면허반납 개선 예산 증액	○ '26년 중기사업계획 포함 기재부 제출 예정(1월 말) ('25년) 27억원 → ('26년) 39억원
	○ 역주행 사고예방 일제점검 개선	○ 기존 점검 시기 변경 추진(6월→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통무질서 엄정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이륜차 등 주요 위험 유형 사망자 대폭 감소
 - 스쿨존·휴가철 등 특별단속과 병행한 연중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교육 결과, 음주사고 사망자 25.1% 감소(잠정)
 - 대표적인 무질서행위인 이륜차 폭주족 및 법규위반 집중단속 등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 또한 9.2% 감소(잠정)
-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전정책 중점 추진의 효과성 입증
-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수준 달성
 - 통행량 및 인구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사고감소를 위해 관계기관 및 시·도경찰청 등 총력 대응한 결과,
- ⇒ '24년 사망자는 2,523명(-1.1%, 잠정)으로 교통사고 통계관리 이래 최저수치 기록 ※ 사고 발생 1.8%, 부상자 3.4% 각각 감소
- 첨단 미래 모빌리티 안전 확보 기반 마련
 - 실시간 신호정보 시스템 확대하여 자율주행차 등 첨단 모빌리티가 신호를 인식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다부처 R&D 사업 성과물의 경찰업무 연계 강화를 통해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교통안전 관리 업무역량 향상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최근 3년 실적을 상회하는 적극적 사망자 감소율 목표(-6.2%) 설정
 - △교통량·인구이동 지속 증가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인구 급격한 증가, △과거 사망자 감소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인해 목표치 달성 미흡(-1.1%)
- *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23년 4.95명)는 이미 OECD 평균('21년 5.3명) 하회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단순히 전년 대비 사망자 수 감소율을 평가하는 사망자 감소율 지표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개선 지표 마련
 -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OECD 평균 비교 등 신규지표 도입 검토
- 고령자 인구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에 대비, 고령자 대상 교육·홍보 등 안전정책 전개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시행	11월	○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계획 시행(10월)	정상추진
○ 교통안전 성과분석 및 특진 등 포상 실시	12월	○ 2024년 하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특별 승급 계획 시행(11월)	정상추진
○ 교통사고 분석 및 전망 예측 자료 시·도경찰청 공유	12월	○ 월별 교통사고 현황 분석자료 공유(10~12월)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이 있고, 설정한 지표가 적정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현장단속, 교통관리, 장비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완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다양한 대내외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추진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사망자 감소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국내 교통환경과 선진국 수준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의 목표치 설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정책의 효과로 음주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의 수를 더욱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기대 효과에 대한 서술이 미미함 ▶ 정책의 효과성과 향후 기대효과가 좋은 것으로 예상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책환류를 시도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 홍보 노력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3	○ 정책과제 지표 개선·보완	○ 신규 지표 개발(3월)
	○ 고령자 대상 안전정책 추진	○ 고령자 대상 교육·홍보활동 전개(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정책방향 설계) 정부 3년차 국정기조에 부응한 전략목표* 제시 및 성과지표를 재설정, 업무계획·평가체계의 긴밀한 연계로 정책 추동력 확보
 - *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확보 △법질서 확립 △현장대응력 강화 △글로벌·과학치안
- (지시사항 관리) 대통령·국무총리·경찰청장 지시사항 관리, 추진실적·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각종 지시사항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 철저
 - ※ △대통령 15건 △국무총리 1건 △경찰청장 79건(직무대행 포함)
- (국회대응) △업무보고 △국정감사 △예산 및 법률심사 △주요 현안의 체계적 정리 및 요구자료 종합검토 등 각종 국회현안 대응 총괄
 - ※ △행안위 국정감사(10월) 등 전체회의(24회) △정보위 국정감사(10월) 등 전체회의(8회) △기타(법사위·예결위) 전체회의(22회) △당정협의(3회) △항의방문(6회)
- ▶ (쟁점자료) △의원 관심사항 △요구자료 △언론보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예상질의 작성
- ▶ (요구자료) 자료를 최종 검토하여 일관되고 정확한 답변 제출, 불필요한 오해 사전 차단
- ▶ (외근활동) 상임위 동향 등 전반적인 상황 능동적 파악, 의원실 교감을 통해 쟁점 최소화
- (조직운용) 국민·현장 중심의 조직운용으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 (직급조정) 업무의 책임성·난이도에 비해 열악한 직급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무관 ±3명 △총경 ±50명 △경정 ±175명 △경감 이하 ±312명 등 총 540명 직급조정
 - ▶ (인력증원) 학교폭력 예방, 상황관리 등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총 214명 인력증원
 - ▶ (근무여건 개선) 현장경찰관 근무여건에 대한 대내외 우려 감안, 기능별 활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태·문제점 진단,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5개 분야 32개 과제)
- (정부혁신·적극행정) △기본계획 수립 △우수사례 발굴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적극적 조직문화 정착
 - ▶ (정부혁신) 총 647개 사례 중 「성착취물 해외 삭제방 구축」이 동상(3위) 수상
 - ▶ (우수부서 가점) △정부혁신 경진대회 수상 관서·부서에 최대 0.3점 △정부혁신 전략에 부합하는 치안 R&D 연구과제 발굴·운영 부서에 최대 0.1점
 - ▶ (적극행정) 상·하반기 △특별승진(19명) △특별승급(30명) 등 총 150명 인센티브 부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경찰청 차원의 정책 발표 이후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 등 배포를 통해 국민들의 치안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도모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청 자체평가·치안종합성과 평가 최종평가 실시	11월	○ 경찰청 각 부서(課)와 주 경찰관서·부서(課)의 최종 추진성과와 개인기여도 측정을 위한 최종평가 완료(11.1~12.30.)	완료
○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작성·발표	12월	○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최종 실적 점검(12.11.)	
○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배포	12월	○ 경찰활동과 치안행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홍보를 하기 위한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통계연보 - 10.18. / 백서 - 8.14.)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책과제 대표성 및 연계성, 성과지표 적정성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조직개편 시기에 주요 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노력이 돋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모두 정상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도입 등 노력도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주요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치안정책 추진 노력이 돋보이며 목표치도 적극적으로 설정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책관리와 이에 부합하는 조직운동을 통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으나, 향후 기대효과는 다소 모호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대내외 의견수렴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이를 통한 정책 환류 노력도 돋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대내외 정책홍보 노력이 돋보이며 주요 정부 부처 및 국회 대상 업무도 뛰어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4	○ 대국민 홍보 방안 강구	○ 홍보 기능과 협업하여 주요정책 적극 홍보(연중)
	○ 각종 지시사항 관리 및 전파	○ 경찰청 내 타 기능과 협업하여 지시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중심지역관서 확대 운영(649개소), △署단위 지역관서 집중운영(군위·하동)
△지역관서 관리·감독체계 개선 △전국 치안센터 741개소 중 66개소
감축 등 효율적 지역경찰 운영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인프라 구축
- △체포피의자 署 인치율 제고(47%→90%) △모바일 지문스캐너 보급
(4,227대) △바디캠 도입 예산 확보('25년 77억) 등을 통해 현장대응력 강화
- 공동체치안활동 및 현장조치 일일 보고체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포상*
하고 전국 공유, 시도청 성과평가에도 반영하여 적극적 활동기반 조성
* 상황점검 회의 선정사례 등 대상 경찰청장 표창 1,017매, 시도청장 표창 4,451매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정량 평가지표(2개*) 목표치를 가이드라인상 '상' 기준으로 높게 설정
하였고 국민 체감안전도는 목표치(78.1)의 100%(SS등급)을 달성하였으나,
*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70%) △국민 체감안전도(30%)
- －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만족도는 최근 3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
하였으나 높게 설정한 목표치(90.5점) 기준 99%(S등급)를 달성
※ '21년 87.2점 → '22년 88.1점 → '23년 89.4점 → '24년 89.6점
- － 효율적 지역경찰 운영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어 112신고 현장업무 처리 만족도가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지역경찰운영과는 '24년 신설된 부서(課)로서 기존 부서(치안상황과)의
정책과제上 1개의 정량 평가지표를 2개로 확대하여 정책과제 수립
- － 다만, 지역경찰 규모(5만명) 및 업무 범위에 비해 정책과제 정량지표
항목이 적고(2개), 다양한 지역경찰 업무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향후 정책과제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경찰의 다양한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설계 및 반영 예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성과우수 지역경찰 공무국외출장 등 지역경찰 포상(하반기)	12월	○ '24년 하반기 지역경찰 공무국외출장 실시(9월)	정상추진
○ 미운영 치안센터 감축	12월	○ 741개소 치안센터를 전수 점검 결과, 근무자가 없고 30년 이상으로 노후가 심하며 침수 등 파손으로 활용 가치가 없어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민 반대가 적은 66개소 감축 완료	정상추진
○ 하반기 특별승진 시행(지역경찰 베스트팀, 최고지역경찰)	12월	○ 본청 인사정책 변화에 따라 특별승진 제도가 공적마일리지제로 변경, 베스트팀 특진 폐지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목표가 문제해결형 지역경찰활동을 통한 안전확보인데, 성과측정을 하는 부분에 지역경찰이 '문제해결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 지는 잘 드러나지 않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중심지역관서 운영에 있어 인구감소지역, 도심공동화현상 등을 고려하여 과학적/데이터분석기반 운영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96%	▶ 7월로 계획하였던 '모바일 지문인식기 추가 보급'이 일정대로 추진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치안센터 효율화 계획 수립'의 경우도 점검계획만 확인 가능하며 일정에 맞추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유지보수 수준으로 관리되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대폭 개선, 적절한 기관과 협업.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업무내용/범위에 비해 성과지표(2개)가 상대적으로 적음 ▶ 업무량/효과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성과지표 발굴 및 지표별 차등화 부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인구감소지역의 순찰인력을 재배치하고 범죄다발 지역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것은 향후 범죄예방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의견수렴의 노력을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이 어떻게 실제 제도개선에 반영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공동체지역관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해 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5	○ 지역경찰의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성과지표 발굴	○ '25년 자체평가 정책과제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시 성과지표 추가 발굴하여 반영('25.3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교육훈련 체계 강화) △ 상시교육훈련 제도 활성화 △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등 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찰 직무 전문성 제고

▶ <상시교육훈련 제도> 5개廳^{인천·충북·강원·광주·울산} 시범운영(1년 2개월)을 거쳐 전국 확대 시행(7. 1. ~)

- (정책 설명회) △ 워크숍 2회(4.30, 80명/6.28, 20명) △ 정책설명회 1회(5.23, 543명) △ 현장 순회설명회 15회(4.2 ~ 24.)
- (촉진자·동료강사 양성) △ 순찰팀장(5,177명) 촉진자 교육 完 △ 팀장 전수교육 전문 동료강사(61명) 양성
- (운영방안) △ 관서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교육 운영모델(案) 제시 △ 구체적인 운영지침(직책별 임무 등) 마련

▶ <역량 기반 교육체계 구축> 지역경찰 직무 단위별 필요역량에 기반 'OJT-기초-심화-전문' 단계로 구성, 시·도청 교육센터 2개→9개, 인재원 3개→6개로 교육과정 확대 개편

- (순찰팀원 교육과정 세분화) 기초·심화과정을 실무분야별 세분화(통합과정 → 범죄예방·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안전)
- (단계별 수강시스템 구축) 지역경찰 기초(시·도청) → 현장실무 I ~ IV(시·도청) → 현장전문가 I ~ IV(인재원)
- 교육과정 신설(3개과정 / 지역관서장·관리팀원·신임직원), 세대갈등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교과목 편성

▶ <동료강사 인력풀 구축> 인재원 교육평가(4.29. ~ 6.7.)를 통해 동료강사 78명을 확보하고 '강사 양성과정' 연간 교육인원을 '25년부터 향후 5년간 100명→200명으로 확대 협의 완료(9. 20.)

▶ <교육훈련 정책 협의체 신설> 신임경찰 교육부터 재직자 교육으로 이어지는 교육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경찰청↔교육기관↔시·도청'의 다자간 협의창구 운영(총 2회)

※ 1차 회의(9. 27. / 총 29명), 2차 회의(12. 5 / 총 24명) → △ '25년 지역경찰 교육과정 설계 △ 교육 운영정보 공유 등

- (교육 인프라 확충) 지역경찰에 특화된 교육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보급·활용, 교육훈련의 효과성 증진

▶ <현장실습센터> 지역경찰 업무시스템(7종) 실습, 물리력·장비 활용, 토론형 학습 등이 가능한 현장실습센터 전국 20개소 구축(17개소 완료, 3개소 진행중) / '25년 구축예산 6억 8천만원 확보

▶ <스마트 사격훈련 장비> 모형 권총·전자총격기로 다양한 시나리오 상황에 맞춰 사격훈련이 가능한 '스마트 사격훈련 장비' 125대 구매, 지역관서 배치(11월중) / '25년 예산 13억 1천만원 확보

▶ <간단 매뉴얼 팁> 신고접수~현장출동 단시간 내 중요사건의 핵심 조치사항에 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업무 Tip' 형태의 매뉴얼(107개) 제작·112시스템 탑재 → 모바일·순찰차 실시간 송출(12. 19~)

▶ <폴링> 내부 업무시스템 내 동영상 기반 지식공유 플랫폼 폴링(POL·ING) 구축, 현장의 우수 경험과 업무 노하우 등 공유(동영상 1,935건, 조회 1,462,114), 교육자료로서의 품질·접근성 향상을 위해 키워드 검색 기능 개발, 본청 제작 영상 공유방 신설, '모바일오피스' 탑재 등 기능 개선

▶ <실패사례 공유> △ 주요 사건사고 △ 외부기관의 권고 △ 사회적 이목 집중 사건의 유형별 실패 사례(150건)를 상시 수집 분석해 교육자료화, 중대 실패사례는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

* ① 비정형적 피습상황 대응 ② 현장 압수절차 ③ 피의자 도주방지 등 총 3개 동영상 매뉴얼 제작·배포 完

▶ <지역경찰 소식지-LIVE> 지역경찰 대상 각종 우수·미흡사례, 제도, 법령, 업무지침 등 '코칭'이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지역경찰 소식지-LIVE 제작, 현장에 정기 제공(총 4회차 작성)

- (계획 수립)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지역경찰 구현을 위해 역량강화·저해요인 발굴 및 제도 개선 등 역량강화 과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

※ 총 28개 과제 발굴, 업무개선협의회, 현장 전문가 제언 그룹 등을 통해 과제 관리 및 환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추진에 있어 대내 협력에 주력한 결과, 전문가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업 등이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위원의 지적으로,
 - △ 방대한 조직 규모 △ 광범위한 업무범위 등을 이유로 타 업무영역에 비해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관심 부족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지향점과 국민 기대에 걸맞은 현장대응력 진단, 이에 필요한 지역경찰 직무 역량에 대한 치밀한 분석·연구 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실무역량 관리) 효과적인 조직운용 기반 마련을 위해 경찰 직무에 필수적인 기초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평가 등 체계적인 역량 관리 필요
- (평가 지표 개발 등) 정책연구용역 등 전문가·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찰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역량 측정 및 교육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역량 진단·평가 지표 발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112신고 간단 매뉴얼 활용 현황 점검	11월	○ 간단매뉴얼(유형별 조치사항) 107종 112시스템 탑재, 각 시도청별 시스템 오류, 개선 필요 사항(화면 미현출 등) 발굴 및 보완(12. 19)	지연
○ '25년 지역경찰 교육훈련 계획 수립	11월	○ 지역경찰 역량에 기반한 실전,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체계로 전면 확대 시행(11. 27.) - 직무별 필수역량과 현장 수요조사를 기초로 역량개발에 최적화된 교육훈련 체계로 개편 - 범죄예방·현장대응·공동체치안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설계, 상호이해·소통 교과목 편성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미흡	▶ 정책과제의 대표성과 연계성은 확인되나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지역경찰 역량강화 과제 발굴을 위한 많은 간담회 등 노력으로 28개 과제발굴등 노력도가 좋습니다. 다만 그 실행력까지 확보방안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대로 추진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적극행정 노력과 협업도가 양호하나 다른 과제에 비하여 대내적 협력만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지역경찰관들에게 상시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지역경찰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상시교육훈련 활성화는 제대로 운영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경찰 업무개선 협의회를 통해 개선 사항 실적이 있는지 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미흡	▶ 유관기관과의 대외적인 의견수렴 및 협업 발굴이 필요해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상대적으로 정책홍보 노력이 부족함. 대외적으로 경찰의 교육확대를 홍보하는 노력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6	○ 정책과제 및 성과지표 개선	○ '25년 신설한 치안종합성과평가 성과지표 및 교육체계와 연계된 정책과제 평가지표 개발('25. 2월)
	○ 정책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	○ 전문가·외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치안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역량 진단 도구 등 발굴(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예산확보) 건전재정 및 감액 기조에서도 전년 대비 5,373억원(4.1%) 예산 증액

구 분(단위 : 억원)	'24년 예산(A)	'25년 확정예산(B)	증감액(B-A)	증감율(%)
총지출(①+②+③)	12조 9,907	13조 5,280	+5,373	+4.1%
① 인건비	10조 356	10조 5,082	+4,726	+4.7%
② 기본경비	3,978	4,215	+237	+6.0%
③ 사업비	2조 5,573	2조 5,983	+410	+1.6%
③-1 사업비(이관 고려시)*	2조 5,573	2조 6,237	+664	+2.6%

* 기금 이관 254억원(지·파 리모델링 247+민간경호 7) 고려 시 사실상 +664억원(+2.6%) 증액

- 기재부는 정부안 편성 단계에서 경찰청 지출 구조조정 목표로 2,184억원을 설정하였으나 1,390억원(63.6%) 수준으로 방어, 2~4차 심의 간 긴밀한 협의로 핵심 정책사업 예산 대부분 반영(+410억원, +1.6%)
- 특히, 증액이 어려운 기본경비는 과운영 가산금, 첫째 출산축하금 등 설득력 높은 항목 적극 발굴, 역대 최고 증액(+237억원, +6.0%) 달성
-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증액 없이 전 부처 감액만 이루어졌으나, 2년 연속 정부 총예산 증가율* 상회

* (정부 증가율) : ('22년) +8.9% → ('23년) +5.1% → ('24년) +2.8% → ('25년) +2.5%
(경찰청 증가율) : ('22년) +2.7% → ('23년) +1.4% → ('24년) +4.3% → ('25년) +4.1%

- (예산 집행)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
- '24년 총예산 13조 713억원 중 12조 9,840억원(99.3%) 집행하여 역대 최고 집행률 및 최저 이월·불용률 달성
-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일조

< 최근 5년 집행실적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114,261	120,491	123,189	125,074	130,713
집행액(률)	112,612(98.6)	117,229(97.3)	120,808(98.1)	123,721(98.9)	129,847(99.3)*
이월액(률)	313(0.3)	164(0.1)	180(0.1)	257(0.2)	74(0.06)
불용액(률)	1,336(1.2)	3,098(2.6)	2,201(1.8)	1,096(0.9)	799(0.6)

* 관서운영경비 반납 및 12월 카드지출건 등 처리가 미반영된 수치로 1월 말경 최종액 확정

- (건축사업 완료개소) 국민 친화적인 경찰청사를 위하여 청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사업 적극 추진, 완료개소 목표치(115개소) 초과 달성

건축사업 완료개소	'21년	'22년	'23년	'24년
	118	119	99	120

- (리모델링 등) 24회계연도 개시 후 1분기 내 예산 신속배정 및 시도청·경찰서 사업 진행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충북 영동서·전북 익산서 용동파출소 리모델링 등 총 91개 사업 완공
- (기금사업) '24년 초·중반 신속한 집행 변경 등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전북 정읍서·서울 염창지구대 신축 등 총 29개 사업 완공
- 신속한 건축사업 완료를 통해 국민과 현장직원들에게 고품격 시설 인프라 제공 및 속도감 있는 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

정책사업 뒷받침	신·증축방식 다각화	노후 경찰관서 환경개선 중·장기 계획
▶ 제주경찰교육기관(321억원)	▶ 서울 영등포서 통합청사 (영등포서 + 4기동단)	노후경찰서(30년이상↑) 25개소, 속도감 있는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연차별 신축 사업 목표제 수립·시행
▶ 직원관사(2개소 5억원)	▶ 부산 영도서 다부처 통합청사 (영도서 + 영도구 선관위)	
▶ 경찰수련원 신·증축 (강릉수련원 85억원 등 4개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등급
▶ 예산확보수준(40%)	54.3%	54.0%(99.4%)	S
▶ 예산집행률(30%)	75.5%	75.9%(100.5%)	SS
▶ 국유재산증가율(30%)	115개소	120개소(104.3%)	SS

- (예산확보수준 / 미달성) 3개 성과 지표 中 40%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확보수준 성과지표 달성도는 54.0%로 근소하게 지표 미달성
 - (재정 여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수 결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쉼 부처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복지(+10조 5,145억원) 및 교육(+3조 8,689억원) 분야 지출 확대 기조
 - (미달성 사유) 주요정책 동력 확보 및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3년 평균 예산확보 수준(54.2%)보다 높은 ①도전적 목표를 설정(54.3%) 하였고 ②국회 심사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감액(△84.2억원)만 반영
※ 최근 3년 국회심사 : ('22년) +93억원 → ('23년) +165억원 → ('24년) +412억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정 목표치 설정 및 전략적 예산확보 노력 경주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예산 국회 심사 대응	11월	○ 국회 예산안 심사 대응 - 행안위 : 전체회의(11.11. / 14.), 소위(11.19. / 20.) - 예결위 : 중합정책질문(11.7.-8), 부별심사(11.13~14), 소위(11.25.)	정상추진
○ 예산집행심의회 등	11~12월	○ 11월 예산집행 관련 현장방문(11.28.) ○ 12월 예산집행심의회(12.31.)	정상추진
○ 건축사업 중기계획 및 매뉴얼 등 수립	11~12월	○ '25~'29년 국유기금 중기사업계획 제출 - 수요파악(11.20.), 기재부 제출(12.10.) ○ 『경찰청사 건축업무 매뉴얼』 제작·배부 - 전국 경찰관서·교육기관 배부(12.18.)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경찰청 예산확보, 지출 등 정책과제와 연계성은 인정되며 특히 대표성이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기 집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부각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계획대로 추진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적극적인 대응 노력 및 협업 성과 우수 ▶ 타 기관과의 중복되는 예산에 대한 경찰의 우선순위 확보 등 우수한 수준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목표치는 3년간 평균치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적극성이 높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된 예산 증액으로 확인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소통 및 정책환류 노력이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 홍보 노력은 우수한 편이며, 부정적인 대내·외 의견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부각한다면 우수한 정책 홍보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7	○ (예산확보수준) 대국민 효과 중심으로 민생 침해범죄 및 현장경찰관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적극 발굴 ○ (예산확보수준) 기재부 중기 심의 등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출한도 최대 확보 추진	○ 자체 중기사업 설명회(~'25. 1월)
		○ 중기사업계획 수립(~'25. 1월)
		○ 기재부 사무관 대상 사업설명회 및 중기 심의(~'25. 2~3월)
		○ 예산안 요구서 작성(~'25. 5월)
	○ (예산집행률) 연례적으로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는 예산 항목에 대해 연중 관리하여 신속한 정책 집행 도모	○ 25년 예산 적기 집행을 위한 24회계연도 집행 항목별 분석('25. 1월)
		○ 25년 신속집행 계획 수립('25. 2월)
	○ (건축사업 완료개소) 예산 신속 배정·집행 변경 등 집행 관리를 통한 신·증축 완료 기여	○ 25회계연도 일반회계(시설·내진보강 등) 예산 배정(1월)
		○ 26년도 국유기금 공용재산취득계획 수립·제출(3월)
		○ 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협의·조정(4~5월)
		○ 예산 이월·불용 실태 점검(10~11월)

□ 주요성과

- (경찰청 소관 법안) 「도로교통법」(음주측정 회피 목적 술 먹는 행위 처벌), 「실종아동법」(CCTV 정보 등 제공요청권 신설), 「총포화약법」(도검 등에 대한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 등 국민안전 관련 법안 61건 국회 통과
- (타 부처 소관 법안) 국회 및 타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성폭력처벌법」(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 「국립묘지법」(경찰관 국립묘지 안장 확대) 등 민생범죄 근절 및 경찰 자긍심 제고 관련 법안 의결
- (규제개혁) △정부 규제개혁 방향과 △24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고려, 국민편익 제고와 국민안전 확보의 균형을 통한 ‘공감받는 규제혁신’ 추진
 -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PASS 앱) 법적근거 마련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허용^{적극행정} △수요응답형 버스 등 고령자 교통안전 서비스 확대 등 신산업·민생·복지 분야 규제 31건 적극 개선
 - － △국민 규제건의 활성화(36건 중 22건* 수용) △대내외 홍보 강화(24년 정부 홍보실적 ‘2위’ 수상) 등 규제성과의 국민 체감확산 노력
 - * 서바이벌 게임장 내 장비의 규제 완화(경찰청 규제 민원 2위) 등 국민 요구 적극 반영
- (현장 법률지원) △소송지원단 정식예산 확보(1억 3천)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 상향(3천 → 4천) △경찰법률보험 이용횟수 제한 폐지 및 총 보상금 상향(4억 → 5억) 등 직무상 분쟁지원 체계를 고도화
 - － 적극적인 현장 홍보로 보험 제도의 접근성^{지원만족도 5년 중 역대최고}을 제고, 현장이 자주 묻는 사례를 체계화하여 「상담집 발간」 등 교육자료 생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통합 법률·소송지원 이용자 만족도) 중점적인 정책홍보 노력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목표 미달성
- － 적극적인 홍보 노력은 있었으나 법률지원 분야 특성상 평가자의 기준이 엄격해 만족도를 높이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홍보 수단을 더 다양화하여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성과위원의 제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소관 성과지표인 홍보지표의 정량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적극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표 실적을 세분화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 상반기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보고	11월	○ 제551회 국가경찰위원회 보고 완료 (10. 30)	정상추진
○ '24년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12월	○ 2024년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보고(12. 18.)	정상추진
○ '24년 경찰청 규제혁신 최종보고서 작성 및 실적보고회 발표	12월	○ 2024년 규제혁신평가 실적보고서 (12. 18.)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선정 사유가 명확하고 측정방법도 다양, 그 연계성이나 적정성 등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돋보임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경찰청 소관 법령 입법대응과 타 부처 소관 법령 입법대응, 규제개혁, 송무업무, 법률지원업무 모두 수행 노력도가 탁월 ▶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인정
2-1-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이행 준수 양호
2-2. 적극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미흡	▶ 기능간 조정, 연결, 협업을 통한 추진성과가 매우 우수 ▶ 법률 개정 대응에서 각 기능에 지원한 부분은 보통임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보통	▶ 법률지원 분야의 상당한 정책 성과와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이용자 만족도 지표가 역대 가장 높은 81.6점을 기록했으나 목표치인 81.8점에는 아쉽게 도달하지 못함 ▶ 성과 측정을 위한 다양한 지표개발 등 노력이 돋보임
3-2. 정책효과성 및 기대효과	미흡	▶ 종합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평가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평가 ▶ 현장 법률지원 및 입법 대응을 적극적으로 수행 중
3-3.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	미흡	▶ 활발한 대외적 교류를 통해 원만한 입법 지원이 이루어짐 ▶ 카드뉴스 제작 배포 외 대내적 의견수렴에 대한 고민 필요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내외적 많은 실적을 내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관련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보완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8	○ 법률지원 서비스 내부 만족도 제고	○ 현장홍보 및 제도 의견홍보 활성화(연중 계속)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양성하기 위해 △ 교육훈련체계 재정립
△ 현장대응력 강화 △ 미래인재 양성 △ 교육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

<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 >

- ▲(교육훈련체계 재정립) 보직인증교육 시행 동료강사 제도 개편 등 국관 주도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정착
- ▲(현장대응력 강화) 물리력 대응훈련사격훈련 환경 개선 및 강화 / 교수자 역량 강화(수준연차별 위탁교육)
- ▲(미래인재 양성) 위탁교육 예산확보(57억원), 자체 국외.단기에 청년세대 우대 정책 도입
- ▲(교육인프라 확충) △제2중앙경찰학교 △제주교육기관 △수도권 현장대응 훈련센터 설립 추진

-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인 ‘교육 현장활용도(101.9%)’와
‘교육기관 심화과정 입교율(125.1%)’ 모두 목표치 초과 달성
- 양질의 교육훈련 제공 및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
확보와 공정한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기반 마련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지표설계 적절성) 실질적인 현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기관
입교율보다는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표로 보완 필요
- (대내·외 의견수렴 등) 현장 의견수렴 및 반영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내 대상은 많은데 비해 대외 대상 의견수렴은 부족한 실정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지표설계 적절성)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부합한 교육과의 중점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
- (대내·외 의견수렴 등)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을 개선
하도록 노력하고, 내외부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환류 강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024년 우수 현장학습모임 선정	12월	○ 2024년 현장학습모임 성과발표대회 개최 세부 계획 알림(12.2.) ○ 2024년 현장학습모임 최종평가 결과 알림(12.31.)	정상추진
○ 2025년도 경찰청 위탁교육 과정 선정	12월	○ '25년 경찰청 자체 위탁교육 선정 결과 보고(12.6.)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미흡	▶ 지표의 대표성, 연계성, 적정성이 부족함 ▶ 교육대개혁 추진에 부합된 과제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보직별 교육체계 변화 노력 우수 ▶ 교육 대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돋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이 정상 이행됨 ▶ 계획대로 추진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노력과 해외 교육기관 훈련 발굴이 돋보임 ▶ 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교육 내실화에 기여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두 지표 모두 달성함 ▶ 교육기관에서 배운 내용의 현장 활용도를 지속 제고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정책효과 인정, 향후 기대치에 대한 설명 부족 ▶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기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미흡	▶ 내부 교육생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 용역 시행은 돋보이나 국내외 다른 교육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정책 개선이 있으면 좋겠음 ▶ 대내외 의견수렴은 다소 부족한 측면 ▶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제도 개선에 기여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내 홍보 필요 ▶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노력이 다소 아쉬움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29	○ 교육과 중점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신규지표 설계	○ 교육기관 심화과정 입교율 대체 / 신규지표 신설('25.4월)
	○ 현장 의견 수렴(특히 대외)이 부족하여 활성화 필요	○ 대내외 의견수렴 방법 모색 및 환류 노력도 강화('25.10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조직개편 안착을 위한 차량·장비 지원
 - － (차량) 기순대 차량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58억) 및 승합 순찰차 330대 신속 배치, 형기대(255대)·광역정보(223대) 기존 보유차량 재배치
 - － (개인장비) 권총 등 제압장비 3,206정 및 안전장비 1만여개 보급
- 국민과 경찰의 안전을 위한 경찰장비 도입
 - － (전자충격기) 장비 단종과 노후화에 대응,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신형 테이저7 1,220대 보급
 - ※ '25년 1,039개 보급예정 : 신입 실사훈련 카트리지 3발 → 9발 확대
 - － (방검복제*) 지역경찰, 기동대, 형사 등 17개 기능에 38,980매 보급
 - * 다기능 방검복 / 내피형 방검복 / 찢림방지 목보호대 / 베임방지 재킷
 - － (중형방패) 흉기피습 등 대비, 지역경찰 맞춤형 중형방패 4,681개 보급
- 제복 경찰관 품격 제고 및 현장 편의 지원
 - － (혹서기 근무복) 폭염 대비 티셔츠형 근무복 도입, 현장 만족도 향상
 - ※ 전국 외근경찰 59,670명 일괄 시범 착용 / 쏘 경찰관 설문조사 91.2% 매우만족
 - － (아너박스) 치안현장에서 공무 수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 무상 지원
 - ※ 피복류 223벌, 제화류 77족, 외근장구류 83개 등 총 413건 지원
- '경찰 드론' 운용 기반 확대
 - － (운용범위 확대) 교통단속·관리, 범죄예방 순찰 등 '경찰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칙' 개정 및 '25년 시범운영 예산 4.8억 확보
 - － (신형 드론) 최신 LTE/5G기반 조종방식 추가하여 수색 범위 확대, 대형모니터와 영상분석 등을 갖춘 드론 관제차량 6대 추가 보급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홍보 노력) 폴넷 카드뉴스 게시 등 대내적 정책홍보 우수, 우수 현장장비 보급의 대국민 정책홍보가 다소 부족함
- (대내·외 의견수렴 노력) 전 경찰관의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노력이 우수, 다만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설문 조사 방식 개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대내·외 홍보) 신형 드론 도입,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영향 범위와 효과가 큰 개선사항들은 대대적으로 홍보 추진
- (의견수렴) 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 이외에 장비포털시스템 內 전 경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설문 조사 방식 등 적극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차세대 경찰장비보급센터 물류 시스템 구축	12월	○ 서울청 피복센터 內 차세대 물류 시스템 도입 및 개소	정상 추진
▶ 특장 등 개선된 신형 순찰차 보급	12월	○ 현장 경찰관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112테블릿의 화면이 차량 디스플레이에 현출되도록 하는 미러링을 적용, SUV 순찰차 100대 보급 완료	정상 추진
▶ 경찰차량 출장세차 만족도 등 설문조사	12월	○ '24.12월 설문조사 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최종 설문조사 결과는 신고 출동 등으로 세차 서비스를 연기한 차량이 완료되는 '25.2월 초순경 보고예정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경찰청 슬로건인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위한 핵심적 정책과제를 연계, 부서의 핵심업무를 대표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장비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이 큼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 준수도 우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업과 관행 혁신을 위한 노력도가 높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미흡	▶ 우수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지표 발굴 등 적극성 우수, 다만 경찰장비 만족도 한계점 임박으로 목표치 미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장비개발 및 보급을 위한 예산 증액성과 우수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설문조사,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대·내외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며 정책 환류에 충실한 것으로 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대내적 홍보와 함께 대외 정책홍보 노력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0	○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 현장경찰관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25.7)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 경찰장비 만족도 평가 방법 개선('25.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역량 제고로 현장 대응력 강화
 - 헬기 요청 간소·활성화 등 △대테러·재난관리 △실종자 수색 △변사자 인양이송 △수사·교통 등 각종 치안현장 헬기 활용 확대
 - 「경찰항공 3중 안전체계」의 안정적 구축·정착으로 31년 무사고 안전운항 목표 및 관리역량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외부위원(3명, 평균 93.33점), 내부위원(6명, 평균 85.87)의 평가점수 분석 결과, 조직 내부적 항공업무 인식개선 및 평가제고 방안 부족
- 분과·부서별 평가방식에 따른 항공업무의 상대적 한계는 해결과제

□ 개선·보완 필요사항

- 항공 업무상 대외·내 협력 및 지원 다각화 방안 지속 추진
- 경찰 내부적 인식 향상을 위한 헬기 요청 안내 및 홍보영상 제작, 주간업무보고 수시 발굴 기재 등 항공경찰 업무 적극 홍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 헬기 예방정비 분석 및 향후 개선대책 등 계획 수립	11월	○ '24년 경찰헬기 주요결함 및 분석 후, 서울시·도청항공대 공문 하달·공유 전파	정상 추진
○ '24년 경찰항공 교육훈련 분석 및 '25년 교육계획 수립	12월	○ '24년 교육훈련 분석 후 '25년 교육계획 수립	정상 추진
○ 마일리지심의 및 교육훈련 강화	연중	○ 항공경찰 치안현장 우수사례 마일리지 매월 심의·포상, 연간 22개 과정 332명 교육훈련	정상 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계획수립이 적절하고 현장 중심의 대표성, 연계성, 적정성 인정 ▶ 컨설팅 의견반영 및 적절한 지표설계가 이루어졌다 판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치안현장 헬기지원, 항공 안전관리, 예방정비 활동 수행이 원활히 추진되고 부서의 노력이 확인 ▶ 경찰항공 3중 안전체계 구축 및 치안현장 헬기지원 확대 등 능동적인 활동에 노력이 많이 깃들여 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기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준수 확인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 타부처, 관계기관간 긴밀한 업무협력 등 노력이 인정되고 예산절감 및 자체 정비프로그램 등 능동적인 추진 노력 인정 ▶ 대외협력 외 대내협력과 지원에도 노력 바란다는 의견도 있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성과과제의 상향 목표설정 및 적극성과 초과달성 인정 ▶ 성과목표 달성 평가기간을 2개월('24년 1~10월) 제외한 결과 산출로 평가자 오해 소지, 향후 기재 방식 변경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전년 대비 헬기 지원 횟수는 증가 되었지만 시간은 감소 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산불 미발생 등 사유 설명 ▶ 향후 다각적 활용 노력과 대응 역량 제고가 기대된다는 평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해외교육 파견 및 국내외 다양한 기관과의 mou 및 협업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행 건의 ▶ 헬기 이용 만족도조사에서 지원요청기관(외부)의 임무완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길 바램 ▶ 헬기 운용연한 및 사고 관련 점검 및 교체 등 개선이 시급한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우수사례 적극 발굴 등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확인 ▶ 31년 무사고 달성, 치안현장 헬기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국내뿐만 아닌 영문으로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해외홍보도 진행, 우리 경찰항공의 우수함을 홍보했으면 좋겠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1	○ 치안현장 항공경찰 우수사례 등 업무 대내·외 홍보 강화	○ 경찰헬기 요청 안내영상 및 항공경찰 활동 등 홍보영상 제작('25.9월) ○ 치안현장 헬기 활용 우수사례 등 경찰청 주요 업무보고 발굴 기재(연중)
	○ 대내·외 협력·지원 강화로 항공경찰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	○ 경찰인재개발원의 '헬기모의비행훈련센터' 개소로 타기관 조종사 교육·훈련 지원(연중) ○ 헬기 이용 만족도 조사 시, 외부기관 만족도 조사 참여도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실질적 감사 활동 전개)** 직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매일 관서별 자체감사·감사첩보 제출 의무화 등 본연의 감사 역할 전개
 - ▶ **(직무점검 확대)** '23년 이전 평균 7.7회 → '23~'24년 평균 20회로, 159.7% 증가
 - ▶ **(자체감사 체계화)** '24년 경찰서 자체감사를 통해 총 46,480건의 직무오류 시정
 - ▶ **(감사첩보 활성화)** 우수첩보는 기능에 직무개선 제언 → '24년 52건 제언, 28건 개선 완료
- 또한, 전문성이 필요한 회계·시설 분야 특성상 사실상 감사 취약 지대였으나 '24. 5월 회계·시설감사계를 신설, 체계적인 점검 추진
 - ※ △신증축 청사 시공실태 △경찰 시설물 내진보강 실태 등 전문분야 감사 실시
- **(선제적·근본적인 비위예방 추진)** 감사과 내 비위예방 전담부서를 신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비위 관리시스템 구축
 - 갑질 판단기준 마련, '화해·조정위' 도입으로 상호 존중문화 조성
 - ※ 제도 시행(9. 23.) 후, 갑질 사건 34건 중 화해·조정 11건 성립
- **(적극행정 강화)** '경찰서장 직무관리 체크리스트' 제도 안착과 물리력 행사 관련 적극행정 면책심사 의무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정책 추진 시 대내·외 의견수렴·환류 및 홍보 강화 필요
- 내부비리신고 실적과 적극행정 면책 실적 지표가 단순 양적인 접수 건수로 구성되어 있어, 실적 증가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다소 모호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각종 정책 추진 시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홍보 계획을 필히 수립
- 내실 있는 내부비리신고센터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을 위해 단순 양적 건수 외에 질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표 개선 검토
 - ※ 내부비리신고에 대한 조사 징계 등 유의미한 조치건수, 적극적 법 집행 관련 면책건수 등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중간관리자 직무관리 체크리스트 도입·시행	11월	○ 사건배당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크리스트 개선 계획 수립(10. 8.)	정상추진
○ 경찰 회계감사 전문가 과정	12월	○ 경찰관 25명, 삼일아카데미 경찰 회계감사 전문가 심화과정 교육 실시(10. 21.~25.)	정상추진
○ 청렴 우수관서(사례) 경진대회 개최	12월	○ 전국 시민청문관 워크숍 개최(11. 19.), 청렴 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표창 수여	정상추진
○ 기본과 원칙에 관한 테마 감사점검 / 경찰서 직무감사점검 분석	12월	○ 기본과 원칙에 관한 감사 4회 실시 ※ ①지역경찰 전산 업무역량 ②경찰수련원 ③강사료 지급 실태 ④사격장 폐탄두 관리 실태 ○ 경찰서 감사 분석(10월) ※ 11월 공통감사로 제외, 12월 진행중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조직문화 적립에 적합한 과제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가 상당히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모두 추진계획대로 정상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우수	▶ 대내외 협업을 통해 사전 점검, 예방 감사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우수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감사예고, 경감급 계팀장 교차 감사 등 조직 내 비위를 예방하고 관리자급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이 돋보임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환류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대내외 홍보 측면은 다소 부족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2	○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홍보 강화 필요	○ 각종 정책추진 시 의견수렴·환류 및 정책홍보 계획을 필히 수립하여 추진('25. 10월)
	○ 내부비리 신고 실적, 적극행정 면책 실적 지표 개선 검토 필요	○ '25년 정책과제 수립 시 개선 조치('25. 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고위직 엄정 조치> 외근 정보활동 강화 및 감찰정보 수집 활성화 등으로 고비난성 행위에 대한 사정,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
- <비위요인 사전 차단> 종합반은 수집된 감찰 정보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외근에게 상시 공유,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 및 조치(감찰 착수, 시정권고 등)하여 비위 요인 사전 차단
 - 외근들은 총경 이상 지휘부의 업무 관심도 등 동향 파악과 정보 활동(특별점검, 진상확인 등)에 집중, 지휘관을 면밀하게 보좌
- <감찰정보 관리 체계화> 각 담당 외근이 관리하던 감찰정보 분석 업무를 종합분석반에서 전담, ▲신속한 조치를 위한 감찰정보심의회 운영 확대(매월 1회→매주 1회) ▲후속 조치 경과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사건 처리 단축> 전담 조사부서 운영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 제고, 감찰관 4명이 감찰 사건의 80%를 처리하면서도 처리기간 35% 단축(87일→57일)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업무체계 개편 및 감찰정보 활성화를 통해 감찰정보 수집건수와 유가치 첩보 비율은 증가하였고 모든 성과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 감찰조사 또는 특이동향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첩보 비율은 여전히 낮은 실정으로, 대외적 성과 체감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감찰정보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시도청·경찰서 감찰관 대상 순회 교육을 지속 진행하는 등 소 감찰관 업무역량 상향 평준화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시기별·테마별 업무중심 감찰활동(특별점검 등) 전개	연중	○ 시기별·테마별 특별점검 - 과장 중심 보고체계 관련 특별점검(11월) - 인사 부정 방지를 위한 특별 감찰활동(11월)	정상추진
○ 감찰정보심의위원회(정가임시회의) 운영	연중	○ 감찰정보심의회 정기·임시회의 개최 - 11월 정기회의 4회, 임시회의 6회 - 12월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1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	보통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정성이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업무체계 개편을 통한 적극적 감찰활동으로 정책과제를 수행
2-2. 추진계획 준수도	93%	▶ 계획대로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 여러 대외 기관과 협업하고, 적극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였으며, 목표치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정책수행 노력은 인정되나 가시적 성과 창출 확인이 어려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워크숍 개최, 컨설팅 실시 등 대내적인 소통 노력은 인정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정책과제 수행노력은 인정되나 정책 홍보 노력은 제고할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3	○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비위 예방 등에 대한 지휘부·관리자 관심도 제고	○ 정성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효과성 건인('24. 12월)
	○ 고가치 감찰정보 비율 향상	○ 감찰정보 평가체계 개편('25. 2월) ○ 감찰관 교육 등 업무역량 상향 평준화 추진(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제3차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 － 「제2차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 마지막 해를 맞아 과제들이 책임감있게 완수될 수 있도록 ’24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 △’24년 시행계획 수립(’24.2월) △’24년 성평등 정책 이행점검 실시(’24.2.5·9·12월)
 -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및 기존 정책의 성과·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차 기본계획」 및 ’25년 시행계획 수립(’24.12월)
- 성평등 정책의 자율적 추진 기반 조성
 - － 본청 주관 국·관 및 시도청 성평등 목표 이행현황 점검, 성평등토 보고·자문 등 환류
 - ※ 「기능·기관별 성평등 목표수립 종합계획(’21-’24)」 최종점검 및 결과분석(’24.10월)
 - － 성평등 수준 진단을 위해 「경찰청 성평등 지표」 기반 수준 측정 실시(’24.5월)
-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경찰 정책의 성주류화 확립
 - － 경찰 정책 및 법령·제도·조직문화 등 경찰행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제도 운영 지원
 - － 경찰 정책 홍보물·콘텐츠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총 4,144건 실시, 성차별적 이미지·용어 사용 등 사례 901건에 대해 개선 조치
 - ※ ’23년 대비 △검토건수 3,568→4,144건(576건 ↑) △반영률 87.9→98.7%(10.8%p ↑)
-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운영 고도화
 - － 경찰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외부 공감대 형성 및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해 「2024년 경찰청 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2.26.), 직책·직무별 맞춤형 성평등교육 추진
 - － 경찰 직무 특성을 고려한 직급·직무·과정별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조직 내 성평등 사각지대를 해소,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성평등 같이가치, 젠더통합 간담회) 현장직원 간담회 개최하여
△성평등 조직문화 △불합리한 관행 △성평등 정책 등 의견 수렴
 - (젠더 뉴스레터) 일상 속 성차별적 사례 발굴·개선 및 성평등 정책·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젠더 뉴스레터 「젠더를 잇-다」 정기 발간
 -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체계 강화
 - 조직 내 ‘스토킹’ 사건 예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방지와 그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24.6월)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및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구성원의 행동수칙」 리플렛 업데이트 발간('24.12월)
 - 조직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20년) 후, 매년 신규
과제 발굴 등 성범죄 대응 체계 고도화 및 ‘성범죄 발생관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 실효성 제고
- ※ '25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시행('24.12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별영향평가) 각종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 점검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후 의뢰하는 경우 다수
- (성평등 교육) 폭력예방교육 등 반복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피로감·거부감 및 사이버교육 진행의 경우 몰입도·집중도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선·
보완하고,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홍보 강화 필요
- (성평등 교육) 교육 이수율 양적 확대 및 교육 내용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 직무·직급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 개발 중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5-2029)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2월	○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5-2029) 및 '25년 시행계획 알림(12.26.)	정상추진
○ 젠더뉴스레터 「젠더를 잇-다」 정기 발간	반기별	○ 젠더뉴스레터 10호 발간(12.31.)	정상추진
○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분기별	○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12.19.)	정상추진
○ 성평등 정책 이행점검	연중	○ 경찰청 성평등 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24년 4분기)(12.18.)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미흡	▶ (대표성, 연계성) 국정과제, 경찰청 주요업무계획에 미포함되어 차등 점수 대상 ▶ (적정성) 전문가대면컨설팅 수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는 인정
2-2. 추진계획 준수도	98%	▶ 일부 추진계획이 일정보다 늦어짐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 목표 이행점검 및 성평등 수준 측정이 협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외부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협업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비율지표로 상당한 적극성 인정되며, 100% 달성 인정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기본계획·시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과제 발굴 및 적극 추진 중으로 보이나, 성과지표 외에 정책과제 효과에 대한 평가 어려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의견수렴 실적 우수하나, 정책환류된 사항 확인이 어려움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대외홍보 부분이 아쉽습니다.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4	○ 성평등 관점의 경찰 정책 홍보를 위해 대외 콘텐츠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강화	○ '25년 경찰정책 콘텐츠 성별영향평가 운영계획 수립중으로 경찰 홍보물에 대한 관리 강화 ('25.2월)
	○ 직무·직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 참여율 및 효과성 제고	○ 경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육 이수 관리를 위해 '25년 교육 기본 계획 수립('25.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인권영향평가 확대) 기존 경찰청장에게만 부여되었던 인권영향평가 권한을 각 시·도경찰청장까지 확대 시행
 - － 「경찰 인권보호 업무체계 개선계획」('24. 9월)의 체계적 이행과 인권영향평가 전국 확대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 (11. 20. 시행)
 - － ‘집회시위 현장 점검단’도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까지 확대·운영 하고, 시·도청 인권영향평가(집회시위 현장 점검단 포함) 실적을 '25년부터 관서 성과지표에 반영
 - (인권문화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해당 주간에 ‘인권문화제’('24.12.9~13.)를 개최하여 경찰의 인권 의지와 관심 제고
 - － 인권아카데미, 런치시네마, 인권영화 상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 향상에 기여
 -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강화를 위해 '24년부터 국가인권위 등이 참여하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운영
 - －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기 위해 「경찰인권보호규칙」 (제18조3 신설) 개정(11.20.)을 통해 협의회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24년 4회 인권강사양성과정 총 67명 교육을 하여 인권강사 42명 양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및 목표설정이 필요
 - － 다양한 인권정책 및 제도를 발굴하고, 대·내외 협업과 소통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인권정책 운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권문화제 기간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
 - － 기존, 5일간의 한정된 런치시네마·인권아카데미 프로그램 일정에서 탈피, 국민과 경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연중 다양한 인권행사 추진
- '24년 인권교육 점검 결과, 교육기관의 보수·직무과정에 '인권교육' 미개설 등 미비점 확인 → 「'25년 경찰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포함 요청(교육과) 등 「경찰인권보호규칙」* 준수 독려

* (제20조의3) 교육기관 입교생은 보수·직무과정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 이수 必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청 인권문화제 운영	12월	○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주간 행사	정상추진
○ 인권소식지 발간	12월	○ 인권소식지 '겨울호' 발간	정상추진
○ 인권아카데미(3, 4차)	12월	○ 3차 아카데미(강철원 주키퍼) 진행, 4차(김재왕 변호사) 순연	일부추진
○ '25년 인권교육 사이버 콘텐츠 제작	12월	○ 교육과와 협업, 인권위 사례 등 콘텐츠(3H) 제작	정상추진
○ 국가인권위와 협업, 경찰인권 교육위원회 개최	12월	○ 인권위 등 내·외부전문가와 협의회 개최(11.28)	정상추진
○ 「경찰인권보호규칙」에 '경찰인권 교육협의회' 관련 규정 신설	12월	○ 「경찰 인권보호 규칙」 개정안 국가경찰위 상정·의결(11.4.), 시행(11.20.)	정상추진
○ 경찰청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안건 상정 활성화	연중	○ '24.11월 인권영향평가 안건 3건 상정·자문 (2024년 전체 16건 상정)	정상추진
○ 국가인권위·인재원과 협업, 인권 교육강사양성과정 운영(총 4회)	연중	○ 인권교육강사양성과정 운영(4~11월, 4회, 67명)	정상추진
○ 경찰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점검	연중	○ 전국의 인권교육 현황 실시간 점검·피드백(수시)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지표설계가 적절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계획 수립 이외에 실제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알수 없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93%	▶ 적극적인 노력이 인정됨 ▶ 외부 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부 협업은 다소 모호하며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계획이 지속 수립되는 반면 실제 인권의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이해하기 어려움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미흡	▶ (적극성) 신규지표일 경우라도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상'으로 평가 가능, 따라서 일부 그렇지 못한 지표는 감점 ▶ (달성도) 감점 없음
3-2.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정책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는지 확실히 인지하기 어렵고, 향후 기대효과가 모호함
3-3.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미흡	▶ 내부적으로 인권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나, 대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분위기에서 경찰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소통이 더 필요함
4.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대외 정책홍보 노력이 다소 미흡해 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5	○ 추진계획 일정을 업무실정에 맞게 재설정	○ 25년 제1차 인권아카데미('25.4.)
		○ 현장시민 인권보호관 교육 예정('25.5.)
	○ 신규지표의 경우라도 전년대비 10% 상향된 목표설정 필요	○ '24년 인권진단계 신설 등 인권업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년과 차별화되고, 상향된 지표로 설정 예정('25.2.)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순직·공상 경찰관 예우 강화로 자긍심·사명감 제고,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 <100원의 기적> 동료들의 자발적 참여로 순직경찰관 자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100원의 기적’ 모금 전달식 개최(유가족 18세대)
※ '24.10월 기준 101,133명(참여율 70.8%) 참여, 月 5,549만원 모금
 - <장례지원비 현실화> 1인당 1,000만원씩 지급되는 장례지원비 현실화 추진, 1인당 단가 1,300만원으로 증액 반영(92백만원↑)
 - <공상치료비 지원제도 개선> 공상치료비 지급단가 현실화 및 비급여 지원항목 확대 등 「특수요양급여비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
 - <특별위로금 지급기간·대상 확대>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기간 확대(병가 등 미출근 기간→공상기간 전체) 관련 「경찰복지법 시행령」 개정
 - <순직·공상 자녀 장학금 지원> 순직·공상 자녀 대상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18개 재단, 총 22억 6,500만원)
 - <합동 안장식> 6.25. 전사경찰관 유해발굴 안장식('24.6. 27. 대전 현충원), 강경전투 전사경찰관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 지정(8. 20.)
-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아산경찰병원 건립 추진
 - <특수건강검진 항목 확대> 야간·교대근무자 특수건강검진 내 갑상선 호르몬 검진 항목(분진·매연 관련 호흡기 질환) 신규 도입
※ 1인당 검진비 증액('23년 121,493원 → '24년 141,493원 / 15억↑)
 - <마음건강관리> 경찰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경찰관 정신건강진단(MHAPI검사) 활성화 △자살시도 전력자·위험군 집중관리

-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공상경찰관 간병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경찰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배 확대 운영(44개→88개)
- **<아산경찰병원 건립 추진>** △ 경찰병원 건립 사전절차 단축 및 수도권 외 지역예의 경찰병원 건립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경찰 복지법 개정('24.2.20) △ 건축분야 최초 신속 예타 조사 대상 선정(5.2)
-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수당 현실화로 사기 진작
 - **<보수 현실화>** 경정 이상 계급에 대해 공안직 수준으로 기본급 상향
 - **<수당 신설>** 인사처·기재부와 지속 협의 등을 통해 '24년 대화경찰수당 신설, '25년 현장경찰관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만원) 年117억원 신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수련원·어린이집 등 주요 복지시설 확충
 - **<경찰수련원>** 신안·강릉·남해·대구 경찰수련원 신증축 사업 추진
 - **<직장어린이집>** 제5차 어린이집 신규 신설(18개소/총사업비 468억) 추진
 - **<타 기관 파견자 주거지원>** 신규 발굴 및 '25년 예산 확보(3억원)
- 30년 이상 장기재직 경찰관 대상 호국원 안장자격 부여(국립묘지법 개정)
- 저출생 해소를 위해 '25년 첫째 출산 축하금(맞춤형복지) 신규 예산 확보 (26.7억원) 및 '24년 난임지원비·태아산모검진비 지원횟수 2배 상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미흡한 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 중이나 여전히 타 공무원에 비해 자살률이 높은 실정
- **<원인분석>** 경찰은 트라우마 등 대표적인 정신건강 고위험 직군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리상담·지원이 필요, 소방·해경 등 타 직군에 비해 1인당 마음건강증진 예산 및 심리상담 등 지원 주기가 길어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경찰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 관련 예산 확보 및 종합계획 수립·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경찰관서 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 점검계획 수립	'24.12월	○점검 지시 하달(10.31.)	정상추진
○'24년 퇴직예정경찰관 가이드북 제작	'24.12월	○계획 수립(11.6.)	정상추진
○'24~'25년도 경찰관 전직지원 컨설팅 용역 계획 보고	'24.12월	○계획 수립(11.15.)	정상추진
○'24년 경찰전직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24.12월	○성과 보고(12.30.)	정상추진
○'25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	'24.12월	○계획 수립(12.31.)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심리상담과 퇴직 후 취업 외에 현장 활력에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 지표의 설정이 필요함 ▶대표성과 연계성이 우수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가 인정됨 ▶다양한 시책 및 계획으로 과제 수행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98%	▶추진계획 일부 지연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여러 부처 및 기관과 협업하고, 신규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노력을 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목표치 초과달성 등 성과 달성함 ▶목표치의 적극성과 성과달성도가 인정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순직 공상 경찰관 예우 강화 및 보수 현실화 등 정책 효과가 우수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이 인정됨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에 환류한 실적이 불분명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언론보도 등 정책 홍보에 노력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6	○ 경찰 인원수 대비 경찰수련원이 매우 부족, 현장경찰관 복지증진을 위해 수련원 확충	○ 강릉수련원 증축('24년 착공), 신안수련원 신축(설계중), 남해수련원 신축('27년 착공 목표), 대구수련원 신축(설계중) 사업 적극 추진
	○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아산경찰병원 신축 추진	○ 신속 예타조사 대상 선정('24.5.2), 충남도·아산시와 공동대응을 통해 신속예타 대응('25년 상반기 신속예타 통과 목표)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모두와 소통·화합하는 행사를 추진, 치안현장의 활력을 제고
 - <경찰의 날 행사> 창경 이래 최초로 경찰청 청사 내 기념행사 개최, 경찰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노고를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국에 전달하는 한편, 금년 리모델링 완료한 ‘참수리 홀’에서의 행사 진행으로 예산 절감 및 동원인력 축소 효과
 - <치안현장방문> 18개 시도청, 45개 경찰관서를 경찰청장이 방문 격려하여 현장의 활력과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 공용시설인 ‘어울림마당’, ‘참수리홀’을 전면 리모델링 하여 경찰청 전 기능의 정책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 재개관식 계기 직원 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소통화합의 장 마련
- 첨단기술에 기반한 청사방호 역량 강화, 인적·문서보안 강화 도모
 - △ 생체인식(워크스루) 출입통제시스템 구축(본청) △ 전동게이트·레이저스캐너 등 방호설비 강화(전국 34개소) △ TTA 인증된 CCTV로 보안시설 교체 △ 방호인력 추가확보(’24 601명 → ’25 622명)
- 친환경·사회적 약자 보호 기조에 부합하는 청사 환경 개선
 -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82개소 195대) △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로 전력부하 관리(10개소) △ 장애인의 치안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기(8개소) 및 편의시설(149개소) 설치
- 일·가정의 균형 및 건강한 복무관리로 업무효율성 향상
 - 권장연가제 15일로 확대, 계절별 휴가 운영 및 각종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연가 활성화 도모, 초과근무 관리로 합리적 근무시간 운영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경정·5급이상 관리자 연가사용 실적 목표 소폭 미달
 <결과 실적치> 목표치 55.4% 대비 55% 달성으로 목표치 미달 ('24.10.31 기준)
- 지휘부 교체 등 조직변화 시기에는 관리자 업무책임 강조로 인해 관리자 연가사용율은 통상 하락하는 경향 (3년 평균치에는 달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 계절별 정기휴가 독려, 명절 전후 휴가 사용 권장,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 한편,
- 연가활용률 달성 목표치를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상세하게 설정하고, 다른 구체적 지표도 추가 개발하여 전반적인 복무문화 반영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주무관 노조 임금교섭 체결	10~12월	○ 경찰청-경찰청주무관노조 간 임금협약 체결(12.26)	정상추진
○ 초과근무 부당수령 현장 점검	10~12월	○ 전 경찰관서 복무실태 점검(11. 25~12. 14)	정상추진
○ 생명존중대상 시상식	12월	○ 경찰청 사례 5건 선정(11.4), 시상식 개최(12.5)	정상추진
○ 하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12월	○ 하반기 베스트 경무인 27명 선발(12.24)	정상추진
○ 주요 치안현장 방문	연중	○ 경기북부 지역 치안현장 방문(11.22) ○ 대구 지역 치안현장 방문(12.3)	정상추진
○ 사랑나눔 운동	연중	○ 사랑나눔 봉사왕 선발(12.16) ○ 크리스마스 쉴 모금(~12.6), 대설 피해 성금모금(~12.20) 등 성금모금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대표성 및 연계성 우수 ▶ 추가적으로 구체성을 갖는 지표 발굴 노력 필요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전반적으로 정책과제 수행 노력이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95%	▶ 추진계획 일부 지연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적극행정 및 협업 노력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미흡	▶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 인정됨 ▶ 경정급 이상 연가사용실적이 목표치 소폭 미달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정책환류도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홍보 노력 인정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7	○ 연가활용률 제고를 위한 현실적 방안 강구	○ 부서원 대상, 각 부서별 여건을 고려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 가능한 대책 마련(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성과·역량 중심 인력관리) 젊고 역량 있는 동료들이 업무에 집중하고 조기에 고위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근평·승진제도 개선·시행

△ 시험·심사 비율 조정 △ 계급별 최저승진소요연수 단축에 따른 근무평정 반영기간 조정 △ 경력평정 만점 기간 단축 △ 가점평정 제도 축소·폐지 등

- － 아울러, 연 1회(연말) 정기특진 중심으로 운영하고, 꾸준히 성과를 보인 사람이 승진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공적마일리지제」* 도입

▶ 기능별 필수·중요업무 실적(성과)을 계량화하고 정기(매월·분기 등) 평가하여 누적 실적 우수자에게 인센티브(추천자격, 선발자격)를 부여하는 제도
▶ 마일리지 기준은 본청 기능별 주관 전국단위 통계와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책정, 전국적으로 균일한 공적 우수자에게 특진기회가 부여되도록 설계

- (현장 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경찰청장 표창의 영예성 확보와 현장의 사기 증진을 감안, 현장 우수사례 표창 비율을 확대(52.9% → 55.8%)

- － 그밖에 청룡봉사상·올해의 공무원상의 경우에도 지역경찰·수사 부서에서 적극 선발하는 등 현장의 업무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

-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여성경찰관 채용목표제」('27년까지 17% 달성) 관련, 충원계획 반영을 통해 '24년 여성경찰관 비율 15.8% 목표 달성

- － 또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27년까지 8% 달성) 관련, 심사승진 제도 개선을 통해 '24년 여성관리자(경정 이상) 비율 7.4% 목표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심사·시험 승진 비율 조정 등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역량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 － 경찰청 전체 직무만족도가 하락(-8.1점)하는 추세로 인해, 인사직무 만족도 또한 하락하여 목표치(80.8점)의 90% 달성한 것으로 판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사직무만족도) 인사분야 만족도는 개인적인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 개선 추진

<주요 추진 사항>

- ▶ (전문가 컨설팅) 인사행정분야 전문기관 또는 관련학과 교수 등의 진단을 통해, 인사분야 노력도 및 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
- ▶ (타부처 등 의견수렴) 타부처 인사부서 미팅, 전국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인사분야 성과지표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도 연말 정기표창 계획 통보	11월	○ 연말 표창 1,000매를 각 국관 및 시도청에 배정수여	정상추진
○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연중	○ 4/4분기 칭찬플랫폼 390매 발부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이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책과제 수행노력도가 보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이 정상 이행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적극행정 노력도가 준수합니다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미흡	▶ 성과달성도가 100% 미만임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책 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가 준수합니다.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가 준수합니다.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홍보 노력도 우수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8	○ 인사분야 직무만족도 향상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 지표 발굴 추진('24년 2월) ○ 타부처, 인사담당자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 제고 노력(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주요 정책 및 경찰 활동에 대한 효과적 홍보와 이슈대응 등 적극적 위기 관리로 부정 이슈 확산 차단에 주력하여 국민 신뢰 기반 확보
-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관련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언론-SNS 선순환 홍보도 활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음
 - (온라인 지표 향상) 경찰 정책·활동 홍보를 통해 유튜브 ‘좋아요’, 인스타그램 ‘공유·도달수’ 등 국민 상호작용 지표수가 증가(전년比)
 - ※ [유튜브] 커뮤니티 좋아요 5,205개(’23) → 29,065개(’24)
 - [인스타그램] 공유 23,120회(’23)→29,098회(’24) / 도달 10,975,019회(’23)→19,059,045회(’24)
 - (부정 언급량 감소) 적극적 부정이슈 대응 활동으로 경찰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게시글上 부정어 언급량이 30% 감소(전년比)
 - ※ 2,287,142건(’23)→1,598,765건(’24)
 - (선순환 보도 증가) 언론-SNS 순환 홍보 체계 확립을 통하여 경찰청 영상·카드뉴스 등 141개 콘텐츠가 언론 약 3천여곳에서 보도되며 확산
 - ※ 전년 동기 대비 1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23년 대비 15건 증가)
 - (대외평가) 대통령실 주관, 부처별 기획홍보 실적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올해 4차례 평가中 2회)하는가 하면,
 - (사)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디지털고객만족도 사회안전부문’에서도 1위를 수상(3.15.)하는 등 정책 소통 부문 역량 인정

□ 미흡 원인 분석 결과

- ‘비상계엄 사태’,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등 각종 국가적 이슈로, 주요 정책이나 경찰 활동에 대해 좀 더 홍보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
- 또한, 일부 경찰 관련 부정이슈 발생 시, 조직 전체로 부정 이미지가 비화되어 그간 쌓아온 긍정 이미지가 상쇄되는 현상이 발생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철저한 원인 분석 및 사례 관리를 통하여 위기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숨은 노력을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현장 활약상 홍보를 통한 경찰 자긍심 고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로 체감 치안을 향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이미지를 보다 탄탄하게 구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 방송·영화 제작진 교류지원 성과 및 '25년 활성화 계획 수립	12월	○ 서울영상위 PD·작가 등 미디어 제작진 대상 - ① 사이버수사대, '도박 수사 사례' 강연(55명, 4.26.) - ② 폭력계 형사, '실종사건 수사 사례'(20명, 7.4.) ○ 서울영상위 의견 수렴, 25년 계획 수립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를 국정과제 및 주요업무계획과 잘 연결함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인정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수행 노력도 인정, 다만 노력도에는 해당 부서의 노력 뿐만 아니라 일부 관련 국관의 노력도도 함께 포함 ▶ 데이터에 대한 근거자료 확인 필요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준수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적극행정 및 협업 노력이 인정되나, 홍보에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 ▶ 업무추진 과정의 협업 및 노력도가 상당히 인정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목표치가 대부분 적극성 '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였고 모든 지표에 대한 추세치가 목표치를 상회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경찰 정책·활동 홍보로 국민 상호작용 관련 온라인 지표수 증가, 부정이슈 대응으로 경찰관련 키워드 부정언급량 크게 감소 ▶ 이밖에 순환 홍보체계 확립으로 언론-SNS 동시 홍보건수가 상당부분 증가한 점 등이 높이 평가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워크숍이나 영상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내외 의견수렴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의견수렴 및 홍보에서 추가적인 노력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상당히 인정되고 타기능과 협업한 홍보활동이 잘 이루어진 것 같음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39	○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 위기 유형별 사례 분석 및 D/B화(연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교육자료 개편('25.6월)
	○ 현장 활약상 홍보를 통한 자긍심 고취	○ 현장 밀착 취재 KBS 다큐멘터리 방송('25.1월)
		○ 온라인 현장 경찰 시리즈 콘텐츠 제작('25.6월)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로 체감 치안 향상	○ 중점 홍보 정책 선정 및 기획홍보 전략회의체 발족('25.6월)
		○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관련 기획홍보('25.10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치안정책국 업무를 총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주무 부처 · 타 부처 · 연구기관 등과 협업 및 적극 외연확대 하였으며, 과학치안 정책 기반 마련과 실행을 통해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
- 정책과제의 5가지 성과지표 모두 적극성 기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치로 설정하였고,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등 성과 향상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협업 · 외연 확대(40%)	14.7점	17.3(초과달성)
○ R&D 성과평가 결과(30%)	80점	81점(초과달성)
○ 시도청 우수사례 발굴건수(10%)	38건	38건 발굴(목표 달성)
○ 아이디어 공모전 발굴건수(10%)	335건	371건 접수(초과달성)
○ 전문교육 이수율(10%)	50%	51.2% 이수(초과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을 위한 공감대확보 지표 모두 달성하였으나,
 - － 현장의 과학치안 필요성에 대한 막연함과 현안 해결 중심의 업무구조로 인한 시도청 우수사례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율 저조
 - －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전문교육 진행함에 따라 순수 교육비 외 지원불가하여 교육생 여비 부담 증가로 교육참여율도 저조한 실정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양질의 시도청 우수사례 · 과학치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존 포상 외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특별승진 마일리지 활용)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과학치안 전문교육(KAIST) 참여율 확대를 위해 교육예산 추가 확보하여 시도청 여비(식비 · 숙박비) 부담 해소 필요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경찰청 주관 '25년도 R&D 자체 평가 계획 수립	11월	○ '25년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24. 11.) 및 제출('24. 12. 24.) * '25년도 경찰청 중간평가 대상사업은 총 4건이며 경찰청은 평가위원의 사전교육 및 평가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과기부에 제출하여야함	정상추진
○ 과기정통부 주관 '25년도 각 부처별 R&D 자체평가 계획 점검	12월	○ 경찰청이 제출한 자체평가 실시계획을 검토하여 최종 2차까지 과기부 상위점검 실시 *1차 상위점검결과 통보('25.1.3.)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 ·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핵심 정책과제와 연계된 중요 과제에 해당하며, 지표도 적절하게 설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 노력도 우수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모두 준수, 잘 이행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협업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개혁 의지와 성과가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목표치 적극성은 상이며, 초과 달성하였음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과학치안 기술을 치안업무에 도입한 효과는 높을 것이며, 기대효과도 우수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우수	▶ 타기능 수요조사 및 개발 지원 등 적극적인 환류, 홍보 노력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홍보 및 대 · 내외 홍보 우수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0	○ 민생범죄 대응 및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문제해결 지원팀' 활성화	○ 국·관, 현장 요청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수시) ○ '중점추진과제 발굴 및 추진(연중)
	○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 계획에 따른 '25년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 경찰청 각 국·관 협의 및 수립('25.3월) ○ 상반기 이행점검('25.7월) ○ 시행계획 이행(연중)
	○ △ 치안 R&D 투자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 과학치안기술별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과학치안기술 개발 로드맵' 구축	○ 로드맵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25.2월) ○ 과학치안기술 개발 로드맵 확정 · 추진('25.3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수출계약 체결) 205개 기업 참여,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 등 35개의 동시 행사 개최 등 역대 최대 규모 속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530만 달러(73억 원) 수출계약 체결('23년, 400만 달러)



전시장



수출계약 세리머니



수출상담회

- (과학치안 기반 조성) R&D 사업을 총괄하며 ‘과학치안 기반 조성 및 치안역량 강화’에 주력, 국민안전 및 현장 강화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 <도전적 연구개발> 국민안전 및 현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국민안전)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25~'27) △사이버 추론 기술개발('25~'28) 등
- ▶(현장강화) △경찰 작전 능력 향상 기술 개발('25~'28) △움직이는 지구대('25~'29) 등

－ <R&D 현장활용성 검증> 연구성과물에 대한 성능검증 및 현장 활용성 실증* 확대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현장적합성·활용성 강화에 집중

* '23년 10개 대비 '24년 16개 과제(↑62%) / 본청을 포함 전국 시·도경찰청 등 총 81회, 현장 경찰 6,355명등을 대상으로 과제 설명 및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과정에 환류

－ <R&D 현장도입> 종료 사업 우수성과 창출로 과기부 우수성과 선정^① 성능 검증된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 대상 운영부서 즉시 도입^② 성과 확보

① △실종아동등 신원확인 기술('18.~'23.) △112 정밀탐색 시스템('19.~'22.) △위변조 영상검출 시스템('21.~'24.) 등 과기부 주관 혁신기술 우수성과로 선정('24.12.) ② 112 정밀탐색 시스템 등 성능검증이 완료된 과제의 일반예산 즉시 도입 ⇨ 8개 사업 54.5억 확보(도입)

- ('25년 R&D 예산 확대 편성) 치안 R&D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외부 등 관계부처 대상 홍보·협력 추진

- 각종 R&D 성과물의 전시 홍보*을 추진하며 경찰청 R&D 및 일반 재정 사업까지 투자 효과성·중요성 등 강조, 경찰청 예산 확대 편성에 기여

* R&D 성과전시회('24.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24.8./VIP 참석), 경찰대학 임용식('24.3.), 중앙경찰학교 졸업식('24.3.) 등 R&D 성과전시를 통해 대·내외 관심도 제고

※ '25년 R&D 640.27억원 정부안 편성('24년 대비 +73.36억원, 12.9% 증액)

- (실용화사업) '25년 실용화사업 신규과제 예산 13.5억 원 확보, '24년에 종료된 '저고도 무인기 대응 시스템' 및 '학교폭력 정보 제공형 챗봇' 과제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현장 도입 추진
- (혁신제품) 총 9개의 혁신제품 지정, 이 중 3개(△접친지문 분리 시스템 △VR 교육훈련 시스템 △대형안전방패)는 시범 구매 예산으로 현장 도입
- (치안산업 특수분류) 치안산업 규모 파악·치안산업진흥법 제정 등 기업 성장 지원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하기 위한 '치안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 및 제정 완료('24.12.26. 통계청 고시)
- (R&D 국제협력 체계 구축) 독일 NRW州 범죄수사청 내에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24. 5.), '초국경범죄 기법 공유'·'국제 공동연구 협력' 거점 확보

▶(국제공동연구) 한·독은 초국경범죄 대응 등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 △허위조작콘텐츠 탐지 27억(총 91억, ~'27) △미래순찰차 6.92억(총 150억, ~'29) '25년 정부안 확정

▶(인력교류) 24년도 위탁교육 성과(R&D·수사 6명)를 바탕으로 '25년 수사관 교류파견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24년부터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지원 제도운영, 혁신제품이 현장에 도입되어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 소요됨
- 연구성과물의 현장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지표 보완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다양한 혁신제품의 현장 도입을 확대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현장 실증을 통한 시제품의 성능검증과 현장 적용성 강화 필요한 만큼 담당 국·관과 협력하여 실증대상 과제 및 실증관서 확대 검토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과학치안 R&D 실증관서 방문	12월	○ 과제 관리자 등 실증관서 방문 완료	정상추진
○ '25년도 혁신제품 시행계획 수립	12월	○ '25년도 혁신제품 시행계획 수립함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치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설계로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현장에 필요한 R&D 노력 우수하며, 노력과 성과 인정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96%	▶ 계획대비 진척도 및 성과 양호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다양한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상당한 결과물을 만들어 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수혜자 만족도 외 모든 지표 적극성 상/ 달성도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정책효과성 홍보가 다소 부족함. 다만, 타부처와 협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둠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미흡	▶ 다양한 수단으로 의견수렴 등 소통하였으나, 대내·외 의견 수렴 부족함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정책성과 등 홍보 뛰어나지만, 언론 외 대내 홍보 확대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1	○ 경찰청 혁신제품의 현장 도입 효과성 모니터링	○ 현장 도입 후 효과성 검증('24.10월)
	○ 치안 R&D 성과물의 사용성 검증 확대 등을 위해 현장실증 대상 과제·관서 확대 추진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사업 등 현장실증 관서 지정 및 실증 시행('24.4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미래치안 환경을 대비한 첨단 정보화 인프라 구축

- ▶ **(차세대통신망)** 통신망 대역폭을 5배(67→300G) 확충하고 데이터 폭증에 따른 병목 현상 해결을 위한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 적용으로 AI·빅데이터 시대에 대비
 - * 통신망 내 예비대역폭을 자동으로 배정, 데이터 폭증에 대응하는 기술
- ▶ **(재난대응플랫폼)** 재난 영상(경찰·소방·해경·산림청)을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서비스로 제공하는 「재난 현장 영상정보 공유시스템 앱(App)」 개발 및 시범 운영
- ▶ **(혁신기반활용)** 각 기관과 협업하여 KAI 저궤도위성의 영상·통신시스템 및 KISTI 슈퍼컴퓨터 자원을 확보, 고성능 자원을 필요로 하는 AI·영상분석 등에 활용

○ 치안 현장 중심의 정보화 서비스 제공

- ▶ **(모바일오피스)** 스마트폰으로 매뉴얼·업무자료를 현장에서 바로 검색·활용하는 등 현장 경찰관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을 모바일화, 공간 초월 업무환경 조성
 - ※ 모바일오피스 3단계 구축사업 완료, 시범운영(12.9.~1.7.) 후 정식 시행('25.1월 중)
- ▶ **(원격근무시스템)** 신설된 기동순찰대에 원격근무환경 구축으로 사무실 외에서도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제공(시범 운영(~10월), '25년 전국 기동순찰대 확대)
 - ※ 원격근무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동시접속 인원을 확대(4,200→6,200명)하고 데이터 저장소를 모바일오피스와 연동
- ▶ **(모바일장비보급)** 신형 모바일 장비 10,689대 교체, 폴리폰 기능* 5건 개발·적용
 - * 수배차량 조회 시 차종 표기, 총기 위치정보 확인, 외국인 위반자 조회 시 입력 기능 추가 등

○ 경찰청 쏠 기능을 지원, 경찰 정보시스템 품질 강화

- ▶ **(관리체계 구축)** 정보화기반과가 전체 정보화사업을 지도·점검하는 CIO 역할을 수행, 사업의 기획부터 완료까지 단계별로 점검·지원하고 전문성 확보 교육 병행 추진
 - ※ 전체 사업 로드맵 작성, 결과물 관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사업 지연·부실화 차단
- ▶ **(정보화사업관리)** 신규·고도화 등 22개 정보화사업에 체계적 사업관리 서비스 제공, 제안요청서 검토(137건) 및 사전협의(31건) 등 경찰청 전체 정보화사업 지원
- ▶ **(통합유지관리)** 유지관리 범위를 확대('24년 39개 → '25년 50개 정보시스템)하여 소규모 시스템에도 유지관리 인력 상시 상주, 장애 복구 등 서비스 신속 제공

○ 주요 업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 ▶ **(인프라개선)** △ 재난안전통신망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 △ 시도청과 도시교통정보센터 간 단일회선을 4중화 회선으로 변경 등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추진
- ▶ **(보안강화)** △ 보안사고 대응 훈련 △ 장비·시스템 고도화 △ 교육·점검 등 보안 정책 추진 결과 '국가 사이버위기 상황 대응에 대한 역량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1위 달성
- ▶ **(장비교체·보급)** 노후 장비·시스템의 선제적 교체·점검으로 시스템 장애 사전 차단
 - ※ △ 비밀관리시스템 노후장비 △ 네트워크 장비 1,005대 △ PC·모니터 21,500대 △ 프린터 10,000대 △ MS·어도브 등 업무 S/W 14,700조 보급 등

○ '25년 정보화예산 확보 및 예산 절감

- ▶ **(예산 증액)**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경찰청 정보화 주요 정책 및 신규·고도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 추진·협의를, 경찰청 정보화예산 총괄부서로서 132억 증액
 - 특히, 정보화기반과 소관 예산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예산) 136억 (21.5%↑) 및 경찰유무선망개선(일반예산) 27억(4.1%↑) 증액
- ▶ **(모바일전자고지)** 과태료 고지서 등 경찰우편물(연간 5천만 건, 약 500억)에 대해 수신 편의 및 즉시 수납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운영하여 종이 우편 발송요금 年 30.8억원 절감 (등기 : 2,520원 / 일반우편 : 500원 / 모바일 : 5.5원)
- ▶ **(플랫폼 통합)** 스마트국민제보(경찰청)와 안전신문고(행안부)를 통합, 노후장비 교체 예산 48억을 절감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해 신고데이터 분석·활용 기반 조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모두 초과하였음에도 성과지표의 난이도·대표성·적정성 등이 평가자의 눈높이에 미달
- **(업무발굴)** 정보화기반과의 업무 특성상 타 부서 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등 업무 대부분이 대내 업무로서 대국민 정책 발굴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성과지표)** 정책목표가 달성된 일부 성과지표를 개선·보완하고課 정책목표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 **(업무발굴)** 타 부서 지원, 기반·시스템 구축 등 기본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민의 시각을 고려한 정보화 정책 발굴·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개선 사업 완료	11월	○ 운영 개선 사업 완료(11.29.)	정상추진
○ 전국 경찰관서 IP교환기 구축 완료	12월	○ 구축 사업 완료(12.17.)	정상추진
○ 모바일오피스(3단계) 구축 완료 및 통합테스트	12월	○ 통합테스트 추진(12.24.)	정상추진
○ '24년 경찰청 정보화 사업관리(PMO) 성과 보고	12월	○ PMO 성과 보고 완료(12.27.)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부서 핵심 업무를 국정과제,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하여 작성하였고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산출 ▶ 일부 위원님의 '지표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따라 '25년 성과지표 개선 추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경찰 정보화를 고도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 서비스 제공 △국관 정보화사업 관리·지원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 등 다각적 노력 전개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모든 일정 정상 추진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국가·공공기관 등 협업을 통해 △슈퍼컴퓨터 자원 확보 △석사과정 위탁교육 개설 △장애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치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첨단 정보화 인프라 구축 △현장 근무환경 개선 △정보화 사업 관리·지원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편의성 제공 ▶ 일부 위원님의 "정책효과성은 국민적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면도 관찰된다"는 제언에 따라 '25년은 국민 눈높이의 정보화 정책 발굴·추진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타 부처, 내·외부 전문가, 현장 근무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정보시스템 구축·기능개선·장애예방 등에 반영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소관 예산 증액 △언론보도 △국제치안산업대전 △워크숍 △내부 게시판 등 대내·외에 경찰 정보화 우수성 홍보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2	○ 정책과제 성과지표 개선 ○ 국민적 시각에서 정보화 정책 발굴	○ 25년 자체평가 관리과제 수립('25.3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데이터분석 활성화) 국민안전, 편의 증진을 위한 치안 현장 맞춤형 분석 과제 발굴·분석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적 치안활동 지원

▶ <표준분석개발> △CPO 범죄예방분석 △기동순찰대 배치장소 선정 △AI기반 정보공개청구 자동 비식별화
▶ <자체 분석 지원> 치안산업 언론기사 △경찰복제 분석 등 맞춤형 분석 과제 10건, 정책 수립 지원
▶ <분위기 조성> 데이터분석 경진대회,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사례 선발 등

- (현장형 전문가 양성) 교육수료 후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 특화’(CPO), ‘프로젝트 실습’ 등 교육방식 개선(’23년 110명 → ’24년 150명 양성)

▶ <교육생 산출물> △AI 기반 경찰 관련 법령 검색 시스템 개발 △가정폭력·스토킹 유사 사건 등급 추천 △유류비 사용량 예측 △통신자료 분석 용의자 위치 예측 등

- (데이터기반행정 관리체계) 차장 주재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¹⁾」 개최, 「경찰 데이터분석표준프로세스²⁾」 정립 등 관리기반 구축

1) 위원회(10인) 구성·개최(2회), △치안데이터 공유(공공기관) △개방(대국민) △데이터레이크 연계(내부) 등 심의·의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 등 보고

2)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全流程에서(기획 → 데이터 수집 → 분석 → 활용 → 평가)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절차, 고려사항을 규정한 표준 지침 마련

-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 수요기반 데이터 발굴·연계(대내외), 31개 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

▶ <내부> 기능별 분산 운영중인 데이터를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레이크로 연계
※ ’23년 14개, ’24년 10개 시스템 연계 완료 / 現 37개시스템 125종 7억건 데이터 구축

▶ <외부> PreCAS 범죄위험지수(지자체 범죄예방시설 확충 활용) 통신매체이용 범죄현황(여가부 정책 수립)등 수요 높은 데이터 발굴(’24년 23건), 유관기관 공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그간 기반 조성에 주력함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던 △치안현장 문제 해결과 △현장의 활용성·접근성 강화 등 데이터분석 지원 활성화

- 내부데이터 수집에 급급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에는 다소 미흡했던 자세 전환, 치안데이터 공유를 통한 ‘치안파트너십’ 구현 필요

※ 범죄통계 등 수요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대표 데이터를 발굴·공유 및 홍보 강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목표 정립)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치안현장의 문제해결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목표 정립
- (수요맞춤형 추진과제 발굴) 수요조사(매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치안정책 방향 및 수요(국민, 현장)에 적합한 추진 과제 지속 발굴
- (데이터분석 접근성 강화) 데이터 기본 문해력을 갖춘 현장 직원들도 쉽게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기능별 데이터셋 구축 및 표준분석모델 개발
- (데이터기반 효율적 행정지원) 한정된 치안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정확한 원인 진단 및 효과적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지원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 데이터 분석 자체평가회의	11월	○ 표준분석모델사업 실무회의(10.15.), 완료보고회(12.17.)	정상 추진
○ 25년 위탁교육 수요 제출	11월	○ '25년 미래치안정책국 교육훈련계획(11.4.), 결재(12.23.)	
○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운용 결과 보고	12월	○ '24년 경찰청 메타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개선 결과 보고(12.4.)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점수/배점)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 적절하나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는 인정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연초 계획대로 준수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관계자 협업 양호하며 다양한 기관과 적극행정 노력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목표 성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어려운 환경에서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높음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의견수렴 우수, 전문적이어서 정책환류 확인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정책홍보 실행노력 우수하나 대외 홍보 노력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3	○ 데이터기반 치안행정 기반 조성	○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25.2월)
		○ 2025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시행계획 수립('25.2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소 경력 주기별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으로 과학수사 인적 전문성 강화**
 - (채용) 과학수사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화재감식(24명), 지문감정관(7명), 법곤충감정관(1명) 신규인력 경력경쟁채용 완료
 - (교육) 법과학 수사 전문가(계약학과) 교육과정 신설 등 과학수사 분야별 국내·외 전문 위탁교육 총 17개 과정(약 8억원) 시행
 - (자격) 해외 국제자격 취득 지원(54명)을 통해 과학수사 공신력 강화

- ▶ (현장감식) 공인 현장감식관(CCSI) 자격 6명 취득
 - ▶ (화재감식) 공인 화재·폭발조사관(CFEI) 20명, 공인 방화조사관(CFI) 1명 취득
 - ▶ (감정·분석) 국제 폴리그래프 검사관 자격 2명, 법영상분석 2단계 자격 25명 취득
-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을 통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장비 고도화**
 - (시설) 과학수사관 교육 및 팀워크 강화 등 실습 중심 현장감식 상시 훈련을 위한 모의 범죄현장(Mock Scene) 구축(부산·경기남)
 - (장비) 첨단 과학수사 장비 보급으로 과학수사 현장 대응력 강화
 - ※ 화재사건 증거분석용 비파괴 검사장비(2대), 복합가스감지기(20대), 다용도 실체현미경(7대) 등 보급
 - (R&D) 첨단 과학기술 활용, 실효성 있는 과학수사 R&D 및 현장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범죄 대응 역량 제고
 - ※ ① 위해기체 대응 R&D 성과인 △무인로봇 △기체포집기 등 현장 적용 ② 겹친지문 분리 시스템 보급(4대) ③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솔루션 개발 ④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개발 등
 - (수사지원 플랫폼) 수사행정·지원·수사기법 업무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되도록 수사자료 분석포털을 「수사지원포털」로 개발
 - ※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① 지능형 수사자료 분석 ② 수사기법 DB화·활용 ③ 수사기법 전문교육 ④ 수사행정 전산화(변사자 운구관리, 유치장, WASS 절차) 등 구현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기여
- **국내외 과학수사 전문가·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업체계 강화**
 - (컨퍼런스) 과학수사 학술대회 「제10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 ※ IAI, AFSN 등 해외 학회 및 FBI 등 기관, 국과수·대학 등 국내 관계기관 참여, 역대 최다 총 58개국 4,645명(국내 2,215명 / 해외 2,430명) 참석으로 성황리 개최
 - (국제협력) 과테말라 경찰 과학수사 역량 강화 ODA(6월) 수행 및 한국 과학수사 기법 해외 학술대회* 발표 등 치안한류 확대
 - * △인터폴 DVI 컨퍼런스(5월) △미국 국제감식협회(8월) △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8월) 등

- (국내협력) 경찰·국과수·해경 업무협의회 개최(4월) 및 과학수사 학위과정이 설치된 10개 대학(380여명) 대상 순회 간담회·특강 실시
- 과학수사관 사기진작 및 대국민 교류로 국민 체감 만족도 제고
 - (영예성 제고) 제20회 「과학수사대상」* 포상(11월, 정부포상 및 특진)
 - ※ (법의학) 대한법의학회장 김유훈 (법과학) 성균관대 교수 임시근 (경찰) 경남청 경감 장성만
 - (건강증진) 과학수사관 특수건강검진(1557명)·예방접종(817명) 및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개최(4회, 120명)
 - (국민만족) 과학수사 접촉고객 대상 대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1,000명)
 - ※ 전년 대비 0.2점 상승한 81.7점(△신속성 86.9점 △친절성 83.8점 △전문성 80.9점 △전반적 만족도 78.6점)

□ 미흡 사항 원인분석 결과

-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획득(4.1점/5점)
 - 이는 수사기법 등 노출에 따른 범죄 수법 발달 등 부정적 우려로 소극적인 과학수사 정책홍보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적극적인 대내·외 정책홍보를 통해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로 한국 경찰 과학수사, ‘KCSI 브랜드 가치’ 향상 필요
- 또한, 세계적 트렌드인 과학수사 표준화 추세에 발맞추어 과학수사 국제표준 적합성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제표준 선도 병행
 - ※ 과학수사 국제표준 진단/인증 체계 구축 연구(’24년, 용인대)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 체제 구축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제20회 「과학수사대상」 선발·포상	11월	○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 개최를 통해 제20회 「과학수사대상」 시상(11. 4.)	정상추진
○ 「2024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12월	○ 제10회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10. 23. ~ 25.) ○ 총 58개국 4,600여명 참석(전년 대비 7.9% 증가)	정상추진
○ 과학수사 R&D 과제 연차컨설팅 실시	12월	○ 성문분석 프로그램(12.17.), 법곤충 감정기법 고도화(11. 21.) 등 연차컨설팅 정상 추진	정상추진
○ i-BASE 추가 도입 및 사용자 교육 등 수사자료 분석 전문교육 실시	12월	○ i-BASE 추가 도입(7개청) 및 추적·검거에 특화된 수사자료분석 교육(30회, 약 900명 완료)	정상추진
○ 과학수사관 특수건강검진 실시	12월	○ 전국 과학수사관 1,557명 특수건강검진 실시(유소견자 362명 및 요관찰자 834명 등 분석 완료)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성과지표가 과제 내용 및 추진 체계와 관련성이 높으며, 첨단 과학수사 역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매우 우수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우수	▶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인정되어 매우 우수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평가대상 과제별로 정책과제 추진 일정을 모두 기한 내에 완료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익명 아이디어 수집, 시스템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등 적극행정 노력도 인정 ▶ 특히, 과학수사 관계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업 노력 우수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추세치 이상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높은 목표치의 적극성이 인정되며 달성도도 모든 지표에서 100% 이상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책과제 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가 나타났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으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하는 등 우수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환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등 우수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과학수사 정책홍보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대외 홍보와 내부 공감대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홍보 전개 우수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4	○ 최근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과학수사 기법이 노출되고 있어 범죄 수법 고도화와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홍보 진행 필요	○ 과학수사 정책홍보 추진계획 등 수립('25. 2.) -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정책홍보, 내외부 소식지 공유, 과학수사 교수협의체 구성, 법조계 대상 과학수사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정책홍보 추진계획 수립
	○ 과학수사관의 우울증 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특화된 심리역량 강화 등 체계적인 과제 관리 필요	○ 과학수사관 심리건강 증진계획 등 수립('25. 3.) - 특히, 대형 재난상황 출동 과학수사관 대상 신속히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추진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첨단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 (수사지원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개발 3년차
및 전자지도 상 치안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기법을 통해 활용
하는 지도기반 통합 플랫폼 GeoPros 고도화

- ▶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3차년도 개발과제인 ① 딥러닝을 통한 족적 감정 기능 개선
② 사건 현장 재구성(3D)을 위한 효율적 입력도구 개발 ③ 블록체인기반 증거물 이력관리 강화
④ 모든 과학수사 데이터 기반, 통합 지능분석 기능 개발 등 3개년 개발 계획 집대성(22~24년, 65억원)
- ▶ (GeoPros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모바일 GeoPros 개발, 우수분석 모델 공유 기능, 다양한
공공데이터 연계(날씨정보, 인구정보 등), 관내 치안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발 등 고도화 추진

-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자료관리 3종 시스템*에 대한
재구축 사업 추진(1차) 및 '25년 2차 재구축 사업에 필요한 구성
요소 도출 및 관련 예산 확보**

*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전자수사자료표시시스템(E-CRIS), 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S)

** 정부안 확정 내용(10월 기준) : 경찰청 7,664백만원, 행안부(국가자원관리원) 5,940백만원

② 과학수사 활동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 (이상동기 범죄 대응) 흥기소지, 테러·협박 등 이상동기 범죄 의심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분석관이 수사에 참여, 피의자 면담 및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판단 및 적정 신병조치 지원

- ▶ (서울) 피해망상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관련,
이상동기 범죄 해당 여부 분석 및 폭력위험성 평가로 정확한 신병조치 지원
- ▶ (제주) 공항 연쇄 테러 협박글에 대한 피의자 동일인 여부·심리분석으로 구속 기여

-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과학수사 활동 홍보) 경찰 80주년, 과학수사
성장기 20주년을 앞두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과학수사에 대
한 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한 과학수사 활동 수기집 발간 추진
- (범죄경력회보 정확성·편의성 제고) 신속·정확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위한 △ 담당자 교육, △ 간편인증 서비스 인증기관 추가(3개),
△ 개인정보보호 인증(ePRIVACY) 갱신 등 범죄경력회보 이용 국민 편의성 제고

③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

- (분야별 중점 시도청) 전문 분야별 대응력 강화 및 전기차 화재 등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 시도청」 지정·운영

- ▶ (중점청 지정) 전기차배터리 화재(서울), 폭발물테러(경기남·경남) 등 전문 분야별 중점 시도청 지정, △훈련예산장비 우선 지급, △관련 CASE 분석·연구, △집중교육 등 추진
 - ▶ (화재감식) 전담팀 전국 확대 운영(기존 8팀→ 확대 14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을 통해 화재감식 역량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혈흔형태분석) 광역 혈흔형태분석팀(비상설, 전국 4개 권역 119명) 편성, 균질한 분석 역량 구축
 - ▶ (대테러 현장감식) 인력풀 재정비를 통해 폭발물·총기, CBRN*으로 확대 편성, 테러 대응역량 강화
- * CBRN(화생방 및 핵) : Chemical, Biological, Radiation, Nuclear

- (R&D) 첨단기술을 접목한 시스템·기법·장비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지속 추진

- ▶ (AI 기반 족적 자동검색) 검색 발견을 향상, 신뢰성 제고를 위해 AI 기반 족적 자동검색 시스템 개발 2년차 과업 수행('24년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 8월) <포항공대, '23~'25년>
- ▶ (위변조 수사·제보 영상 검출) 악의적 조작 영상 검출 시스템 개발 4년차 과업 수행(진행 상황 점검 및 실증 계획 수립 회의 개최, 5월) <성균관대, '21~'24년>
- ▶ (노파 활용 진술 진위판별) 진술 진위판별 노파 지표 발굴 및 노파안구추적 등 복합 생체 신호 측정 장비 개발 2단계 1년차 과업 수행(연구기관 실무회의, 6~8월) <KAIST, '22~'25년>

④ 과학수사 객관성·신뢰성 강화

- (국제표준인증·공인인정) △ 과학수사 기초자료(지문·범죄경력 등)의 법정 증명력 강화를 위한 인증 유지 및 ISO 국제표준 자료관리체계 구축, 국내 유일의 KOLAS 국제공인숙련도시험운영기관(지문감정)으로서 국내·외 지문감정기관 대상 숙련도시험 최초 운영(3.1.~11.1.)
- (감정 신뢰성 제고) 과학수사 윤리규범 제정, 감정관 자격·평가 등

- ▶ (과학수사 윤리규범 제정) 경찰 과학수사 감식·감정 가치를 공유하고 대외적으로 과학수사 신뢰성·투명성을 천명하는 행동 기준「과학수사 윤리규범」제정 추진(~11월)
- ▶ (감정관 자격·평가) 표준화된 교육·시험을 통해 감정관 자격을 부여하는 감정관 자격제를 운영하고, 감정관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관리(제4회 감정관 자격시험 시행, 10~11월)
- ▶ (감정관 인력풀) 감정 분야별 요구되는 경력·학력 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선발·양성, 감정관 공백 시 우선 배치하는 인력관리 체계 운영(총 6개 분야 74명 선발, 기본교육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과제별 원인분석 결과를 반드시 작성)

- 보도자료와 내부홍보를 넘어 더 폭넓은 채널을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과 최신 기법 등 우수성과 홍보 필요
 - (내부)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해 내부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직원의 참여 등 입체적인 홍보방안 마련에 다소 미흡
 - (외부) 언론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등을 통한 홍보를 넘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 활용 필요

□ **개선 · 보완 필요사항**

- (내부)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SCAS-GeoPros 공모전, 과학수사 활동 수기 공모전 등 과학수사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 병행
- (외부) △ 과학수사 활동 수기집 발간(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에만 나오지만), △ 경찰 과학수사 관련 프로그램 패널 출연 등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적극 홍보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과학수사 자료관리 ISO 국제표준 인증 획득	11월	○ 과학수사 자료관리체계에 대한 기록·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경영시스템 ISO 국제표준 인증 획득(10.11.)	정상추진
○ 감정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11월	○ 제4회 감정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10.22.)	정상추진
○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재 구축 완료 보고	12월	○ 지문 및 전과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재구축 완료(10.29.)	정상추진
○ '24년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완료 보고	12월	○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10.29.)	정상추진
○ 전기안전공사 화재감식 위탁교육	12월	○ 전기화재 감식 전문가 양성 교육 시행(12. 2. ~13.)	정상추진
○ '24년 BEST과학수사팀 선발 평가	12월	○ 24년 BEST과학수사팀 선발(12.12.)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대표성) 범죄분석과는 현장감식·범죄분석·증거감정 등 과학수사 활동을 통한 경찰수사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과학수사 기법 및 인프라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책임수사 지원 및 국민편익 증진을 부서 정책 목표로 설정함 ▶ (연계성) '24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및 치안종합성과평가 지표와 연계 ▶ (적절성)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과 범죄분석 지원지수는 범죄분석과의 핵심 업무인 현장감식, 범죄분석 및 첨단 시스템 구축·운영 등 과학수사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성과지표임 (보고서·시스템 통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직접 측정·입증 가능)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과학수사를 통한 책임수사 지원을 위한 △첨단 시스템 구축 △과학수사 활동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 △과학수사의 신뢰성·객관성 강화 등 정책과제를 내실있게 수행하였고 그 결과 증거채취율 지속 향상('20년 174% ⇒ '24년 236%), 범죄분석 지원지수 대폭 증가('20년 127점 ⇒ '24년 255점)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음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모든 과제를 계획적·체계적으로 일정을 준수하여 정상 추진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협업도) 경찰 내부는 물론 해경·해군·국방부 등 과학수사 유관기관 및 금융결제원·국토부·선관위 등과 협업을 적극 추진하였음 ▶ (적극행정 노력도) 이상동기범죄 대응, 현장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 모바일 신원확인 시스템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단말기 보급, 디지털 현장 과학수사관 시범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였음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전 성과지표 초과 달성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성과지표(가중치)</th><th>목표치</th><th>달성도</th></tr> </thead> <tbody> <tr> <td>▶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75%)</td><td>235.6%</td><td>235.9% (100.2%) 초과 달성</td></tr> <tr> <td>▶ 범죄분석 지원지수(25%)</td><td>254점</td><td>255.5점 (100.6%) 초과 달성</td></tr> </tbody> </table>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75%)	235.6%	235.9% (100.2%) 초과 달성	▶ 범죄분석 지원지수(25%)	254점	255.5점 (100.6%)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중치)	목표치	달성도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75%)	235.6%	235.9% (100.2%) 초과 달성									
▶ 범죄분석 지원지수(25%)	254점	255.5점 (100.6%) 초과 달성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우수	▶ 정책과제 수행을 통해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향상('20년 174%⇒'24년 236%) 및 범죄분석 지원 활성화('20년 127점 ⇒ '24년 255점) 등 성과를 거양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정책수립·시행에 앞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장 근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음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및 다양한 최신 기법·시스템 소개 등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경찰 외부 홍보가 필요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5	○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 이외에 내부직원 참여 강화를 위한 등 입체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경찰 통합포털 게시물을 통한 홍보와 함께 SCAS-GeoPros 공모전 등 과학수사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체적인 홍보 병행(연중)
	○ 언론 보도자료 배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 등을 통한 홍보를 넘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채널 활용 필요	○ 과학수사 활동 수기집 발간, 경찰 과학수사 관련 프로그램 패널 출연 등 통해 경찰 과학수사 활약상 적극 홍보(연중)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최종분석 지원) 중요사건 중 시도청(디지털포렌식계)에서 기술적으로 분석 불가능한 매체는 본청에서 최종분석 실시, 디지털증거 분석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건수사 진척에 핵심적 역할 수행
 - ※ 중요사건: 사전투표소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5월), 경기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 △36주 태아 낙태사건(8월) 등
- (분석관 역량 제고) 공신력 있는 해외 교육·전문화 위탁교육·국제공인인정 유지 등을 통해 경찰의 디지털 증거처리 능력 향상
 - ※ △분석관 맞춤형 전문교육(211명) △블랙햇, SANS, DFRWS 등 국외교육 △KOLAS 국제공인인정 재인정 등 세계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유지
- (물리복구 역량 확대) Android 모바일('23년) 물리복구 역량개발에 이어 '24년 아이폰 전용 물리복구 장비 및 기법개발
 - ※ 시도청 물리복구 기술수준 제고를 위한 IoT 기기 Chip-Off 장비 보급
- (압수·수색 현장지원 활성화) 디지털증거 수집 단계부터 지원 확대, 참여권 보장 등 적법절차 준수 및 동일성·무결성 확보에 기여
-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신종범죄 분석기법 연구개발 등 他 부처 협력 R&D 사업으로 첨단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등 차세대 운송수단의 포렌식 로드맵 수립, 분석역량 확대
 - ※ '24년 스마트카 포렌식 대응을 위한 분석도구 도입 완료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인력 부족) 급증하는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 대비 분석전담 인력 부족*, 분석관 증원 지속 요청 중
 - * 최근 5년간 분석인력 증원이 없었으나, 디지털증거분석 건수는 약 1.5배 증가 (56,440건('18년) → 85,607건('24년))

- (미래기술 연구확대)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대응을 위한 딥페이크, 인공지능(AI) 분야 연구확대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인력증원 추진) 관계기능과의 협의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현장 지원 전담인력’ 증원 지속 추진
※ 그간 포렌식 기능이 부재하던 세종청에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1명 증원('25년 배치)
- (미래치안 역량 강화)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미래기술 분야 전문화 교육 발굴 추진
※ 캐나다 ‘에이미(AMII) 연구소’와 협의, AI·딥페이크 대응 국외훈련 과정 개설('25년 시행)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디지털포렌식 자문단(4기) 신규선발	11월	- 자문단 4기 선발, 위촉식 추진(11.22)	정상추진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12월	- 동계 학술대회 개최(12.16.)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1.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준수 정책과제 우수 ▶ 정책과제가 경찰청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음
2-1-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인력전문화 및 디지털증거 분석 확대 노력상이 양호함 ▶ 기술개발로 중요사건 해결에 기여
2-1-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정책과제 기술서의 추진 일정을 기한 내에 완료함
2-2. 업무 추진과정의 적극 행정 노력도 및 협업도	우수	▶ 전년 대비 10%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상),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여(100%) SS에 해당 ▶ 학계, 기업 등 아우르는 협업 우수. 연구개발이 다소 연말에 집중
3-1.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인력대비 성취도 우수 ▶ 목표치의 적극성은 양호하나 인력전문화를 교육 실적만으로 평가하는 방안은 보완이 필요해보임

3-2.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 효과	보통	▶본청에서 최종분석을 통하여 중요사건 지원, 고성능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시도청에 확대 배포함으로써 모바일 잠금해제 역량을 강화 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역량 확대
3-4.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노력도	보통	▶국내외 국가기관, 민간, 학계와 다각적 협업하는 등 적극 노력
4-1.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정책수립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내·외부 의견 수렴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6	○ 디지털포렌식 분석역량 강화	○ '25년 국외교육 참석계획 수립('25. 3월)
		○ 전국 분석관 현장직무교육(OJT) 추진('25. 5월)
	○ 디지털포렌식 대내외협력 강화	○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 개최('25. 6월)
		○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워크숍 개최('25. 10월)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① 관(官) 총괄기능 수행 및 국제협력관 발전전략 등 기획

- 기획·성과·예산·국회대응 등 서무업무를 총괄하고 ‘미래비전’ 등 발전전략 수립, 관 정체성 확립 및 중장기 발전을 도모

② 외국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활동 다각도 추진

- ‘도피사범검거·재외국민보호’ 등 국제협력관 본연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중심의 국제협력활동을 전략적·다각도로 추진

- ▶ (고위급 교류) △ 경찰청장(2회, 3개국)·차장(1회, 1개국) 등 공무국외출장 시행 △ 캄보디아(차관), 베트남(차관) 등 고위급 방한 지원 △ 치안협의체(한-베, 한중일) 운영 등
- ▶ (실무급 교류) △ 한인경찰 초청행사(10월 6개국 13명) △ 외국경찰 초청행사(8월 16개국 17명) 등
- ▶ (치안협력 MOU) 총 5개 기관과 치안협력 MOU 체결
- ▶ (주한공관 협력) △ 美 법집행기관 상호협력 세미나(5월) △ 주한 외교사절 세미나(10월) 등

③ 국제협력사업(ODA 등) 성과연계 강화를 위한 내실화·고도화

- '24년은 캄보디아(납치·감금사건), 베트남(도피사범 다수) 등 주요국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여 가시적 성과 도출 추진

- ▶ ('25년 신규 ODA) 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국 중심 총 3개 신규사업 발굴
- ▶ ('24년 ODA) 총 13건(경찰청 5, KOICA 협력 8) 추진으로 협력강화 도모
- ▶ (치안인프라 전수) △ ODA 기획·착수조사 5회 △ 전문가 파견교육 9회 △ 초청 연수 11회 △ 워크숍 1회 등을 통해 외국 경찰에 우리 치안시스템을 전수

④ 해외파견자 증원 및 제도 내실화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경찰주재관·경찰협력관 확대*로 재외국민보호·도피사범검거 기반 확충, 또한 ‘주재관 내실화 계획**’ 등 파견자 역량 상향평준화 추진

* 신규 5명(인터폴 2, 유로폴 1, UNODC 1, 캄보디아 1) / 연장 5명(인터폴 2, 필리핀 2, 베트남 1)

** 경찰주재관 제도 운용 전반(선발 - 교육 - 평가 - 보상)에 대한 개선책 마련

- 특히 캄보디아 납치·감금 등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재외공관·외국경찰과 긴밀히 협의하여 캄보디아 대사관에 신속 파견 실시

※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직무파견(1명), 10. 28. 파견 실시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우리나라에 파견 근무 중인 외국 경찰·법집행기관과의 네트워크 관리도 중요, ‘주한 협력관 데스크’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
-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가 협력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도피사범검거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 '25년 주한 협력관 데스크 운영 효율화 방안(임무·역할 등)을 마련·시행하고 연중 정량적 업무 실적*을 면밀히 관리
 - * △세미나 개최 △인적 네트워크 구축(접견·회담) △요청 접수·처리(기관방문 등)
- '25년 주재관 등 해외파견자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지표 신설 검토
 - ※ △신규파견·연장 △첩보 수집·활용 건수 △재외국민보호·공조수사 활동 건수 등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24년 하반기 주재관 선발계획 수립 (선발대상 직위: '25년 상반기 파견 7개)	11월	○ '24. 10. 14. 선발계획 수립 완료 - 7개 직위에 31명 추천, 5개 직위에 경찰청 직원 선발('24. 12. 24.)	완료
○ 제17회 해외 한인경찰 초청행사 개최	11월	○ '24. 10. 20.~25. 한인경찰 초청행사 개최 완료(6개국 13명 참석)	완료
○ DR공고 사업(ODA) 협력식 체결 및 국제분담금 납부	12월	○ '24. 12. 18. 협약서 체결, '24. 12. 20. 분담금 납부 완료	완료
○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참석	12월	○ '24. 12. 2.~5.간 중국(청두)에서 제7차 회의 개최, 국제협력관 등 총 15명 참석 완료	완료
○ 페루 ODA, 사업 내용 확정을 위한 착수조사 실시	12월	○ KOICA 측 사정*으로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지연됨으로 인해 착수조사도 순연, '25년초 계약체결 후 조기에 착수조사 실시 예정 * 기획조사('24. 3월) 결과물에 대한 KOICA 자체 내부 심사 및 KOICA-페루 경찰청 간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	예정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과 성과지표 적정성이 상당히 인정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미흡	▶ 기존 협력된 체제 이외 고위급 회담으로 이루어진 결과 미흡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근거)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완료한 것으로 평가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미흡	▶ 기존 방식 이외 더욱 다각적인 협력방식 모색 필요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개선된 성과지표에 대해 가중치 변화 검토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미흡	▶ ODA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인정하는 바이나, 한편으로는 ODA에 많은 비중을 둠으로 인해 국제협력 본연의 의미와 역할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에 주의 필요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①교민간담회는 경찰청장 주관 외에도 수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부분까지 정책에 환류하는 조치가 필요 ②지휘부 출장에 업무 방향성이 집중된 경향, 국제협력을 통한 범인검거·수사협조 등 실무적으로도 성과 도출 필요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보통	▶ ①경찰주재관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개선을 위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도 많은 홍보활동이 필요 ②국제협력활동과 도피사범검거 등 성과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언론보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7	○ 주한 협력관 데스크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 주한 협력관 데스크의 정량적 업무실적을 면밀 관리하고, 향후 성과기술서에 주요성과 기재
	○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활동 관련, '재외국민보호' 지표 신설 검토	○ 차년도 정책과제 평가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개선안 마련·시행 (2~3월경)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 (송환 강화) 전략적 공조 체계 운영 및 견고한 치안협력망을 바탕으로, '24년 도피사범 송환은 작년 대비 47% 증가 (470 → 691명)
- ※ '24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율 (국내 송환 / 국외 도피)은 최근 3년 ('21~'23년) 평균 61.8% 대비 10% 이상 향상된 72.5%를 달성

<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국내 송환	691	470	403	373	271
국외 도피	951	512	549	953	943

-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24. 2. 20. ~ 12. 31.)」
 - － 국수본·경찰주재관 등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 선정 및 3단계 관리등급 부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국제공조 추진
 - － 추진 성과 : 총 69명 검거, 52명 송환
 - ※ 「**핵심**」 등급 : 47명 검거 (34명 송환) / 「**중점**」 등급 : 22명 검거 (18명 송환)

- ▶ (필리핀) '21~'23년, 국내 최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의 조직 총책 대상,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이민청 등 합동작전으로 필리핀에서 검거 (7. 16.), 국내 송환 (8. 2.)
- ▶ (미국) '19~'23년, 일명 “깡통 전세사기” 수법을 통해 피해자 90명으로부터 약 62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韓·美 집중 공조로 미국에서 검거 (9. 9.), 국내 송환 (12. 20.)
- ▶ (일본) '23년,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Infra-SEAF 작전 등 집중공조로 일본에서 검거 (7. 30.), 국내 송환 (12. 25.)

- (인터폴 총회 유치) '24년 인터폴 영국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29년 총회 개최지로 확정, '99년 서울총회 이후 30년만에 재유치
- (인터폴 작전·펀딩 강화) ①경제범죄(HAECCHI), ②도피사범(SEAF), ③마약 범죄(MAYAG) 등 우리 국민에 피해가 큰 분야에 年 15억 규모 펀딩 중
- － 인터폴 차원의 적극적 지원·공조를 통한 글로벌 역량 결집으로 관련 사범 6,000여 명 검거 및 인터폴 내 우리청 영향력 확대

< '24년 편당 사업별 주요 성과 >

① 경제범죄(HAECHI)	②도피사범 검거(Infra SEAF)	③ 마약범죄(MAYAG)
• 6,051명 검거 (국내 204명 송환) • 5,548억 원 동결 (국내 2,623억원 동결)	• 1차 작전: 대상자 112명 선정, 검거 15·소재확인 37 • 2차 작전: 대상자 150명 선정, 검거 6 소재확인 11	• 1차 작전: 코카인 763kg·메스 암페타민 220만 정 등 압수 • 2차 작전: 총 58종·1조 4,000억 원 상당 마약류 압수/ 마약사범 29명 검거

– 또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있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성범죄 대응 등 현안 치안이슈 대응을 위한 신규편당 추진 중

○ (UN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최초 참석) 범죄예방정책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협조('24.5월), 국제사회에 우리 치안정책 홍보

※ 同 회의 참석 계기, '24.10월 경찰청-유엔 마약범죄사무소 협력의향서 체결, 향후 경찰 전문가 파견·채용, 공조강화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조정 합의

○ (국제사회 치안이슈 선도) 인터폴 회원국 중 최초로 「제1차 인터폴 미래 치안회의」 개최('24.10월), 급변하는 미래환경과 범죄대응 논의(52개국 참여)

○ (인터폴 NCB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공조 시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관한 법적근거 강화를 위해 경직법 개정 추진(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

– 또한 유관기능·관계부처에 '인터폴 인프라' 공유, 초국경범죄 대응 지원

※ 유관기능 : 국수본·생안·대테러·치안정보국 등 / 관계부처 : 법무부·해경·관세청 등

○ (재외국민보호 강화) 파리올림픽·리우 G20 등 주요 국제행사 및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경찰관을 파견하여 재외국민 안전 확보

- ▶(파리올림픽 파견) 올림픽 기간('24.7.14~9.9) 안전지원팀 31명 선발 및 파견
- ▶(리우 G20 파견) 2024 리우 G20 정상회의('24.11.18~19.)에 경찰연락관 1명 파견
- ▶(통합 신속대응팀) △인력풀 정비 및 역량강화 계획 수립 △경찰청·외교부 합동 FTX 확대 및 위기상황 리스트화 △재외국민 사건사고 대응을 위한 인력 파견 등
- ▶(외교부 협업) △재외국민보호 업무협약 체결(7.5.) △제4회 해외사건사고 공모전 공동개최(7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피사범 급증에 따른 송환 고도화) '24.1~12월 해외도피자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85% 증가, 송환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수준으로 공조체계 재정비를 통한 선제적 대응 및 송환율 제고 추진

※ 국외도피사범 수 : △'24년 1~12월 951명 △'23년 1~12월 691명

○ (인터폴 작전·편당) '25년은 2기 편당 마지막해로, 실질적 성과 거양 및 3기 편당 추진·고도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추진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제92차 인터폴 총회 참석	11월	○ 제92차 인터폴 영국 글래스고 총회 참석	정상추진
○ 인터폴 펀딩 사업 관련 작전 결과회의 실시	12월	○ 제5차 인터폴 해치 결과 회의 출장	정상추진
○ 국제공조관리시스템(가칭) 매뉴얼 제작	12월	○ 사이버국제공조 포털시스템 고도화로 변경 추진	정상추진
○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연간 운영성과 보고	12월	○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 「제2기」 운영성과 보고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보통	▶ 정책과제 대표성, 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이 보통임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사업요소보다 국외도피 및 국외범 들 상대로 실질적인 검거를 할 수 있는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함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 100% 준수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범죄자 해외도피 대응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협업등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판단됨. 특히 국외도피사범 전수조사 및 정비추진의 필요성에 공감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우수	▶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달성도가 우수함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경찰관의 해외파견 확대 등 최종 수혜자인 국민을 위한 전문성 있는 여러 정책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특히 공동조사팀 국외파견 등 범죄대응의 적극성과 재외국민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기대효과가 예상됨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대내외 관계 기관 및 부처 현장 집행자들의 의견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짐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우수	▶ 도피사범 송환 보도 등 정책홍보 노력과 효과가 돋보임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8	○ 국제공조 역량 강화로 국외도피사범 송환 성과 제고	○ 「초국경·범부처 국외도피사범 합동검거 작전」 추진('25.3~10월) - 계획 수립 및 합동단속 대상자 선정 - 주요 국외도피사범 검거 강화를 위한 초국경· 범부처 합동회의 추진
	○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 작전·펀딩 실질화	○ 25년 인터폴 펀딩 운영계획 수립('25.1월) - 펀딩별 맞춤형 작전운영 계획 수립 - 인터폴 펀딩-우리청 정책·성과 연계 강화 - 인터폴 프로젝트팀 관리·소통강화 - 펀딩 프로젝트 국내외 홍보 및 인지도 제고

(1) 평가결과

□ 주요성과

[특별단속 및 북한^發 사이버테러 규명]

- (특별단속 실시) '24. 3. 4. ~ 10. 31.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정통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실적	842	954	26

- ▶ [주요사건] 그룹회장 계좌해킹 사건 피의자 검거 :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가상자산 등 377억원 상당을 탈취한 국내 피의자 14명 검거(구속1) 국제공조 통한 주범 추적 중(서울청)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유관기관 회의(7회) 참석

- (북한^發 사이버테러 사건 규명) 수사기법 개발, 수사지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사이버테러대응 역량 강화→북한^發 사이버테러 다수 규명

<'24년 본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서 수사한 주요 사이버테러 사건>

- ▶ (북한^發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결과발표) '21. 1. ~ '23. 2.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유출한 사건 수사, 北 해킹조직이 판결 기록을 유출한 사실 규명
- ▶ (네트워크 보안업체 해킹 사건 수사, 공격배후 규명) 네트워크 보안업체의 전산망을 해킹하여 9개 업체에 악성코드 설치 및 중요 자료를 탈취한 사건의 배후가 北 해킹조직임을 규명
- ▶ (방산업체 등 13개 업체를 해킹한 사건 수사, 공격배후 규명) 방산업체 2곳, IT보안업체 2곳 등 국내 13개 업체의 서버에 23만여회 침입한 사건을 수사, 배후가 北 해킹조직임을 규명
- ▶ (백신서버 해킹사건 수사, 공격배후 규명) '24. 5. ~ 7. 백신 서버를 해킹해 정부기관 PC 42대에 악성프로그램 유포한 사건 수사, 배후가 北 해킹조직임을 규명
- ▶ (해킹 피해 가상자산 환수) '19. 11.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을 탈취한 사건의 피해자산 중 약 4억 상당을 스위스 거래소로부터 환수(10.16.) ※ 북한^發 규명사건 中 피해액 환수 최초사례
- ▶ (채팅 앱 이용자 정보 유출사건 피의자 검거) 채팅 앱 이용자 정보 167만건을 해킹한 사건 피의자 11명 검거,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1명 지명수배
- ▶ (DDoS 공격 프로그램 탑재 수신기 판매업체 검거)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DDoS 공격용 프로그램을 탑재해 판매한 피의자 5명 검거,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 1명 지명수배

[수사기법·시스템 개발]

- (비트코인 추적 시스템 구축) 비트코인 거래자 IP를 추적하기 위해 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진행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검수 완료(12월)
※ '24년 비트코인 → '25년 다크웹 → '26년 DDoS 順으로 추적 시스템 구축 예정
- (텔레그램 추적 기법 개발) 다양한 범죄에 활용되는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의 사용자 추적 기법을 개발, 시도청 수사관 대상 교육·배포

[대내외 유관기관 협업]

- (통합방위회의 참여)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천공항이 마비된 상황'에 대한 부처별 조치방안 토론(경찰청장 주재)
※ 국가정보원장, 국토부 장관, 사이버작전사령관, 인천시장 등 조치사항 발표
- (韓美·韓美日 사이버안보 협의체 참석)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테러, 가상자산 세탁 행위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및 수사사항 공유, 정책 등 협의

□ 미흡 원인분석 결과

-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이나, 보수적인 성과 목표치 설정, 홍보활동 미흡, 의견 수렴 과정 부족 등이 아쉽다는 평이 있었음
 - (내부평가) 목표 달성도를 고려할때 다소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홍보활동 또한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외부평가) 대내외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개선·보완 필요사항

- (도전적 목표치 설정) 금년도 성과 달성도(123.4 ~ 20% 초과)를 고려, '25년도 정책과제 성과지표 설정 시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 (적극적 정책 환류)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특별단속, 시도청 테러 수사대 모의훈련 등 정책 추진 시 시도청 의견 청취 및 환류 예정

[2] 추진계획 준수 여부

추진계획	계획상 일정	추진실적	준수 여부
○ 사이버테러수사지원 시스템 라이선스 구매	12월	○ 사이버테러 대응 솔루션(RECON, Virustotal) 라이선스 갱신 및 보급 완료('24. 7월)	정상추진
○ 가상자산 추적시스템 구축	12월	○ 사이버테러 수사지원 시스템 신규 기능 구축 (비트코인 추적 시스템) 사업 종료 및 검수 완료('24. 12월)	정상추진
○ 사칭악성메일 분석 시스템 구축 ISP	12월	○ 사칭·악성메일 분석 시스템 구축 ISP 사업 종료 및 검사 완료('24. 12월)	정상추진

[3]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평가지표	평가결과	평정근거 및 제언
1. 정책과제 대표성·연계성 및 지표설계의 적절성	우수	▶ 정보통신망 침해형 검거율, 피해보호지수, 사이버수사 지원 시스템 활용도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로 판단됨
2-1.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보통	▶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피해자 보호 강화, 가상 자산 근원 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TF 구성 등 정책과제 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임
2-2. 추진계획 준수도	100%	▶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 내 모두 완료함
3. 업무 추진과정의 협업도 및 적극행정 노력도	보통	▶ 대내외 기관과의 협업을 활발히 하였으나 그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음. 전년도와 달리 사이버 추적기법을 새로 개발 함으로써 사이버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은 우수하다고 판단됨
4. 목표치의 적극성 및 성과 달성도	보통	▶ 목표치와 달성도 모두 우수, 검거지수 연도간 등락 원인 파악 필요
5. 정책효과성 및 향후 기대효과	보통	▶ 수사기법 개발 및 수사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해킹조직 규명, 가상자산 거래흐름 분석을 수사에 활용, 가상자산 분석 지원 서비스 실시 등을 통한 수사역량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며, 지속적으로 수사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6. 대내·외 의견수렴 및 환류 노력도	보통	▶ 다양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세미나 개최, 각 시도청과의 적극적 소통이 돋보임
7. 정책홍보 노력 및 성과	미흡	▶ 언론보도 외 다양한 홍보 수단 강구 필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과제 번호	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49	○ '24년 정책과제 성과지표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설정됨	○ '25년 정책과제에는 금년도 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도전적 목표치 설정 예정 ('25.2월)
	○ 사이버테러대응과 정책 추진 시, 내외부 의견 적극 수렴, 환류 실시	○ 특별단속 평가, 사이버테러초동대응 모의훈련, 사이버테러 추적 기법 개발 등 각종 정책 추진 시 시도청 의견 적극 취합, 반영(연중) ※ 시도청 사이버테러수사팀 건의사항 취합('24. 12.), 특별단속 평가 관련 의견 취합('25. 1.)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 ◇ 본청 : 1차장, 1본부, 8국, 12관, 54과(담당관), 3팀
- ◇ 부속기관 :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 시도경찰청 18개, 경찰서 259개, 지구대 630개, 파출소 1,415개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	--

비전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
----	----------------



전략 목표	I	II	III	IV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의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글로벌·과학치안으로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성과 목표	1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 불안 요인을 근절한다.	1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확산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1 현장 중심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1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래치안을 구현한다.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2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고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2 각종 제도·인프라 구축으로 현장대응력을 지원한다.	2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수사기법 기반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3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한다.	3 자유 민주주의 질서 수호를 위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3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3 글로벌 치안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4 안전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4 처우개선·사기진작 으로 현장의 활력을 높인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1)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

성과지표

5대 범죄 검거율

□ 성과지표 개요

〈 5대 범죄 검거율 〉

- 개념 : 국민 안전에 관한 주요 치안지표로서 5대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 측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 조사기관 : 경찰청
- 조사방법 :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 측정산식 : 5대 범죄 검거건수 ÷ 발생건수 × 100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5대 범죄 검거율은 81.2%(426,380건 발생, 346,242건 검거)로, 전년(79.1% / 447,975건 발생, 354,365건 검거) 대비 2.1%p 증가
- 세부 죄종별로는 △살인 △강간·강제추행을 제외한 4개 범죄의 검거율이 상승하면서 핵심 치안지표인 5대 범죄 검거율 제고, 국민 안전에 이바지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22년	발생	450,623	689	514	22,582	182,141	244,697
	검거	345,156	667	506	21,207	113,634	209,142
	검거율	76.6%	96.8%	98.4%	93.9%	62.4%	85.5%
'23년	발생	447,975	777	571	22,504	189,607	234,516
	검거	354,365	751	566	21,527	126,916	204,605
	검거율	79.1%	96.7%	99.1%	95.7%	66.9%	87.2%
'24년	발생	426,380	779	457	21,330	183,809	220,005
	검거	346,242	756	456	20,326	129,200	195,504
	검거율	81.2%	97.0%	99.8%	95.3%	70.3%	88.9%
전년 대비	발생	4.7 ↓	1.8 ↑	20.1 ↓	4.7 ↓	3.0 ↓	6.1 ↓
	검거	2.2 ↓	0.9 ↑	19.4 ↓	5.5 ↓	2.0 ↑	4.4 ↓
	검거율	2.1 ↑	0.9 ↓	0.8 ↑	0.8 ↓	3.4 ↑	1.6 ↑

□ 성과분석

①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악성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죄수익 적극 보전

※ △10대 악성사기 42,211명 검거(6%↑)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 8,156억(159%↑) 보전

- 마약 제조·유통·공급 등 조직적 범죄 상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단속 및 형사활동 강화로 마약 확산 분위기 제압

※ △전체 마약사범 13,512명 중 공급사범 5,405명(40%) 검거 △클럽 주변 마약범죄 437명 검거(134%↑)

- 홀덤펍 등 신종 도박범죄에 대한 행정사범 조치 등 전방위적 대응과 함께,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 검거 및 사이트 폐쇄 등 도박범죄 척결 추진

▶도박개장·상습 도박행위자 등 4,584명 검거(272.7%↑), 156.8억원 몰수(218.1%↑)

▶사이버도박 △9,971명 검거 △297개 조직 및 581개 도박사이트 폐쇄

②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안정적으로 정착된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취약요소 진단 △질서위반 단속 등 문제해결적·가시적 순찰 강화

※ 2~12월 기동순찰대 일평균 204개소, 1,542명 배치, △수배자 검거 15,935건 △기초 질서위반 단속 121,537건 △형사사건 처리 10,899건 등 업무수행

- 관서별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통해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능·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특별방범대책도 추진

- 범죄예방진단팀(432명)을 활용해 취약장소 대상 방범시설·CPTED사업 등 개선하고, 범죄예방 관리구역 활성화도 추진

※ '24년 범죄예방진단 43,067건(월평균 3,836건) 실시, CPTED사업 1,477건(전년대비 12.6%↑, 방범시설 77,870개 3,423억 원(전년대비 20.1%↑)

- 생활 속 위험요소·치안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 (정신질환자) '23년 대비 △합동대응센터 5→9개소 △권역 응급의료센터 10→11개소
△24시간 정신응급 병상 115→149개소

▶ (주취자) '23년 대비 △응급의료센터 18→19개소 △해소센터 1→2개소

③ 여성·청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고도화

-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임시·잠정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와 함께,
△민간경호 지원 △가해자 위치추적 등 실효적 보호조치로 보복범죄 방지

▶ (현장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 15.6% ↑ △스토킹 잠정조치 15.8% ↑ 증가

▶ (안전조치) △민간경호 156명 지원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106명 등 조치

- 딥페이크 성범죄는 시·도청 전담 수사체계 구축을 통해 수사 전문성 제고,
△위장수사 범위 확대 △딥페이크 탐지 S/W 운영 등 대응체계 고도화

▶ △성인 대상 범죄까지 위장수사 범위 확대(10월)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제도 도입(12월)

▶ △위장수사('21.9월 도입 후 1,526명 검거) △딥페이크 탐지('24.2월 개발 후 286건 탐지)

- SPO의 위기청소년 면담관리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도박·딥페이크 등 다변화되는 신종범죄에 대한 특별예방활동 전개로 소년범죄 예방

※ △범죄소년 7% ↓ △범죄소년 재범율 2.7% ↓ △마약범죄 69.4% ↓ 감소

□ 향후 추진계획

- ('29년 목표치) 치안 인프라 확충 및 예방·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5대 범죄 검거율」의 5년 후 목표치는 최근 5년 간 역대 최고치('24년 81.2%)보다 2.0%p 상승한 83.2%로 설정
- 단시간 해결이 어려운 미흡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 치안 모델을 발굴하고, 「범죄예방 기반 조성법」 등 법제화 노력
-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중독성 범죄와 같이 일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민생범죄 근절

(2) 법질서를 확립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① 기관 신뢰도

□ 성과지표 개요

〈 기관 신뢰도 〉

- 개념 : 정부부처(경찰, 법원, 검찰, 국회, 지자체, 중앙정부 부처) 및 사회기관(의료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의 기관별 신뢰 정도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연 1회 조사
- 조사대상·방법 : 전국 국민 8,000명 대상, 조사원이 방문 면접 조사
 - ※ (문항)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맡은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믿습니까?
①전혀 믿지 않는다 ②별로 믿지 않는다 ③약간 믿는다 ④매우 믿는다
- 측정산식 : 1~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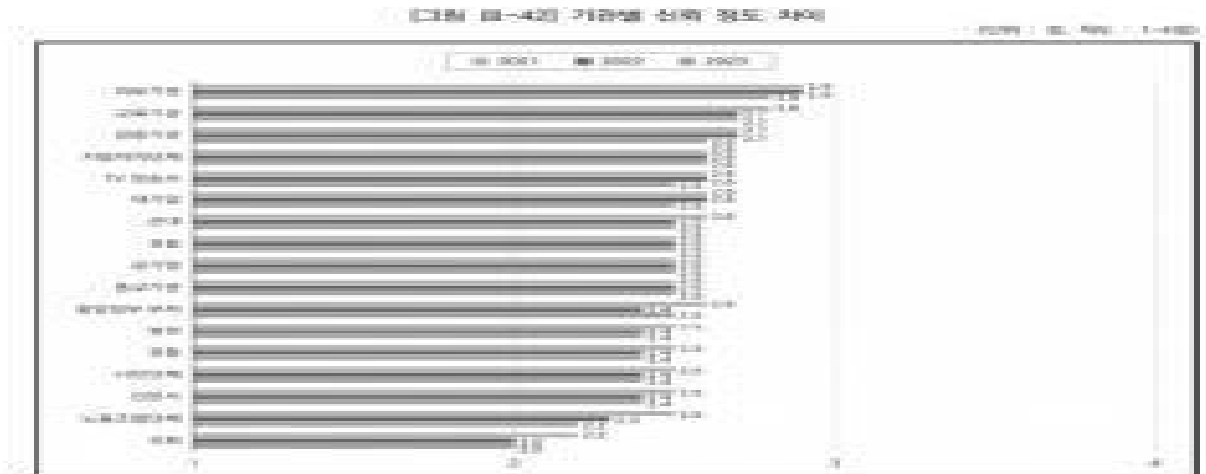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측정 결과는 2월 말에 발표 예정으로 발표 시 내용 수정

- 2023년 조사결과는 2.5점으로 '22년과 동일, 최근 5년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4점 만점 중 2.38점 수준

※ '19년 2.2점 → '20년 2.4점 → '21년 2.5점 → '22년 2.5점 → '23년 2.5점

- 의료(2.9)·교육(2.7)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경찰(2.5)·법원(2.4)·검찰(2.4) 등 권력기관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 신뢰도」 ('24년 세부결과는 2월 말 발표)

□ 성과지표 개요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 경찰〉

- 개념 : 정부부처(경찰, 법원, 검찰, 국회, 지자체, 중앙정부 부처) 및 사회기관(의료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공기업, 대기업 등)의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 정도
- 조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조사대상·방법 : 전국 국민 8,000명 대상, 조사원이 방문 면접 조사
- ※ (문항) 귀하는 다음 기관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찰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약간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 측정산식 : 1~4점까지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도가 높음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측정 결과는 2월 말에 발표 예정으로 발표 시 내용 수정

- 2023년 조사결과는 2.5점으로 '22년과 동일, 최근 5년간 경찰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 중 2.5점 수준
- ※ '19년 2.3점 → '20년 2.6점 → '21년 2.6점 → '22년 2.5점 → '23년 2.5점
- 의료(2.9)·교육(2.9)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경찰(2.5)·법원(2.5)·검찰(2.4) 등 권력기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 성과분석

① 부정부패 등 공공범죄 척결

- 공정한 경쟁과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 및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 등의 부패범죄 등 공공범죄 척결 추진

※ △의료·건설 등 리베이트 562명 송치 △금품수수·권한남용 등 공직부패 382명 송치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특별단속 전개, 공소시효 내 전체 사건 종결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년) 대비, 단속건수 81.9%↑, 단속인원 75.3%↑ 증가

- 지역특성에 따라 시도청별 전담수사 분야 지정(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첩보수집 강화 등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범 검거(전년 대비 19%↑)

- 인터폴 작전, 국제공조 등 활성화로 국외도피사범 647명 송환(47%↑)

※ 韓·佛·인터폴 추적팀(라임사태 피의자 검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텔레그램 마약채널 총책 검거)

② 현장대응 역량 및 경찰수사 책임성 제고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병합수사 △장기사건 관리 등 신속 수사체계 확립, △국수본 수사지휘 강화 △역량 중심 인사체계 구축을 통해 수사 완결성 제고

▶ 사건처리 기간 단축(63.0일→56.2일), 장기사건 보유 비율 감소(7.6%→6.3%) 등 수사 신속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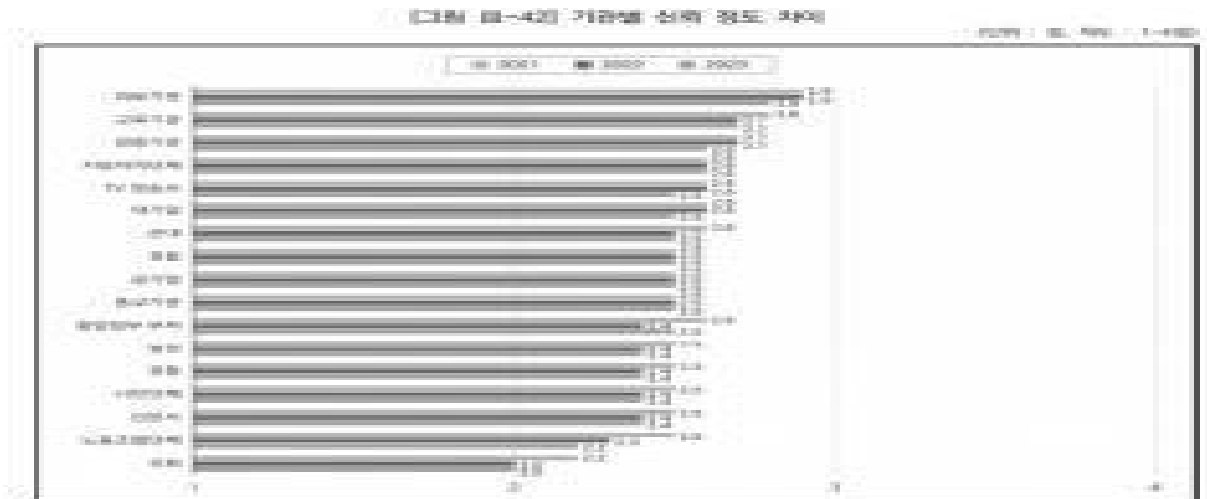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경찰평가> '22년 72.5점 → '23년 78.1점(5.6점↑, 7.7%↑)

- 112신고처리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 및 상황대응 시스템 고도화, 중심지역 관서 등 효율적 인력운영으로 국민 최접점 순찰인력 확보

▶ △112신고자 정밀탐색 △복합측위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 확대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 제도 시행 후 △차량순찰 11.9%↑ △도보순찰 3.0%↑ △방법진단 23.1%↑ 등 예방활동 강화

③ 안전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이륜차 △음주운전 등 고위험·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1.1% 감소(2,551명→2,523명)

※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음주차량 압수(250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등 제재 강화로 음주운전 사망자 21% 감소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보행안전 시설을 재정비하고, 양방향·후면 무인 단속장비를 운영하는 등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대각선 횡단보도(294개) △동시보행신호(332개) 확충 △양방향·후면 무인단속 장비(237대) 운영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13→65개소) △도시부 탄력적 속도제한(131→142개소)
△경부·영동선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24.6월 시행)등으로 국민편의 제고
-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신설('24.3월) △ 실외이동로봇 및 원격운전 안전성 확보 관련 제도개선 연구('24.12월) 등 신산업 적극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29년 목표치) 경찰 신뢰도는 2.2 ~ 2.4점 선을 담보, 국민 신뢰 확보에 주력하며 역대 최고치인 2.5점('23년)을 상회하는 2.6점으로 설정
- 경찰의 공정한 업무수행 인식 2.2 ~ 2.6점 선을 담보, 국민에 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2.7점으로 목표치 설정

(3) 현장의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성과지표

없음 ※ '19.6. 전략목표 성과지표 검토 결과(정부업무평가실) 반영

□ 성과분석

-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체계 재정립
△현장대응력 강화 △미래인재 양성 △교육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추진

▶(교육훈련체계 재정립) 보직인증교육 시행 동료강사제도 개편 등 국관 주도 역량 기반 교육훈련 체계 정착
▶(현장대응력 강화) 물리력 대응훈련·사격훈련 환경 개선 및 강화/ 교수자 역량 강화(수준연차별 위탁교육)
▶(미래인재 양성) 위탁교육 예산확보(57억원), 자체 국외·단기에 청년세대 우대 정책 도입
▶(교육인프라 확충) △제2중앙경찰학교 △제주교육기관 △수도권 현장대응 훈련센터 설립 추진

-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주관, 기능별· 시도경찰청별 의견 수렴을 거쳐 「관서별 보직인사지침 수립계획」 마련·하달
 - 경감급 관리직위 대비 현원이 많아지고, 경찰업무의 전문화가 심화되면서 자격·역량 등에 따른 직위별 선발기준 마련
 - 보직 경쟁이 과열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보직인사의 안정적 운영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보직인사 절차 명문화
 - 보직별 선호·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기피·격무부서(직위)에 대한 보직우대 및 선순환 보직경로 설계 제시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보직인사 혁신을 통한 현장 중심 치안 전문가 양성

역량중심 보직인사 체계 확립

공정·투명한 보직인사 절차 마련

보직 선순환 구조 설계

세부 내용	보직별 자격요건 마련	보직인사절차 규정화	선호·기피부서 보직경로 마련
	▶ 직위별 업무역량을 고려한 필수·우대요건, 결격사유 지정 ▶ 경감 관리직위 자격요건 마련 - 계·팀장, 지역관서장 등 ▶ 실무직위 자격요건 마련 - 보직별 또는 필요 부서별 지정	▶ 경찰서 인사위원회 명문화 - 구성, 역할, 절차 등 명시 ▶ 직위공모 등 동료의견을 필수 반영하는 선발절차 규정 ▶ 표준 직위공모 절차 제시	▶ 선호·기피 부서의 구분 ※ 관서 내 의견이 합치되는 경우 선호·기피 부서(보직) 선정 ▶ 선정방식 및 변경 주기 등 ▶ 선호·기피부서를 고려한 선순환 보직경로 설계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찰관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강화, △공상 치료비 현실화 △특수건강검진 확대 △공상휴직 확대(5→8년) 등 제도개선

* 국립묘지법 개정,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관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 부여('25.2월~)

- 비수도권 경찰관 의료지원을 위한 아산경찰병원 건립 추진, 경감 근속승진 확대(40→50%)를 통해 일선의 활력 제고

□ 향후 추진계획

- 교육大개혁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교육·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치안 역량을 한층 높여줄 다양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
- 국민에게 공감 받고 효율적인 치안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효과의 면밀한 분석 및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완성도 높은 정책 수립 필요

(4) 글로벌·과학치안으로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성과지표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률

□ 성과지표 개요

〈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률 〉

- 개념 : 「경찰 미래비전 2050」 내용 중 단기과제 달성률
- 조사기관 : 경찰청
- 조사방법 : 「경찰 미래비전 2050」 이행 점검
- 측정산식 :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과제 개수 ÷ 단기과제 총 개수 × 100

□ '24년 측정결과

- 「경찰 미래비전 2050」 실행과제 중 주요 단기과제를 총 100건 선정해 '24년 37%(37/100건, 年 목표치 37%) 달성, 정상 추진 중
- '28년까지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 △ 국정기조 △ 과학기술 발전 △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치안 대비 및 국민안전 확보

비전 / 경찰의 미래상 / 추진 과제

①비전 :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 세계표준을 선도하는 한국경찰」

②경찰 패러다임 : 경찰 4.0 시대 * 핵심가치: 미래·혁신·신뢰, 운영방식: 선제적·과학적 대응

③경찰의 미래상 : ①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
②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경찰
③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
④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찰
⑤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경찰

④전략방향 및 추진과제

구 분	뉴노멀 치안 선도	조직구조 혁신
전략방향(5)	1. <u>혁신을 선도하는 과학치안</u> 2. <u>약자를 보호하는 안전사회</u> 3. <u>공정하고 차별 없는 신뢰국가</u>	4. <u>최상의 치안역량 확보</u> 5. <u>미래 적응력 제고</u>
도전과제(14)	△경찰관의 신체적·지적능력 보완 △거버넌스적 안전활동 전개 △소통과 갈등조정으로 신뢰사회 구현 등 <u>8개 도전과제</u>	△지적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정책 △도전·창의적인 연구개발 체제 △유연하고 민첩한 미래형 조직개편 등 <u>6개 도전과제</u>
시행과제(29)	△스마트 디바이스 도입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가상사회 대응체계 구축 △연결협업에 기반한 C&D 등 <u>17개 시행과제</u>	△미래형 인재 양성 △치안한류·국제공조 핵심 허브로 도약 △업무중심 인사운영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경찰 미래비전 실현체계 구축 등 <u>12개 시행과제</u>
실행과제(72)	△데이터 행정기반·치안 데이터 댐 구축 △인권 행정체계 구축으로 인권보장 관리역량 강화 등 <u>47개 실행과제</u>	△과학치안 연구개발 생태계 및 거버넌스 기반 조성 △역량 중심의 전략적 미래경찰 인적자원 관리 △치안과학원 확대 개편 등 <u>25개 실행과제</u>

□ 성과분석

① 선도적 미래치안 추진 기반 체계화

- △사무분장 규칙 개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과제 발굴 △전담인력 배치 등 미래치안을 선도하기 위한 방향성 확립

▶ 新 위협에 선제적 대비한 △4대 목표 △5대 전략 △21개 과제로 구성
▶ 제2차 치안 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24~'28)

- 205개 기업 참여, '인터폴 미래치안 회의'등 35개의 동시 행사 개최 등 역대 최대 규모 속에서 역대 최대 금액인 530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

▶ (수출상담회) 해외 22개국(일본·프랑스 등) 및 경찰 장비담당 국·과장(51명) 초청, 이틀간 오프라인 수출상담회 운영을 통해 총 341건, 3,130억 상당의 수출 달성

- R&D 사업을 총괄하며 '과학치안 기반 조성 및 치안역량 강화'에 주력, 국민안전 및 현장 강화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 <도전적 연구개발> 국민안전 및 현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추진

▶ (국민안전)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25~'27) △사이버 추론 기술개발('25~'28) 등
▶ (현장강화) △경찰 작전 능력 향상 기술 개발('25~'28) △움직이는 지구대('25~'29) 등

② 현장에서 체감하는 미래치안 선도

- 데이터 기반 분석 시스템 개발(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개발 3년차) 및 전자지도 상 치안데이터를 다양한 공간 분석기법을 통해 활용하는 지도기반 통합 플랫폼(GeoPros 고도화)

▶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3차년도 개발과제인 ①딥러닝을 통한 족적 감정 기능 개선 ②사건 현장 재구성(3D)을 위한 효율적 입력도구 개발 ③블록체인기반 증거물 이력관리 강화 ④모든 과학수사 데이터 기반, 통합 지능분석 기능 개발 등 3개년 개발 계획 집대성('22~'24년, 65억원)

▶ (GeoPros 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모바일 GeoPros 개발, 우수분석 모델 공유 기능, 다양한 공공데이터 연계(날씨정보, 인구정보 등), 관내 치안 모니터링 대시보드 개발 등 고도화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9년 목표치) 미래치안의 중요성과 미래비전 2050 단기과제 달성을 추이('24년 37%)를 감안, '29년 목표치는 달성률 100%를 목표로 설정
- 중장기적 관점의 미래치안 전략과 기술·장비 R&D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구체화, 경찰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향상